



ISSN 2288-5536

KOREG RESEARCH

제5권 1호 (통권5호)

[기고문] 지역 소기업 · 소상공인의 금융포용 확대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강화 방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연구위원 · 중소기업연구원 김희선 연구위원

[연구논문1]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사연구실 박주완 · 배진성 연구위원

[연구논문2]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례보증의 성과 연구 :
광주 · 충남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사연구실 배진성 · 박주완 연구위원

[기획분석]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및 사업자 대상
햇살론의 사업유형별 보증현황 분석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사연구실 윤혁준 대리

[수상논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효과성 검증 :
금융거래 및 경영개선 정도가 지원제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양우령

목 차

1. [기고문]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포용 확대를 위한 지역신용
보증재단의 역할 강화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연구위원 · 중소기업연구원 김희선 연구위원 7
2. [연구논문 1]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사연구실 박주완·배진성 연구위원 49
3. [연구논문 2]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례보증의 성과 연구 :
광주·충남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사연구실 배진성·박주완 연구위원 77
4. [기획분석]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및 사업자 대상 햇살론의
사업유형별 보증현황 분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사연구실 윤혁준 대리 103
5. [수상논문]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효과성 검증 :
금융거래 및 경영개선 정도가 지원제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양우령 115
6. [부록1]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통계 147
7. [부록2]지역신용보증재단 본·지점 일람표 165

기고문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포용
확대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강화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김희선 연구위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Korea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포용 확대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강화 방향

(現)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前)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 정 주

(現)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 희 선

I.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에 대한 문제인식이 커지면서, 사회적 약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¹⁾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포용이란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신용대출, 보험 등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효과적(effectively)²⁾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자원이 소외 계층에 적절히 배분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 정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온 세계적인 금융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의 접근성은

- 1) 금융포용의 반대말은 ‘금융배제’ 또는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이다. 금융소외와 금융포용은 어느 한쪽이 정의되면, 다른 한쪽은 여집합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금융소외를 “필요에 적합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권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정의한 바 있다.(자세한 내용은 European(2008)을 참조)
- 2) 여기서 효과적이라는 표현은 금융거래의 가격이 금융서비스의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도 적정한 수익이 확보됨으로써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노형식·이순호(2014)를 참조)

꾸준히 낮아졌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면서, 각국 정부들은 자국 금융시스템의 금융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수단들을 모색해 오고 있다.³⁾

그런데 기존의 금융포용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빈곤 계층, 저신용 상태에 놓인 여성이나 특정 지역 거주 인구집단 등에 속한 ‘개인’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공 확대라는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중소기업’이 금융포용의 대상으로 보다 분명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⁴⁾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소기업·소상공인’(micro-enterprises)에 대한 금융포용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포용정책은 그 대상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이나 저소득·저신용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 금융지원정책’과는 차별화된 관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금융서비스 이용주체로서의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이면서 ‘개인’으로서의 자격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금융포용정책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서민금융지원정책’의 두 가지 정책 범주와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결국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포용정책은 기존의 이 두 정책범주와 완전히 구분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이 두 개의 정책영역⁵⁾ 사이에서, 소기

3) 가령 2010년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을 발족하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를 담은 「금융포용 액션플랜」을 처음 마련한 바 있음. 2013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회의와 2016년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금융포용은 중요한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2017년 7월에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서는 다시 중소기업-금융규제-금융소비자보호-결제시스템 등 4개 분야에 대한 9대 추진과제와 디지털 화에 따른 혁신적 접근 등 5개 공통과제를 담은 「2017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이 발표되었음.(기획재정부(2017.8.8.) 등을 참조)

4) 가령 호주 외교부 산하 호주국제개발기구(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일명'AusAID')의 후원으로 2008년에 처음 설립된 글로벌 금융정책네트워크인 금융포용연맹(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 일명'AFI')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포용을 구체적인 정책 영역(policy area)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워킹그룹을 형성한 것은 2013년부터이다.(자세한 내용은 AFI 홈페이지(<http://www.afi-global.org/>)의 내용을 참조)

5)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은“금융시장 내 존재하는 보수적인 여신취급 관행 속에서 약한 자본력 및 담보력으로 인해 성장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즉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은 세부

업·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정책대상 집단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해 목표와 수단, 지원대상이 융통성 있게 설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이처럼 아직까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포용 문제와 관련해, 국내에서 이들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자본력과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서비스 활용은 주로 ‘대출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출 채널은 국가별로 크게 정책기관이 제공하는 ‘신용보증’(credit guarantee)과 미소금융기관에 의한 ‘미소금융’(micro-finance)이라는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양자 간 비중은 개별 국가들의 금융시스템이 가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가능성이 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이용 가능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형성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금융공급채널의 등장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또한 역할 수행방식에 있어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고에서는 최근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 변화의 특징을 진단하고, 그 속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기구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다소 달라지기는 하지만 주로 그 목적이 ‘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설정되고, 지원 대상 역시 ‘지원을 통해 향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되며, 동원되는 정책수단은 주로 모험성 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서민금융지원정책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저소득·저신용 가계 또는 개인에 대한 배려적 차원에서 수립되고 집행되는 금융지원정책”이다. 서민금융지원정책의 목적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일부 계층에 대한 금융소외 현상을 완화하는 것에 있으며, 그 대상이 ‘서민’이라고 하는 비교적 추상적인 집단으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동원되는 정책수단 역시 금융공급 이외에도 신용회복, 재기지원 등 배려대상의 사회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하의 논의는 크게 다음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우선, 국내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이 지난 20여 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달라지고 있는 국내 서민금융지원정책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구조와 내용, ICT 기술발전이라고 하는 경향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현상,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경험하고 있는 금융접근성 측면에서의 변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설명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최근의 변화 속에서 신용보증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금융지원기능을 수행해 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어떠한 방향으로 그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 볼 것이다.

II. 국내 서민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와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포용성 변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포용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접근성 측면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들 중 상당수가 저신용 또는 담보부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서민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참고로 서민금융시장이라는 개념은 명확한 것은 아니나, 통상 저소득 등을 이유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는 개인 또는 사업자(일명 ‘서민’⁶⁾)를 대상으로

6) 서민에 대한 개념 역시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서민을 “신용위험(credit risk)이 높아 자신의 신용만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특히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계층, 즉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s)에 직면해 있는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창균·허석균(2016.6.) 참조)

신용대출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며, 통상 소비자대출시장(consumer loan market)의 한 부분으로 이해된다.⁷⁾ 그리고 본 논고의 주된 논의 대상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역시 이러한 서민금융시장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국내 서민금융시장이 최근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전과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변화의 방향 역시 쉽게 예단하기 쉽지 않은 속도와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서민금융시장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된 뒤, 동 시장의 환경변화를 크게 ① 서민과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축소, ② 그에 따른 정책성 금융지원의 확대, ③ ICT 기술발전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 채널의 대두 및 확산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이 세 가지 변화 흐름 속에서 다시 소기업·소상공인 입장에서의 금융여건 변화를 ① 정책성 금융의 공급주체 다변화, ②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상 금융공급 확대, ③ P2P 대출 등 새로운 금융공급채널의 등장이라는 3가지 흐름으로 구분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내 서민금융시장의 환경 변화

(1)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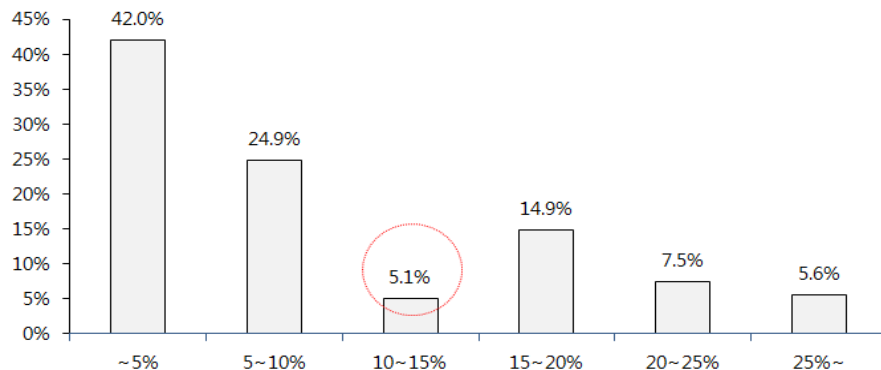
국내 금융시장 환경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큰 구조적 변화를 경험했는데, 외환위기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던 금융자유화의 흐름 속에 발생했고, 그 이후에 오히려 금융자유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계기로 작용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자유화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7) 박창균·허석균(2016.6.) 참조

다만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실은, 금융시장 내에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서민금융시장의 자율적 금융공급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은행 중심이라는 우리 금융시장의 구조적 특징,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관리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규모가 커진 시중 은행들이 금리경쟁력을 앞세워 지역 신용기반을 잠식했고, 그 과정에서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들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면서,⁸⁾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제도권 금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창구의 기능이 약화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⁹⁾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서민금융시장은 우량 담보 또는 신용을 가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권 시장과, 제도권 시장에서의 접근이 곤란한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지불하고 금융을 이용하는 비제도권 시장(일명 ‘대부업 시장’)으로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림 1> 금리구간별 가계신용 대출잔액 분포



자료: 한국은행(2015.12.)에서 인용

8) 가령 199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상호저축은행은 231개에서 105개, 신용협동조합은 1,666개에서 982개, 새마을금고는 2,743개에서 1,501개로 각각 축소되었다.(유정완(2012) 참조)

9)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당국의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지역 제한과 BIS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서민금융기관들이 지점 수 확장을 통한 수신기반 확충 등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효율성과 수익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저신용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역량을 축적하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정책성 서민금융 지원의 확대

이처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시장 자율의 금융공급이 제약되면서,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지원정책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이 크게 다양해지고, 지원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전의 정부 정책이 단순히 서민금융기관들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적인 금융 공급을 유도하거나, 폐해가 커지고 있던 대부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정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령 금융위기 직전에 시작된 ‘미소금융’ 외에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의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의 도입은 그 동안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저소득·저신용 개인들의 금융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표 1> 금융위기 전후 새로 도입된 주요 서민금융지원제도 개관(2016년도 말 기준)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출시시기	2009.12.	2010.7.	2010.11.	2008.12.
재원	휴먼예금, 은행·기업·일반기부금	복권기금, 서민금융기관 출연금	은행 자체재원	국민행복기금 자체재원
지원대상	6~10등급/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6-10등급)		
이자율	연 2~4.5%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6-10등급)		

<표 계속>

10) 특히 2016년 9월부터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개별 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던 서민금융지원제도들을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이 공식 출범함으로써, 기존 금융소외계층의 입장에서는 금융 공급 외에도, 채무조정, 취업정보, 금융교육, 기타 복지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참고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면서 서민금융 관련 서비스를 전국에 산재한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대출한도	- 운영/시설: 2천만원 - 창업: 7천만원 - 임대주택보증: 2천만원 - 취업송공: 3백만원 - 교육비: 5백만원 - 긴급생계: 1천만원 - 청년햇살론: 12백만원	[근로자] - 생계: 15백만원 - 대환: 3천만원 [사업자] - 창업: 5천만원 - 운영: 2천만원 - 대환: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취급 실적	금액 2.1조원	10.8조원	11.7조원	2.6조원
건수	24만건	120만건	114만건	23만건

자료: 관계기관 합동(2017.3.)에서 인용

한편 이러한 서민금융지원정책의 확대 외에도,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그간 심화되어 온 국내 서민금융시장의 ‘단층적 분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사잇돌대출’의 도입이다. 사잇돌대출은 정부 주도로 2016년 7월에 처음 출시된 ‘중금리’ 대출상품인데, (주)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그 동안 시중 은행 이용이 제약되어 왔던 CB 4-8등급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6-18%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¹¹⁾ 그런데 사잇돌대출의 도입 시점을 전후해 각 금융권에서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조치에 부응, 자체적인 중금리 대출상품을 본격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하면서,¹²⁾ 그 동안 문제로 제기되었던 금리단층현상이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¹³⁾

11)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사잇돌대출 이용자의 신용등급은 시중은행의 경우 4-6 등급, 저축은행의 경우 6-8등급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금리의 경우 시중은행의 경우 6-9%, 저축은행의 경우 14-18%대의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금융위원회(2017.5.) 참조)

12) 가령 국내 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6월에 금융위원회는 업무의 대부분을 무인자동화기기(ATM)나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수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direct bank)의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은행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모바일전문은행인 ‘위비뱅크’를 출범시키는 한편, 대표상품으로 서울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상품인 ‘위비모바일대출’을 출시해 단기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몰이에 성공한 바 있다.(아시아경제, [모바일뱅크 잡아라] ‘위비뱅크’ 중금리 모바일대출 승부수 통했다“, 2016.9.22. 참조)

13) 다만 정부의 이러한 중금리시장 활성화 유도 과정에서 아직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충분한 신용평가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존 금융기관들이 연체율 상승 등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표 2> 사잇돌대출 상품 내용 및 취급실적

구분	내용
대출대상	- 은행권 사잇돌 대출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로 연 근로소득 2천만원 이상 ▶ 1년 이상 사업소득자로 연 사업소득 1,200만원 이상 ▶ 1회 이상 연금수령자로 연 연금수령액 1,200만원 이상
	-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 재직기간 5개월 이상 근로소득자로 연 근로소득 1.5천만원 이상 ▶ 6개월 이상 사업소득자로 연 사업소득 800만원 이상 ▶ 1회 이상 연금수령자로 연금수령액 800만원 이상
대출한도	- 은행권 사잇돌 대출: 1인당 최대 2천만원 -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1인당 최대 1천만원
대출기간	-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금리	- 은행권 사잇돌 대출: 8% 내외(보험료(평균 2.8%) 포함) -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15% 내외(보험료(평균 5.2%) 포함)
취급실적 (2017.4까지)	- 총 63,578건, 6,472억원 ▶ 9개 시중은행 및 4개 지방은행: 4,021억원(일평균 18.1억원, 총 35,994건) ▶ 38개 저축은행: 2,451억원(일평균 13.8억원, 총 27,584건)

자료: 금융위원회(2016.8.), 금융위원회(2017.5.) 등 자료를 참조해 정리

(3) ICT 기술 발전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 채널과 기법의 등장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시장실패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는 별개로, 2000년대 중반부터 ICT 및 모바일 기술 발전과 맞물려 새로운 금융 채널들이 등장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 현상은 ‘핀테크’(Fintech)¹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는 이미 최근에 정책적 관심이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금융부문에서의 전조적 현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은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중금리 대출 취급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NEWS1, “중금리대출? 2년전 기존 은행은 실패했다”, 2017.4.18. 등 참조)

14) 금융을 의미하는 finance와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로,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ICT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핀테크 현상과 관련해 기존 금융기관들이 금융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방식 그리고 공급 절차에 있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령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거래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펀딩의 경우, 이미 해외에서는 기존 자본시장거래에 적용되는 규제들이 완화되어 적용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들의 초기자본 조달에 있어 편리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¹⁵⁾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¹⁶⁾

또한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과 모바일의 연결환경을 기반으로 ‘빅 데이터’라는 데이터 기반이 형성되고, 이것이 통계분석기술·인공지능기술 등과 결합하면서, 자산관리, 투자, 생체인식을 활용한 본인인증, 대출심사 및 사기탐지 등의 분야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¹⁷⁾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금융소비자들의

-
- 15) 1997년 영국의 록그룹인 Marillion이 미국 투어에 사용할 자금(6만 달러)을 모금한 사건이 최초의 클라우드펀딩의 사례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10년 간 웹·모바일 서비스의 진화와 함께 클라우드펀딩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특히 2009년 미국의 대표적인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인 Kickstarter의 등장으로 SNS를 활용한 클라우드펀딩의 개념이 체계화 되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들의 급격한 대출 축소에 따라 신생·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소외현상이 심화되었고, 그 와중에 클라우드펀딩이 대안적 기업금융 방식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신생 창업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일명 「JOBS Act」에 서명하였는데, 동 법안에 초기 기업들의 금융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클라우드펀딩 법제화의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클라우드펀딩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클라우드펀딩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2010년에 전 세계적으로 8억 달러 수준이었던 펀딩시장 규모가, 2015년에는 344억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하였다.(김진우(2016.5.) 참조)
- 16)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클라우드펀딩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2013년에 전체 거래규모가 36억원 정도였던 것이, 2016년에는 6,469억원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김정주(2017.7.31.) 참고)
- 17) 가령 KEB하나은행의 경우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투자와 협업해 로봇이 고객의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로보어드바이저(사이버PB)를 도입하였다.(머니S, “시중은행 핀테크, 어디까지 왔니”, 2016.2.11.) 또한 신한은행은 고객이 거래처에 대해 모바일로 자금을 청구하고 수납할 수 있는 신한S-BillPay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IBK기업은행 역시 회원가입 및 계좌등록을 하면 모든 은행 계좌 잔액, 입출금 거래 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와 카드매출 내역, 카드사 입금예정액, 부가세 환급 예상금액 등 경비내용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안내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경영비서‘IBK모바일 자금관리’앱을 시중에 출시한 바 있다.(오마이머니, “모바일 대출 뿐 아니라 회계 서비스까지...기업고객 전용 핀테크 이용해 보세요”, 2017.3.11.)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direct bank)을 도입했는데,¹⁸⁾ 이 역시 앞서 언급한 ICT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영업점 없이 은행업무의 대부분을 무인자동화 기기(ATM)나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수행하는 은행을 지칭하는데, 최근 생체인식 등 새로운 인증방법들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실명확인에 의한 인증방법을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가능케 하는 배경의 하나로 작용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 동안 금융권에서 개인의 신용도를 결정하기 위해 활용했던 재무정보 외에도, SNS 활동 등 비 재무적 정보를 풍부하게 활용해 특정 개인의 특성을 정교하게 판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발전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현상들은 궁극적으로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포용하기 어려웠던 금융사각지대를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⁹⁾

2. 국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여건 변화

앞서 언급한 서민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는 상당수가 서민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국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조달 여건 역시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²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정책성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이

18) 인터넷전문은행은 2000년대 초반과 중반에 각각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은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당시의 금융규제와의 상충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19) 박재석 외(2016) 참조

20) 기존의 연구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은 서민금융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서민금융지원이 주로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그 주된 대상이 대부업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금융에 대한 규제업무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참고로 기존의 중소기업청은 2017년 7월 26일부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개편되었다.) 그런데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상당수가 개인 자격으로 서민금융시장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지원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제도권 금융기관에의 접근 가능성은 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공적 신용보증이나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책자금의 이용가능성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²¹⁾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당국의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이용 대상도 확대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성 역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IC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서민금융시장의 구조 변화 역시 전통적인 금융소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3) 정책성 금융 공급주체의 다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지원이 확대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성 금융의 공급주체가 이전에 비해 다변화되었다. 참고로 국내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되는 ‘정책자금’, ②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③ 각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공급하는 ‘육성자금’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8년 3월에 금융기관 휴면예금·보험금 등을 재원으로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미소금융’, 그리고 2010년 7월에 다시 서민금융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서민에 대출을 실행하는 ‘햇살론’이 각각 도입되었고, 동 대출 프로그램들에서 창업·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운영자금 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4년 7월에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기존에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분산되어 공급되던 서민금융을 통합해 공급하는

21)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을 공식화했고, 실제로 2016년 9월에 기존 4대 서민금융 상품과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기능이 합쳐진 서민금융진흥원이 발족되었다.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으로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의 전 기능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기능이 교육비·긴급 생계자금·임차보증금 대출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들 기관의 지역조직 역시 소비자가 모든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거점센터’로 재정비됨으로써, 기존 서민금융지원정책 수행방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고 고객 접점 또한 확대되었다. 아래의 <표 3>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주요 상품들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3>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서민금융 상품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생계 지원	햇살론 생계 자금	- 아래 1개 이상 해당자 ①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자 ②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자 ③ 상기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보증신 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대출한도: 신용등급에 따라 6 백만원에서 최대 1.5천만원까 지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7.27%(상호금융), 9.07%(저축은행) 이내
	햇살론 긴급 생계 자금	- 햇살론 대출 후 12개월 이상 우수거래자	- 대출한도: 우수거래기간에 따 라 1년부터 최대 4년까지 - 대출기간: 5년 이내(1년 거치) - 대출금리: 7.27%(상호금융), 9.07%(저축은행) 이내
	대학생 · 청년	-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대학생 및 청년 중 아래 1개 이상 해당자 ① 신용등급 7등급 이하 ②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대상자	- 대출한도: 8백만원(연 최대 3백 만원) - 대출기간: 5년 이내(최대 4년 거치) - 대출금리: 4.5%
	취업 성공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자로 서 아래 1개 이상에 해당 ① 신용등급 7등급 이하 ②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대상자	- 대출한도: 3백만원 - 대출기간: 최대 3년 - 대출금리: 5.5%

<표 계속>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생계 지원	교육비	-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래 1개 이상 해당자 ① 신용등급 7등급 이하 ②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대상자	- 대출한도: 5백만원(연 최대 3백만원) - 대출기간: 5년 이내(최대 1년 거치) - 대출금리: 4.5%
	장애인 자립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아래 1개 이상 해당자 ① 신용등급 7등급 이하 ②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대상자	- 대출한도: 1.2천만원 - 대출기간: 5년 이내(최대 1년 거치) - 대출금리: 3%
주거 지원	임대주 택보 증금	- LH공사 또는 지역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예정) 자로 아래 1개 이상 해당자 ① 신용등급 7등급 이하 ②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대상자	- 대출한도: 2천만원 - 대출기간: 2년(연장가능) - 대출금리: 2.5%
저금 리 전환 지원	바꿔 드림론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② 연소득 4천만원(근로자), 4.5천만원(영세자영업자) 이하 ③ 20% 이상의 고금리 6개월 이상 정상상환	- 대출한도: 3천만원 - 대출기간: 최장 5-6년 - 대출금리: 6.5-10.5%
	햇살론 대환 대출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연소득 3천만원 이하 ② 개인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③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이율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 상환중이며, 소득대비 부채상환액의 비중이 40%를 초과	- 대출한도: 3천만원 - 대출기간: 5년 이내 - 대출금리: 7.27%(상호금융), 9.07%(저축은행) 이내
민간 복지 사업	창업	- 해피월드복지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을 통해 아래 해당자에게 간접지원 ①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북한이탈주민 등	- 대출한도: 5천만원 - 대출금리: 6.8% 이하 - 대출기간: 최대 5년

<표 계속>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민간 복지 사업	신용 회복	-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등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후, 미납 없이 9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 또는 완료한 자	- 대출한도: 1.5천만원 - 대출금리: 4% 이하 - 대출기간: 최대 5년
	사회적 기업 지원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eg. 열매나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신나는조합, 함께일하는재단 등) 사회적기업의 운영자금을 대출형태로 지원	- 대출한도: 1억원 - 대출금리: 3.9% -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타 지원 사업	미소 드림 적금	- 미소금융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 자유적립식 적금 - 가입금액: 월 최대 10만원 - 가입기간: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 금리: 연 3.6-4.0%
	소액 보험	①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②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지 만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가구의 가장과 그 청소년 자녀 ③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④ 사업수행기관(지역법인,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수혜자	-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발굴한 수혜대상에 대해 보험 제공 - 보험종류는 다음의 5가지 ① 저소득층 아동보험 - 보장성보험, 3년만기 ② 저소득층 가장보험 - 단체보험, 3년 만기 ③ 장애인 복지시설 보험 - 패키지보험, 1년 단위 갱신 ④ 지역아동센터 보험 - 패키지보험, 1년 단위 갱신 ⑤ 단체신용상해보험 - 신용상해보험
채무조정 지원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협약 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 30-60%까지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토록 상환기간을 조정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및 햇살론 홈페이지 자료 요약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외에도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지원 확대 조치에 부응해 민간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서민금융상품을 개발·출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2009년 3월에 처음 도입된 ‘희망홀씨대출’이다. 이 상품은 은행권이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정책에 부응하고자, 자체재원을 바탕으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순수 ‘신용대출’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부 대출’ 형태로 출시한

상품으로, 2010년 7월 ‘햇살론’ 출시 이후 고객저변 확대를 위해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해 ‘새희망홀씨대출’이라는 명칭으로 재출시 되었다. 또한 금융위원회 주도로 민간 금융기관들이 도입한 이러한 개인 대상 서민금융상품 외에도, 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토대로 장기대출·지분투자·경영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형 금융’을 도입했는데,²²⁾ 동 상품은 본래 제조업 및 정보통신기술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을 대출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6년 4월에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취급을 독려하면서 최근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²³⁾

아울러 앞서 언급한 사잇돌대출과 관련해, 그 동안 서민금융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주)서울보증보험이 보증기관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중금리 대출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사잇돌대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참고로 (주)서울보증보험은 국내 유일의 민간 보증보험회사로, 국내 보증보험시장 내에서 준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 기관은 사잇돌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²⁴⁾ 서민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들²⁵⁾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였고, 금융위원회의 중금리 시장 활성화 노력이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²⁶⁾ 앞으로 (주)서울보증보험의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2) 금융감독원(2014.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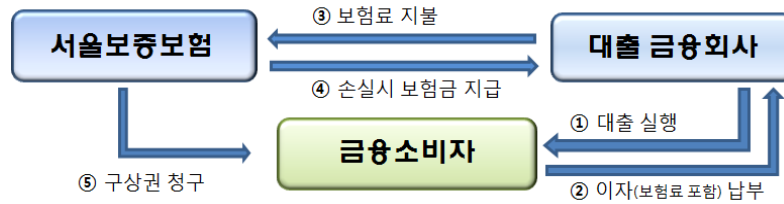
23) 금융감독원(2017.4.) 참고

24) 사잇돌대출에서는 (주)서울보증보험이 대출손실의 100%를 부담하되, 지급보험금이 보험료의 150%를 초과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금융위원회(2016.6.) 참조)

25) 2017년 6월말 현재 사잇돌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9개 시중은행과 4개 지방은행, 30개 저축은행, 그리고 전국 3,200여개 상호금융기관(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으로 대부분의 여수신 취급 기관들이 포함된다.(금융위원회(2016.6.), 금융위원회(2017.6.) 참조)

26) 금융위원회는 2016년에 은행권과 저축은행권에서 각각 취급하는 사잇돌대출Ⅰ과 사잇돌대출Ⅱ를 각각 출시한데 이어, 2017년 6월에는 상호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호금융 사잇돌대출’을, 7월에는 다시 25개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출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2017.6.), 금융위원회(2017.7.)를 참조)

<그림 2> 사잇돌대출의 운영 구조



자료: 금융위원회(2016.6.)에서 인용

(2)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권의 소액대출 확대 경쟁 심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성 지원이 확대되고, 지원 주체 역시 다변화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기존 금융기관들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 대출 역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소기업·소상공인 중 비교적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높은 전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 대출을 소호(SOHO)²⁷⁾ 대출이라고 부르는데, 2000년대 후반 이후 소호대출이 급속히 증가해,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KB, KEB, 신한, 우리의 4개 은행이 취급한 소호대출의 잔액만 162조원에 달한다.²⁸⁾

이처럼 소호대출이 증가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 들어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심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²⁹⁾ 즉 소호대출이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있음으로 해서, 금융권이 실질적으로 가계대출로 볼 수 있으면서도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소호대출로 수익원을 다변화한 것이 소호대출 증가의 1차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조선·해운 등 일부 업종에서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으로

27) SOHO는 Small Office Home Office의 약자로, 통상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를 지칭하나,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마케팅 또는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매출액이나 자산규모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어, 소호대출의 대상 범위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

28) 더벨, “은행권, ‘과속’ 소호대출에 제동 거나”, 2017.7.7.

29) 이데일리, “국민은행 소호대출 드라이브 건다”, 2005.10.10., 서정호(2011.4.) 등 참조

바뀐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호대출은 전문직 또는 신용도가 높은 체인점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것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경기민감 업종인 숙박업, 음식업 등으로도 대상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³⁰⁾ 다만 현재 소호대출 중 주택 등 담보나 보증부 대출의 비중이 전체의 약 70-80% 정도이고, 대출만기 역시 대부분 1년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 지금의 소호대출 확대 경향이 금융기관들의 충분한 신용평가 역량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대한 반사적 대응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3) 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P2P대출 시장 확대

정책성 금융지원과 금융기관들의 대출경쟁 확대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ICT 기술 발전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채널의 등장이 소기업 · 소상공인들의 금융조달 기회 확대에 이어지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인 P2P대출인데,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는 없으면서, 제2금융권의 고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소기업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P2P 대출상품이 최근 크게 확산되고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 P2P 중개플랫폼도 등장하고 있다.³¹⁾ 그런데 이러한 P2P 대출상품의 증가는 POS 매출데이터, 통장, 카드내역, 국세청 세금 신고자료, SNS 활동 내역 등을 토대로 한 새로운 신용평가방식의 활용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이 크다.³²⁾ 아울러 기존 금융권의 대출상품에 비해

30) 특히 상호금융기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경제, “금감원, 상호금융 자영업자 대출 ‘정조준’”, 2017.6.25. 참조)

31) 한국창업경제신문, “소상공인을 위한 상점 P2P 대출[펀다]”, 2015.10.27.

32) 가령 2015년 3월에 설립된 ‘렌딧’은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시스템인 ‘렌딧CSS(Credit Scoring System)’ 등급을 바탕으로 금리를 정한 다음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 렌딧CSS에서는 신용평가사 신용등급과 대출자 금융기록, 소셜데이터를 종합해 세부적으로 대출자 신용도를 분석하고 평가해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등급은 총 20개로 나뉘며, 렌딧은 10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만 대출을 진행한다. 또한, 나이스신용평가와 사기방지시스템을 공동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Platum, “카테고리로 보는 P2p 금융…분야별 대표기업”, 2016.6.2. 참조)

대출한도와 금리 등의 측면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넓고, 대출과 동시에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P2P 대출 이용 유인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P2P 대출 확대 경향과 더불어, 최근 P2P 중개 플랫폼의 활용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금년 7월에 금융감독원이 소상공인이 발행한 소액 전자어음의 풀(pool)을 구성해 할인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들이 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어음중개 P2P 플랫폼을 처음으로 출범시킨 것이 그 일례라고 볼 수 있다.³³⁾

다만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P2P 대출시장에 대한 지원 조치와 더불어, 필요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가령 금년 2월에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연간 투자한도 설정, 투자금의 별도 관리, 광고 규제와 공시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³⁴⁾ 이는 아직까지 P2P 대출에 대한 관련 법령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자와 중개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해 대출사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⁵⁾

Ⅲ.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포용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역할

1. 국내 신용보증제도 개관

일반적으로 보증이란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증은 크게 일반보증과 어음보증, 신용보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통상 신용보증이란 신용 또는 담보가 부족한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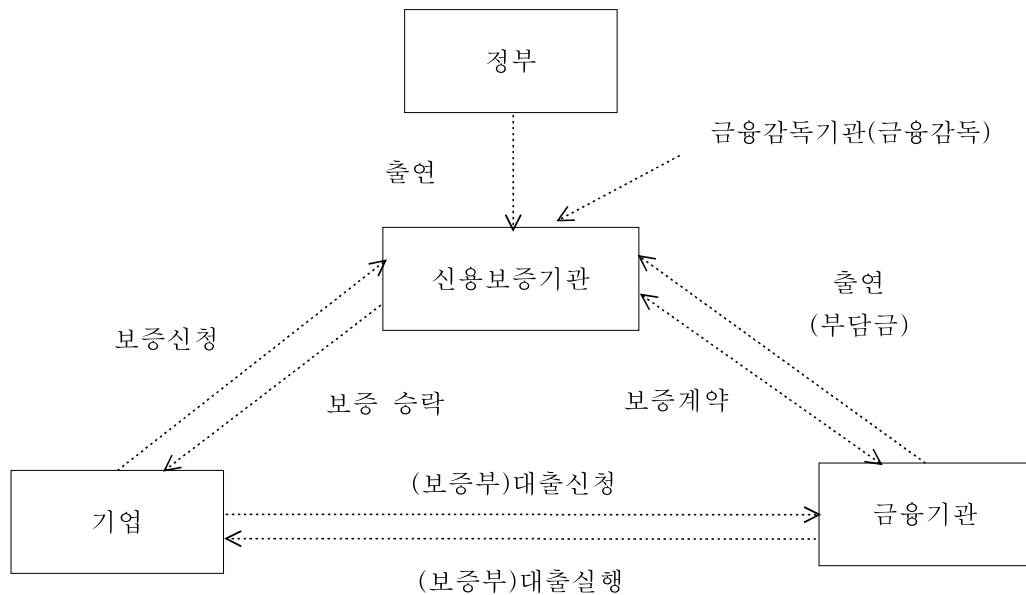
33) 금융감독원(2017.7.) 참조

34) 금융위원회(2017.2.) 참조

35) 중앙일보, “[J Report]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불만 많군요”, 2017.2.27.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지칭한다.³⁶⁾ 국내에서는 정부가 별도 보증기금을 마련해 신용보증을 정책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는 분야별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포함)의 5개 기금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신용보증기금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기금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이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다.

<그림 3> 신용보증제도의 구조



자료: 중소기업청(2012) 등 참조

36)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2&ccfNo=1&cciNo=1&cnpClsNo=1>

<표 4> 국내 주요 신용보증기관 현황 요약

구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적근거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설립연도	1976년	1989년	1996년
설립목적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	-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 보증
보증대상	- 일반 중소기업 - 수출기업 - 창업기업 등	- 기술혁신형 기업(벤처, 이노비즈 기업 등) - 기술창업기업 등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과 개인
업무내용	- 신용보증 - 보증연계투자 - 경영지도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 구상권 행사 -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 유동화회사 보증	- 기술보증 - 신용보증 - 보증연계투자 -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 기술평가 - 구상권 행사 -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 유동화회사 보증	- 신용보증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 경영지도 - 구상권 행사
차별화 된 업무	- SOC 신용보증 - 신용보험	- 기술평가 - 벤처·이노비즈 인증	-
보증방식	- 직접보증 또는 위탁보증	- 직접보증	- 직접보증
보증요율	- 0.5%-3.0% - 대기업: 3.5%	- 0.5%-3.0%	- 0.5%-2.0%
동일기업 보증한도	- 원칙적으로 30억원(신보·기보 합산운영) - 보증심사 등급에 따라 최대 70억원까지 가능	- 산업기술연구조합 대출 보증 등에 대해서는 50억원 - 무역금융 등에 대해서는 70억원까지 가능	- 8억원
기금 조성	- 정부 및 금융기관	- 정부 및 금융기관	-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법정 운용배수	- 20배	- 20배	- 15배

자료: 신종원(2013.12.)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 법령 내용 참조

2. 금융포용수단으로서의 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은 금융시스템이 은행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역 소재 기업 또는 개인과 은행 간의 긴밀한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finance)³⁷⁾의 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특히 신용보증이 가진 이러한 정책적 중요성은 경기변동 상황 하에서 더욱 커지게 되는데, 가령 금융위기 등으로 은행이 대출회수 등 자본력 확충을 위한 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적 신용보증은 급격한 대출회수로 인한 건전한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를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신용보증은 이러한 거시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순기능 외에도, 신용시장 내에서 존재하는 미시적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통상 신용보증은 금융소외 영역으로의 신용확대 기능만을 가지며, 민간의 자율적인 여신기능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내 담보위주의 여신 관행을 수정하고,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심사기능 고도화와 민간 금융기관들과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관계형 금융기능을 복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³⁷⁾ 또한 신용보증이 주거래인 신용대출계약에 부수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보강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여신거래에 부수적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용보증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담보력과 신용이 극히 낮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수단으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참고로 기업 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수의 99.9%를 차지하며, 이들 중소기업 중 소기업·소상공인의 비중은 다시 97.1%에 달한다. 그리고 이 소기업·소상공인 중 종사자 수가 1-4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비중은 89%이다.³⁹⁾ 1-4인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형화된 신용평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의 이용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시장에의 접근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

37)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finance)이란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형성된 장기간의 거래관계로부터 형성·축적된 정성적 정보에 기초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참고로 관계형 금융의 반대말은 거래형 금융(transactions-based finance)으로, 거래형 금융에서는 쉽게 수량화가 가능한 재무정보(정량적 정보)를 통해 금융 공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김정주·김희선(2017.5.) 등을 참조)

38) 이재연(2016.3.) 참조

39) 중소기업중앙회(2016.6.) 참조

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기능적 중요성은 경기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신용보증은 금융기관들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자발적인 금융취급 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의 신용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데이터 공유 등의 전략을 통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성을 시스템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 신용보증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표 5> 국내 중소기업 규모별 현황(2014년도 기준)

(단위 : 개)

구분	전 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기업체 수	3,545,473	3,063,001	3,440,641	101,709	3,542,350	3,123
비중 (전체 대비)	100%	86.4%	97.0%	2.9%	99.9%	0.1%

주) 종사자 수 기준 - 소상공인: 1-4인, 소기업: 1-9인(업종에 따라서는 10-49인),

중기업: 10-199인(업종에 따라서는 50-299인)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6.6.) 자료 가공

IV.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포용 확대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강화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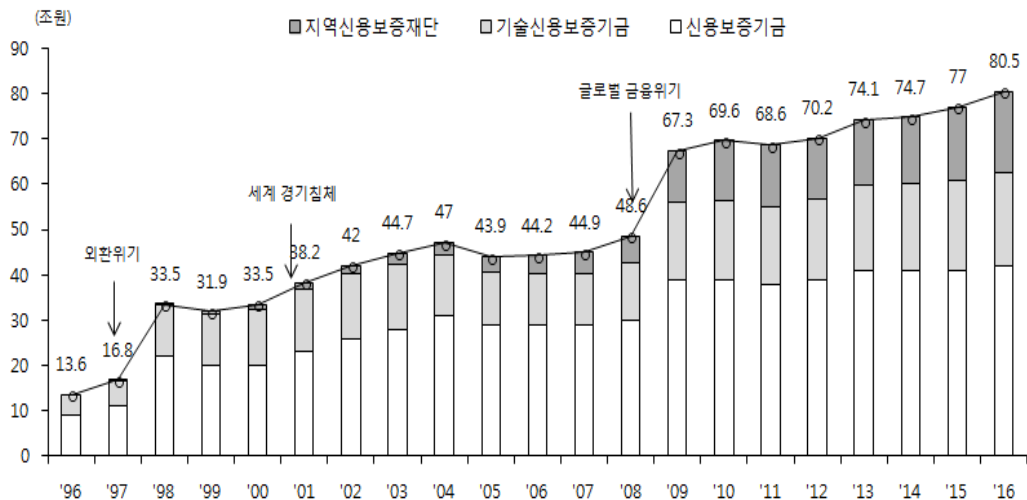
1. 국내 신용보증시장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국내에서 신용보증제도가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신용보증기금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89년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공급을 목적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면서, 국내 신용보증시장이 이원화되었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996년 2월에 지방자치제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기지역에 처음 설립되었다. 이후

각 지역 시도별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면서, 현재 국내의 신용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3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설립 이후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증상품의 개발 및 공급을 통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서민금융기관들의 지역밀착형 금융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확대되면서, 전체 신용보증시장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비중 역시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최근에는 그 규모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참고로 아래의 <그림 4>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출범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신용보증잔액의 증감추이와 더불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각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비중을 함께 도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의 <표 6>는 2016년도 말을 기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업규모별 보증지원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4> 국내 신용보증잔액 연도별 증감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 재구성

<표 6>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업규모별 보증공급 현황(2016년도 말 기준)

(단위: 개, 억원, %)

구 분	총보증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보증
업체수	464,329	1,270	6,555	456,504
비중	100	0.27	1.41	98.31
금액	111,849	2,350	8,934	100,565
비중	100	2.10	7.99	89.91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공 자료 참조

이처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시장 환경 변화로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시장 내 기능적 위치와 비중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견된다.

과거에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채널이 은행, 서민금융기관 그리고 대부업체로 정형화되어 있었고, 이 중 제도권 금융(주로 은행)으로의 접근성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이용 가능 여부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민금융시장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 확대, 기존 금융기관들의 서민금융시장으로의 침투 및 경쟁심화, 새로운 금융공급채널 및 참여주체의 등장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과정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새로운 금융조달채널들로 대체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때문에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제공이라고 하는 비교적 단순한 기능을 수행해 왔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수행방식에 있어서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급변하고 있는 서민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변화하고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민금융시장 내 민간 금융기관들의 자율적 기능과 감독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시장의 실패를 해소할 정도로 충분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독당국의 정책개입에 의해 완전한 시장실패 해소가 가능하지 않고, 민간 금융기관들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금융채널들 또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수요를 충분히 해소시키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⁴⁰⁾ 그리고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점으로부터 전통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능 변화와 역할 강화의 방향성 역시 엿볼 수 있다.

2.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기와 기회요인

앞서 살펴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여건 변화의 흐름은 전통적으로 서민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요성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감독당국이 은행-서민금융기관과 (주)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서민금융시장 내에서의 직접적 개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주)서울보증보험과 보증공급채널이 겹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표 7>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채널별 보증공급 규모(2016년도, 신규 일반보증 공급 기준)

구분	보증공급액(억원)	보증공급건수(건)
시중은행	32,872	117,424
지방은행	7,369	28,216
특수은행	21,867	70,252
지역서민금융기관	1,248	6,461
기타(조합 등)	1	3

주)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시티은행

지방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특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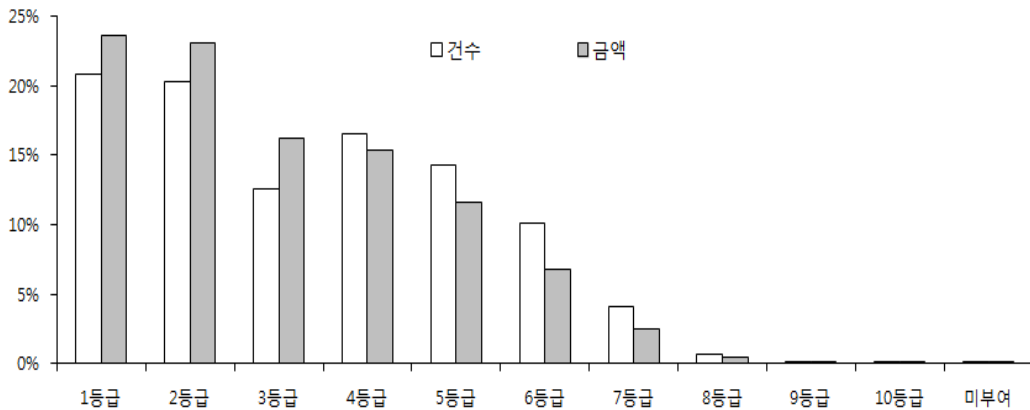
지역서민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역 농·축협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공 자료 가공

40) 이에 대해서는“3. 지역신용보증재단 역할 강화의 필요성과 방향성”부분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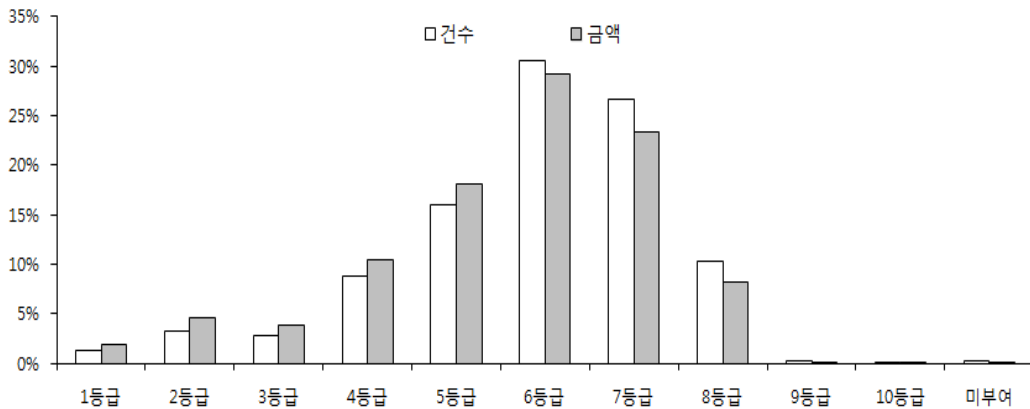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축적되어 온 실무적 경험과 저신용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에 관한 비교적 풍부한 데이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자들의 신용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햇살론 사업자 보증과 여러 특례보증을 중심으로 6등급 이하 중·저신용 차주들에 대한 적지 않은 보증취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신용등급별 보증공급(신규보증액) 비중(2016년도 말, 일반보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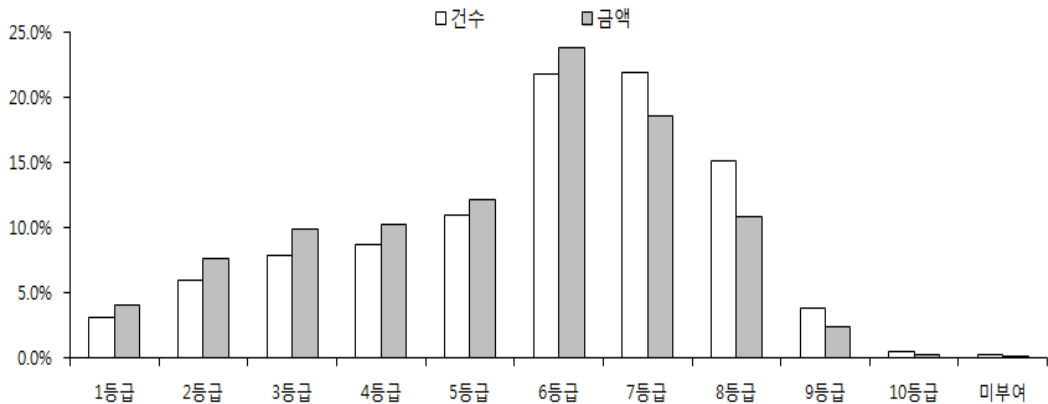
자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제공 자료 가공

<그림 6> 신용등급별 보증공급(신규보증액) 비중(2016년도 말, 햇살론 사업자 보증 기준)



자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제공 자료 가공

<그림 7> 신용등급별 보증공급(신규보증액) 비중(2016년도 말, 각종 특례 보증 기준)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공 자료 가공

이와 더불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금융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대신, 근거 법률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설립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동시에 받는 이원적인 지배구조(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수단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부⁴¹⁾ 및 지자체와 업무 수행에 있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각 지역에 속해 있는 소기업들에 대해 보다 밀착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3. 지역신용보증재단 역할 강화의 필요성과 방향성

이처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변화하는 서민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위기와 더불어 기회요인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기회요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 강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구체적인 방향성과도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41)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17년 7월 26일부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한데, 먼저 국내 금융기관들은 외환위기 이후 담보위주의 여신취급 관행에 익숙해져 왔고, 그로 인해 역량 있는 전문심사인력을 양성하거나 다양한 신용평가기법을 개발하는데 소홀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기존 금융산업이 정부가 마련해 놓은 높은 진입장벽 속에서 안주해 온 것,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금융사고와 그에 따른 감독당국의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로 인해 관계형 금융관행을 정립할 필요성이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크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유동성과 전 정부에서의 규제 완화로 인해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가계대출 확대에 다시 집중함으로써, 중소기업 대출 등 대체적인 수익원 발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했던 측면도 있다. 그 결과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은 저신용 개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충분한 자체 심사역량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사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기술금융’, ‘관계형 금융’ 등⁴²⁾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노력이 아직까지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⁴³⁾

한편 금융위원회 주도로 작년에 도입된 사잇돌대출의 경우 새로이 저신용 개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시장에 참여한 (주)서울보증보험이 보증위험을 충분히 측정·평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주)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하는 보험을 충분한 위험전가장치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⁴⁴⁾ 결국 정부가 현재 서민금융지원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실제 대출창구인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보다 효율성 있는 위험 분산 또는 전가장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42)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에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일명‘기술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TDB(Technology Data Base), TCB(Technology Credit Bureau) 등 관련 시스템 및 제도 구축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는 별도로 2014년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일명‘관계형 금융’의 취급을 독려해 왔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정주(2015) 참조)

43) 조선비즈, “[기술금융 새판 짜자]① 기술금융, 실적 압박에 ‘날림 평가’”, 2017.8.9. 참조

44) 조선비즈, “[금융포커스] 사잇돌대출 출시 1년...‘당국이 시키니까 하죠’”, 2017.7.25. 참조

볼 수 있다.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P2P 중개플랫폼의 경우에도 인공지능·기계학습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저신용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도해 왔으나, 최근 이들 업체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최근의 P2P 대출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⁴⁵⁾ 최근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최근 가입자 수 급증으로 단기간에 자산규모를 확대하는 데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자산운용측면에서 아직까지 주된 고객군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용등급 중간층(주로 4-7등급)에 대한 충분한 심사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⁴⁶⁾

결국 이렇게 본다면 상당기간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업무를 취급해 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은 분명해진다. 즉 아직까지 자율적 기능이 곤란한 ‘서민금융시장’과 ‘소기업·소상공인 대출시장’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여러 참여주체들과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방식을 다각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이들 시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 현상을 최대한 완화시켜주는 것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단순히 신용보증이라는 기능적 한계를 벗어나, 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와의 업무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프로그램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새로운 금융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강화 방안

위의 논의를 기초로 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전문 금융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점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들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5) 이데일리, “부동산 PF대출 쏠림 뚜렷…P2P 연체율 비상등(종합)”, 2017.6.15. 참조

46) 조선닷컴, “인터넷은행 ‘빅데이터 활용 신용평가’ 갈 길이 멀다”, 2016.1.21.

(1) 소기업 · 소상공인 대출시장에서의 저변 확대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공급하고 있는 일반보증상품의 경우 평균 대출금리가 3-4%대로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소기업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 운영자금 대출, 전통시장상인 대출,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 등 직접대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상품의 금리수준은 통상 4-10% 대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상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취급하는 일부 특례보증상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상품에 비교해 대출한도 측면에서 그다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1-2% 대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잇돌대출과 비교해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상품의 금리는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지역신용보증재단 vs 서민금융진흥원 vs 사잇돌대출 금리 수준 비교

지역신용보증재단(일반보증)		사잇돌대출(시중은행)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3-4%	<	6-10%	≤	10% 대 초반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2016.3.), 서민금융진흥원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자료, 금융위원회(2016.11.)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온 · 오프라인 판매창구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상품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 소기업 · 소상공인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⁴⁷⁾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서민금융시장 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용자 저변을 보다 확대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7)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6개 시중은행들(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시티은행)과 4개 특수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의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품이 검색되는 기관은 기업은행, 우리은행 2군데 정도에 불과하다.(검색일자: 2017.8.30.)

(2) 보증공급채널의 다변화

앞서 본문에서 간략히 언급하였지만,⁴⁸⁾ 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채널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 등이 전국적인 지점망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들이 신용보증기금 등 여타 보증기관들과의 업무수행경험을 가지고 있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입장에서는 이들과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사잇돌대출의 판매 채널을 시중은행 외에도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확대시키고 있는가 하면, 최근 서민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중금리시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의 ‘저축은행 사태’⁴⁹⁾ 이후 뚜렷한 비즈니스모델을 마련하지 못한 채, 또다시 부동산 경기 활황세에 힘입어 부동산 PF 대출을 확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⁵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 기반 보증기관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 비춰 지역 서민금융기관들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업구조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동안 시중은행과의 경쟁 속에서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던 서민금융기관들이 소기업·소상공인 대출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과의 적절한 위험분담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제공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8) <표 8> 참조

49) 저축은행 사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저축은행의 주요 수익원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여신이 2008년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거치며 크게 부실해진 것이 원인이 되었으며, 2011년 2월에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처음 지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16년까지 105개였던 저축은행수는 79개까지 줄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캄코에의 매각 등으로 저축은행 전체 자산규모 역시 2011년 말의 70조원에서 2015년 상반기에는 40조원까지 감소하였다.(좀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2.5.) 참조)

50) 세계일보,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확대…부실 우려 없나?”, 2017.2.2.

이와 더불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새로운 금융조달채널로 등장하고 있는 P2P 대출 플랫폼, 인터넷전문은행 등과도 협업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로 현재 P2P 대출은 모집된 자금을 담보로 지방은행 또는 대부업체가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대출기관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초 출범 이후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들과는 차별화된 자산운용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게 될 것인바, 이들이 소기업·소상공인 대출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서민금융시장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주)서울보증보험이나 서민금융진흥원과 비교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현재 (주)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사잇돌대출과 관련해 단순 보증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 역시 대출-채무조정-재활 및 일자리 상담 등으로, ‘개인’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은 창업, 역량 강화, 상권정보제공, 법률서비스 지원, 프랜차이즈화 및 조합화 지원 등 내용 측면에서 대단히 포괄적이며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비금융적 이용 편익을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금융포용의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보증공급제한요소의 완화

그런데 위에서 제시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위에서 제시한 방안들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증공급 구조의 개선과 기본재산의 확충과 같은 기본적인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도 확인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는 달리 지역별로 각각 설립·운영되고 있어 재원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금융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감독범위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영업기반인 ‘보증재원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수 있다.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개별 재단에 대해 다시 재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⁵¹⁾ 일부 지역 재단에서는 정관에서 반드시 중앙회의 재보증을 받아야만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중앙회의 기본재산 크기에 따라 개별 재단의 보증공급 규모가 제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⁵²⁾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주된 지원대상만 다를 뿐 보증공급이라는 기능적 특성이 동일하고,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규모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공급규모에 근접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출연요율은 여타 신용보증기관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8> 신용보증기관별 금융기관 기준 출연요율 비교

구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준 출연요율	0.225%	0.135%	0.020%

자료: 관계 법령 내용 참조

5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만이 재보증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52) 머니투데이, “[단독] 정부지원 자영업자 대출 중단...보증재원 조달‘일파만파’”, 2017.4.28.

신용보증의 기본재산의 확충과 더불어 기본재산이 전제된 보증공급 확대는 신용보증제도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때문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서민금융시장 내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중앙회의 재보증을 받지 않고도 전체 보증의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개별 재단이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기준 출연요율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역할 차별성의 제고

마지막으로 여타 신용보증기관과의 역할 차별화를 위해 각 부처에서 인증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증수요 대상을 발굴하는 방안에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최근 신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지칭하며,⁵³⁾ 2007년에 관련 입법을 통해 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713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⁴⁾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신용도가 낮고, 수익모델도 분명하지 않아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처럼 정부가 특정 정책목적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기업 군 중에서 제도권 금융의 이용가능성에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증수요를 발굴하는 노력을 전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대안 기업들의 경우 보증

53) 사회적 기업은 본래 공익과 관련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나,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부르고 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참조)

5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자료 참조

공급에 따른 리스크가 일반 기업들에 비해 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과의 협업구조 또한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논고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포용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지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강화방향에 대해 논해보고자 하였다. 그 동안 금융포용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저신용 개인의 제도권 금융에의 접근 가능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반면, 개인이면서 동시에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소기업·소상공인이 이용하는 금융서비스는 대부분 영업활동과 관련한 대출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들의 신용을 보강해줌으로써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제도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거나 담보를 가진 경제주체들과 그렇지 못한 주체들의 금융접근성 정도에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부의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ICT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최근의 트렌드는 기존 금융소외영역으로의 신용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 또한 정책성 금융의 이용가능성 확대와 P2P 대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금조달채널의 등장과 같은 금융접근성 측면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업자대출의 확대에 이어지고 있는 경향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속에서 기존에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서민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직접적 개입이 심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저신용 계층에 대한 충분한 자체 심사역량을 보유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이 기존 금융소외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P2P 대출중개업체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감독당국이 (주)서울보증보험의 시장 참여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로부터 그 동안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공급을 해 왔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서민금융시장에 참여코자 하는 주체들과 유기적인 협업구조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가진 거버넌스 측면에서 가진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서민금융지원기관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새로운 지원영역을 발굴해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역할 변화의 과정에서 기존 재보증제도의 개선과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합리화 등 부수적인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령화, 부족한 공적 사회안전망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징 속에서 향후 상당기간 동안 저신용 개인 그리고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한 논의 역시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고가 이러한 논의의 시점(始點)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관계기관 합동,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한도 확대방안」, 발표자료, 2017.3.31.
- 기획재정부, 「G20,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다」, 보도자료, 2017.8.8.
- 김정주, 「관계형 금융 활성화 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이슈와 논점 제 1005호, 국회입법조사처, 2015.6.5.
- _____, 「부동산 관련 클라우드펀딩 거래 확산」, 건설동향브리핑 제620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7.31.
- _____, 김희선, 「서민금융지원 효율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모색」, 중소기업연구원, 2017.5.21.
- 김진우, 「국내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가능성 점검」, 2016.5.
- 금융감독원, 「관계형금융 도입을 통한 새로운 중소기업 대출관행 유도」, 보도자료, 2014.11.17.
- _____,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시장 출범」, 보도자료, 2017.7.19.
- _____, 「국내은행, '16년중 관계형금융 2.3조원 취급」, 보도자료, 2017.4.6.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백서」, 2012.5.
- _____, 「중신용 서민을 위한 '사잇돌' 중금리대출, 7.5일부터 판매」, 보도자료, 2016.6.23.
- _____, 「저축은행 '사잇돌' 중금리대출, 9.6일부터 판매」, 보도자료, 2016.8.29.
- _____, 「안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에서 시작합니다」, 보조자료, 2017.2.27.
- _____, 「17.4월말 사잇돌 대출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 보도자료, 2017.5.26.
- _____, 「'17.6.13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사잇돌 대

- 출 출시」, 보도자료, 2017.6.13.
- _____, 「'17.7.18일부터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이트 대출 출시」, 보도자료, 2017.7.18.
- 노형식·이순호,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금융VIP시리즈, 한국금융연구원, 2014.4.
- 박재석 외, 「핀테크의 발전 배경과 주요 동향」, 정보와통신 제33권 제2호, 한국통신학회, 2016.2.
- 박창균·허석균, 「서민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한국금융학회, 2016.6.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2016.12.7.
- 서정호, 「국내은행의 소호대출 현황과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20권 14호, 한국금융연구원, 2011.4.
- 신용보증재단중앙회·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보증부대출금리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6.3.
- 신종원, 「국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주요 이슈와 해외 운영사례의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3.12.
- 유정완, 「서민금융에 대한 이해」, KB지식비타민 12-95호, 2012.7.19.
- 이재연, 「신용보증제도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지원」, 주간금융브리프 25권 13호, 한국금융연구원, 2016.3.26.
- 중소기업중앙회, 「2016 중소기업 현황」, 2016.6.30.
- 중소기업청,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12.9.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5.12.
- European Commission, Financial Services Provision and Prevention of Financial Exclusion, 2008.

연구논문 1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조사연구실
박주완 연구위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조사연구실
배진성 연구위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Korea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사연구실
박주완(통계학박사), 배진성(경제학박사)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전통적인 로지스틱회귀모형 이외에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구축 시 예측 성능이 가장 좋은 모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로지스틱회귀모형, 의사결정 나무모형, 신경망모형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한 후, 10중첩 교차타당법을 통해 모형을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모형 평가 척도로는 오분류율, G-mean, F1측도와 반응률을 이용하였으며, 최종적인 분석 대상은 15개의 독립변수와 67,308개의 차주이다.

세 가지의 자료와 기법을 조합하여 총 9개의 모형을 구축한 결과, 신용보증재단의 내부 정보와 CB 정보를 모두 활용하고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적용했을 경우 예측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급이 심하게 불균형인 자료인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데이터마이닝 모형 구축 시 예측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소상공인, 데이터마이닝, 신용평가, 교차타당법

I. 서론

경제활동에서 말하는 신용은 과거의 경제활동상태와 현재의 경제능력 등을 살펴보아 미래에 빚을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이명식과 김정인, 2007). 이와 같이 개인이나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 등의 판단 근거가 되는 신용도¹⁾를 측정하기 위해 신용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정보를 조사하여 분석한다(박주완과 송창길, 2015).

신용평가는 다양한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국내의 기관으로는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KCB, S&P, Moodys, Fitch/IBCA, Duff & Phelps 등이 있으며, 이외의 다양한 금융업 관련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평가 대상, 금융 상품과 목적에 따라 자체적인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의 신용평가 결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정확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못할 경우 왜곡된 정보로 인해 시장 실패 또는 잘못된 대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신용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김성환과 김태동, 2014).

과거부터 신용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새로운 모형 개발과 활용 가능한 자료 확장 및 적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모형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회귀모형 이외의 신경망모형(neural network model) 등 다양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²⁾ 모형을 이용한 신용평가 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강신형, 2016). 자료와

-
- 1) 신용도(creditability)란 장래의 어느 시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2) 기계학습은 종종 데이터마이닝과 혼용되고 있는데, 기계학습에 사용하는 분류나 군집 등의 방법을 데이터마이닝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분류나 예측, 군집과 같은 기술, 모델, 알고리즘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컴퓨터과학 관점에서는 기계학습이라 하고, 통계학 관점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이라고 한다(김의중, 2016). 데이터마이닝 관련 서적들을 보면 전통적인 통계 분석 모형인 군집모형, 회귀모형 등과 기계학습 모형으로 알려져 있는 의사결정나무모형, 신경망모형, 랜덤포레스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설명되고 있다.

변수의 활용 측면에서는 재무적 요인 이외에 비재무적 요인의 활용 뿐 아니라 (장원경과 김연용, 2002), 근래에 들어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big data)를 사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실제로 실무에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내외에서 신용평가 시 실제로 기계학습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에서는 Kabbage, Zest Finance, Lending Club 등 주로 P2P 대출업체들이 기계학습 기법들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Zest Finance의 경우 전통적인 신용정보 외에 직장정보, 고정수입, 인터넷 포스팅 내용 등이 포함된 7만개가 넘는 변수를 가진 빅데이터에 10개의 기계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Kabbage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시 기존의 재무적인 자료 이외의 배송, 회계, 인터넷 자료 등을 기계학습 기법에 적용하고 있다 (신윤재, 2016). 국내에서는 2017년도 1월에 신한카드사가 NICE평가정보와 공동으로 신용도 판단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과 중금리 대출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한 신용평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서울경제신문, 2017).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의 사용 제약과 전통적 신용평가 기법의 고착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학습을 적용한 신용평가모형 구축은 여전히 한계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신윤재, 2016).

차주의 우불량을 판별하고 신용도를 예측하기 위한 신용평가모형은 기계학습 관점에서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중에서 분류(classification) 모형이다. 지도학습이란 훈련 자료(training data)로부터 예측이나 분류를 위한 함수를 추정하는 것, 즉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 또는 입력변수(input variable)를 이용하여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또는 목표변수(target variable)의 값을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도학습을 위한 자료에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지도학습 모형으로는 선형회귀모형, 로지스틱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신경망모형, 랜덤포레스트모형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구축 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기법 중 로지스틱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 의사결정나무모형(decision tree model), 신경망모형(neural network model)을 적용하여 예측 성능이 좋은 모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내부 정보, NICE CB 정보와 이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이용한 전체 정보, 세 가지 자료 이용에 대해 구축된 모형의 예측 성능을 확인하여 다양한 자료 이용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자료는 2013년 7월~2016년 12월 신용보증재단의 내부자료(이하 ‘내부 정보’)와 NICE신용평가의 대표자 CB 정보(이하 ‘CB 정보’)이다. 또한 구축된 모형의 비교 및 평가는 오분류율(mis-classification rate), G-mean, F1측도, 반응률(percent of response)을 이용한다. 자료를 분석하고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SAS9.4와 R3.4.1을 이용한다. 이 때 SAS로는 자료의 기초분석 및 데이터 정제(data cleaning) 작업을 수행하고, R은 “glm, rpart, nnet”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세 가지 데이터마이닝 모형을 구축하고 평가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과 모형 평가 방법을 설명하며, III장은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대상, 변수 선정, 모형 구축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IV장에서는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예측 성능을 평가하고, V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과제에 대해 고찰한다.

II. 모형 구축 알고리즘 및 평가 방법

1. 모형 구축 알고리즘

전술하였듯이 본 논문에서 사용할 데이터마이닝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은 로지스틱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신경망모형 세 가지이다. 모형 구축을 위해 사용된 세 가지 모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로지스틱회귀모형은 종속변수 Y_i 가 이진형(binary type) 또는 순서형(ordinal type)인 경우 반응함수 $E(Y_i | \mathbf{x}_i' s)$ 는 $\mathbf{x}_i' s$ 가 증가함에 따라 값이 1로 서서히 수렴하는 모형으로, 종속변수가 1이 될 확률인 $\Pr(Y=1 | \mathbf{x}_i' s)$ 를 예측하는

모형이다. 즉, 로지스틱회귀모형은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의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확률과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귀모형이다. 신용평가모형 등을 구축할 때 로지스틱회귀모형이 많이 선호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모형 구축이 올바르다면 로지스틱회귀모형은 정확성이 우수하고, 둘째 구축 과정이 용이하고 해석하기가 쉬우며, 셋째 과대 적합(over-fitting) 가능성이 적고, 오차를 최소화하는 선형적인 관계를 찾는데 매우 우수한 기법이기 때문이다 (이영섭, 2003). 본 논문에서는 통계프로그램 R에서 “glm 함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glm 함수는 선형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일반선형모형 등의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R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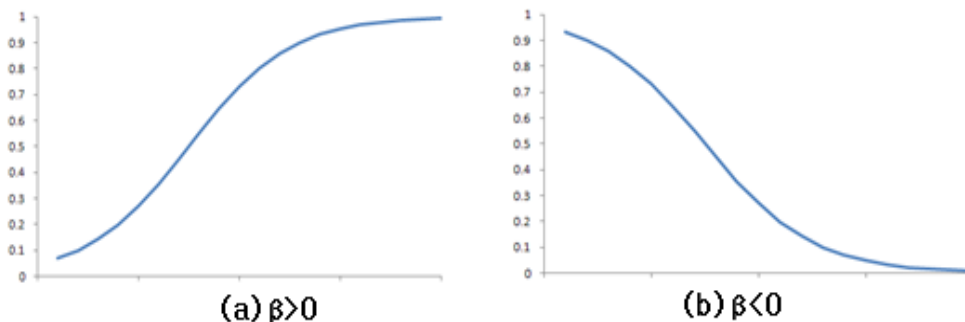
로지스틱회귀모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목표변수의 계급이 0과 1 두 가지 값을 가지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계급이 1인 경우에 목표변수가 1이 될 확률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식(1)과 같다.

$$P(Y_i = 1 | \mathbf{x}_i) = p(\mathbf{x}_i) = \frac{\exp(\boldsymbol{\beta}' \mathbf{x}_i)}{1 + \exp(\boldsymbol{\beta}' \mathbf{x}_i)} \quad (1)$$

, 여기에서 $\boldsymbol{\beta} = (\beta_0, \dots, \beta_{p-1})$ 은 p 차원 벡터로써 모수이고

, $\mathbf{x}_i = (1, x_{1i}, \dots, x_{p-1,i})$ 인 i 번째 관찰자료 벡터

[그림 2-1] 로지스틱회귀모형에 의한 확률 분포



의사결정나무모형은 의사결정 규칙(decision rule)을 나무 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prediction)을 수행하는 분석 방법이다. 모형의 나무 형성 알고리즘은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C4.5(또는 C5.0)가 대표적이다. CART 알고리즘은 1984년 L. Briemen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써, 독립변수의 특성에 따라 지니 지수(gini index)에 의해 이진 분류(binary split)를 수행한다. CHAID는 종속변수가 이산형인 경우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고 연속형인 경우 F-검정을 이용하여 다지 분리(multi-way split)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다. C4.5는 J. Ross Quinlan에 의한 알고리즘으로 엔트로피 지수에 의해 분리가 일어난다. 의사결정나무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분류 규칙을 나무구조의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해가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숫자형이나 범주형 자료를 동시에 다룰 수 있고, 특정 변수의 값이 누락, 즉 결측치가 발생해도 이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훈련용 자료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나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으며, 훈련용 자료에 대해 매우 세밀하게 분류 및 예측을 수행할 경우 과대적합(over-fitting)의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자료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좋지 않을 수 있다(최종후와 진서훈, 2005). 본 논문에서는 통계프로그램인 R에서 “rpar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rpart 라이브러리는 CART 알고리즘을 구현한 패키지이다.

CART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84년에 최초 발표된 CART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실험의 시초가 되고 있다. CART 알고리즘은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로 이루어진 자료에서 독립변수의 특성에 따라 이진 분류(binary split)를 수행하며, 마디의 순수함을 나타내는 지니 지수(Gini index)에 의해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 변수에 의해 집단이 구분되면, 구분된 하나의 집단에서 나머지 집단의 개체가 선택될 확률을 계산하여 집단을 분리하며 집단이 순수할수록 지니 지수의 값과 확률이 작아지게 된다. 다음의 식은 지니 지수이다.

$$\sum_{i=1}^r P(i)(1 - P(i)) \quad (2)$$

, 여기에서 r 은 종속변수의 범주 수

, $P(i)$ 는 주어진 자료 중 i 범주에 분류될 확률

CART는 지니 지수를 가장 작게 해주는 독립변수와 그 변수의 최적 분리를 자식 노드로 선택하는데, 지니 지수의 감소량은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Delta G = G - \frac{n_L}{n} G_L - \frac{n_R}{n} G_R \quad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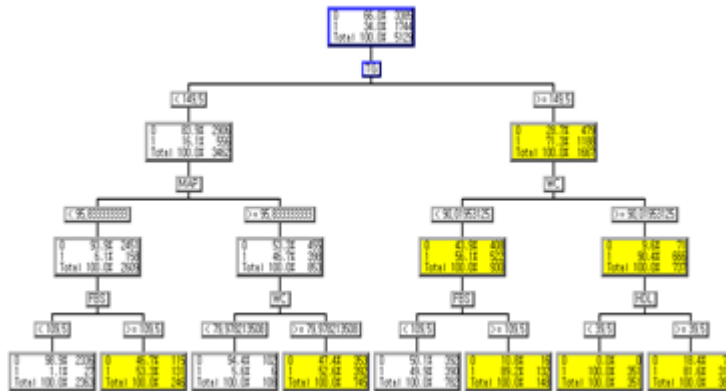
, 여기에서 n 은 부모 노드의 관측치의 수이며

, n_L 과 n_R 은 각각 자식 노드의 수

즉, 자식 노드로 분리 되었을 때 불순도가 가장 작도록 자식 마디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자식 마디에서 불순도의 가중합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다.

$$P(L)G_L + P(R)G_R = \frac{n_L}{n} G_L + \frac{n_R}{n} G_R \quad (4)$$

[그림 2-2] 의사결정나무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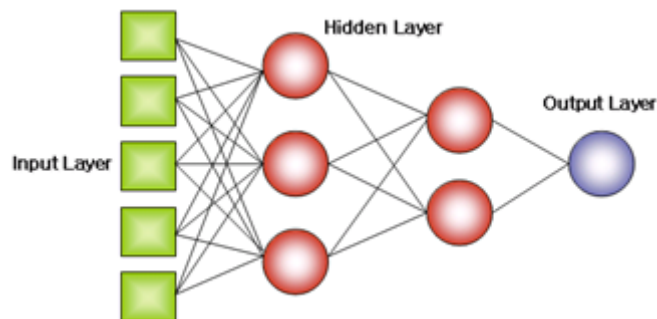


신경망모형은 인간의 뇌 기능에 착안하여 개발된 패턴인식의 한 분야로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는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떠한 통계적인 분포도 가정하고 있지 않다. 다양한 신경망 알고리즘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형은 다층인식자(Multi-Layer Perceptron, MLP) 신경망이다. 다층인식자 신경망은 입력층을 통해 자료를 입력받고, 은닉층에서는 입력층에서 전달되는 변수값들의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을 비선형함수로 처리하여 출력층 또는 다른 은닉층으로 전달하여 최종적으로는 출력층을 통해

예측 결과를 산출한다.

신경망모형의 장점은 자료들 간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찾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를 과대적합(over-fitting)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구축된 모형에 새로운 자료를 적용했을 때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단점은 의사결정나무, 회귀분석 등의 기법에 비해 모형의 결과를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Ripley, 1996). 일반적으로 신경망모형은 은닉층의 개수를 늘릴수록 모형의 예측 성능은 높아지지만, 과도하게 많을 경우 모형 실행 시간이 과다해지고, 다른 자료 적용 시 강건성(robustness)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프로그램 R에서 “nne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nnet 라이브러리에서 신경망의 파라미터(parameter)는 엔트로피(entropy) 또는 오차제곱합(sum of squared error, SSE)을 고려해서 최적화된다.

[그림 2-3] 다층인식자 신경망 구조



2. 모형 평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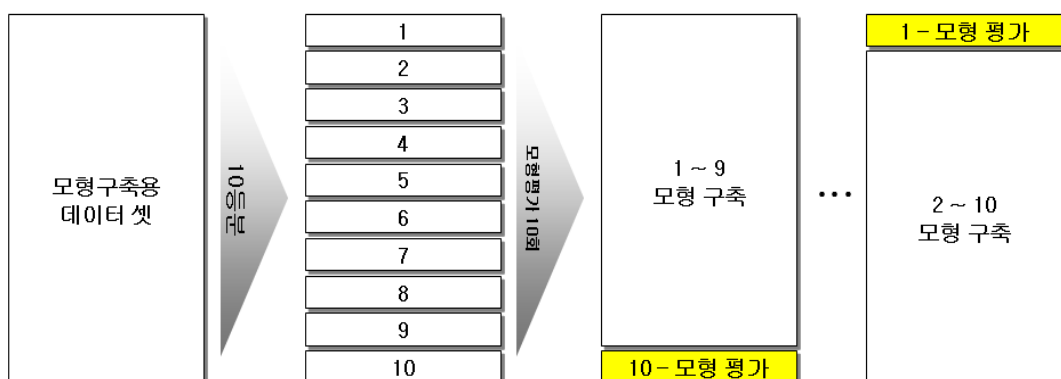
최적의 모형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모형을 비교하여 가장 우수한 모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과정이 모형 평가이다. 모형 평가는 예측을 위해 만든 여러 가지 모형의 예측과 분류 성능을 평가하고 비교하여,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필수 단계이다.

개발된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들로는 별도의 평가용(validation) 자료를 이용한 예비 방법(holdout method), k개의 분할된 자료를 이용하는 k-중첩 교차타당법(k-fold cross validation method)과 부스트랩 방법(bootstrap method) 등이 있다(Kohavi, 1995). 세 가지 모형 평가 방법 중 본 논문에서는 교차타당법을 사용하여 구축된 모형의 성능을 비교한다.

k-중첩 교차타당법의 과정은 초기 자료를 크기가 유사하게 $D_1, \dots, D_k$ 인 k개의 상호배반 부분집합으로 임의 분할한다. 분할된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과 검증을 k번 수행하는데, $D_1, \dots, D_{k-1}$ 를 모형 구축을 위해 사용하고, 구축된 모형은 D_k 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분할된 자료가 k개이므로, 모두 k번의 모형 훈련과 평가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10중첩 교차타당성 방법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향과 분산을 갖기 때문에 예측 모형의 정확도를 추정하는데 많이 사용된다(강창완 외, 2007).

10회 중첩을 사용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10회 중첩이 최적의 오차 추정 값을 얻기 위해 필요한 횟수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이승현, 2014). 교차타당성 방법은 모형 평가를 위해 사용한 자료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 모형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10중첩 교차타당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한다([그림 2-4] 참조).

[그림 2-4] 10중첩 교차타당법



3. 모형 평가 척도

일반적인 모형 평가는 종속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의 오분류 행렬(confusion matrix)을 통한 여러 가지 평가 척도를 고려할 수 있는데, 오분류율, 민감도, 특이도와 ROC곡선 등을 통해 모형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리프트(lift) 도표, 반응률(response rate) 도표 등이 각종 데이터마케팅 도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강현철 외, 1999; 이영섭과 박주완, 2007 재인용).

오분류율은 범주가 0과 1인 두 가지의 결과를 가질 경우 실제 0인 범주를 1 또는 실제 1인 범주를 0으로 오분류하는 확률이다. 오분류율은 전체 자료를 얼마나 잘못 분류하는가의 문제이므로 그 값이 적을수록 좋은 모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확률변수 X 는 0 이나 1인 실제값이고, 확률변수 E 는 0 이나 1의 값을 가지는 예측값이라고 할 때 오분류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오분류율} = \Pr(X=1, E=0) + \Pr(X=0, E=1) \quad (5)$$

G-mean은 결과 범주가 0인 집단과 1인 집단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척도로써 실제 범주가 0인 집단에 대한 정확도와 범주 1인 집단에 대한 정확도의 기하 평균이다. 그러므로 G-mean의 값이 클수록 좋은 예측 모형이다. G-mean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G-mean = \sqrt{\frac{\text{실제0, 예측0 정분류 빈도}}{\text{실제 0 빈도}} \times \frac{\text{실제1, 예측1 정분류 빈도}}{\text{실제 1 빈도}}} \quad (6)$$

많은 평가 척도들 중 Precision, Recall과 F_β 는 어떤 특정한 계급의 성공적인 분류가 다른 계급의 분류에 비해 훨씬 중요한 경우 널리 사용되는 측정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p = \text{실제1, 예측1 정분류 빈도} / \text{예측1의 빈도} \quad (7)$$

$$r = \text{민감도} = \text{실제1, 예측1 정분류 빈도} / \text{실제1의 빈도} \quad (8)$$

여기에서 p 는 Precision이고 r 은 Recall 값을 나타내며 민감도(sensitivity)라고도 불린다. p 값이 크다는 것은 모형에 의해 예측된 자료 중 자료가 잘못 예측될 개체수가 적다는 것이며, r 값이 크다는 것은 실제로 1의 값을 가지는 자료가 정분류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Precision이나 Recall 값이 클수록 구축된 모형의 특정계급에 대한 예측 성능이 좋음을 의미하므로, 이 두 가지 측도를 최대화하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Recall과 Precision을 모두 최대화하는 측도로써 다음과 같은 F_β 측도를 사용할 수 있다.

$$F_\beta = \frac{(\beta^2 + 1)rp}{r + \beta^2 p} \quad (9)$$

식(9)에서 β 값은 Precision과 Recall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의 값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를 F1측도라고 하며 다음의 식(10)으로 요약될 수 있다. F1측도는 특정계급(특히 우량과 불량 간 불균형인 경우 소수 계급)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값이 크다는 것은 특정계급에 대한 예측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Chawla 외, 2003).

$$F1 = \frac{2rp}{(r+p)} = \frac{2}{1/r + 1/p} = \frac{2 \cdot \text{실제1 예측1 정분류 빈도}}{\text{예측1 빈도} + \text{실제1 빈도}} \quad (10)$$

반응률은 모형을 통해 산출된 사후확률의 순서에 따라 전체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이를 N개의 집단으로 등분한 후 각 집단에서 반응변수의 특정 범주에 대한 빈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반응률을 이용한 반응률 도표를 통해 점수가 높은 10분위수에서 높게 나타나다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인 경우 좋은 예측 모형이다.

$$\text{반응률 값} = \frac{\text{일정 } N \text{ 등분내 범주 1 빈도}}{\text{일정 } N \text{ 등분내 전체 빈도}} \quad (11)$$

본 논문에서는 10중첩 교차타당성을 이용하여 오분류율, G-Mean, F1측도, 반응률의 값으로 모형을 비교 및 평가한다.

Ⅲ. 모형 구축

1. 연구 대상

본 논문의 모형 구축 대상은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에서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평가를 받은 차주 중 2017년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구축 대상이었던 105,572개이다. 이 중 각 변수에서 결측치(missing value)가 발생하였거나 “-999,999,999” 등 특수값(special value)이 있는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결과 총 67,308개 차주가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실제로 신용평가모형 구축 실무에서는 불량률과의 관계를 이용한 계급화(classing) 기법을 통해 결측값이나 특수값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자료를 범주화한 후 모형 구축에 사용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를 제거한 후 원래의 자료 형태를 유지하면서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분석 변수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구축을 위해 최초 총 50개의 변수를 이용한다. 모형 구축에 사용된 변수의 출처는 신용보증재단 내부 자료와 NICE CB 요약 정보인데,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은 실제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구축 시 사용된 변수들이다(<표 3-1> 참조). 실제 모형 구축에서 CB 정보는 더 많은 변수를 사용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fine classing을 통해 불량률과의 관계가 유의함이 검증된 변수를 1차적으로 이용한다.

종속변수인 우불량 여부(우량=0, 불량=1)는 차주의 신용평가 날짜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사고 30일 이상, 대위변제 발생, 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 등재 경향이 있는 경우 불량으로 정의한다. 우불량 관측 기간은 금융감독원의 우불량 관측 기간에 대한 기준을 충족(최소 12개월)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의 최신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12개월로 선정하였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 내부자료, 2017). 독립변수는 총 49개인데 이중 신용보증재단 내부 정보는 27개, NICE CB 요약정보는 22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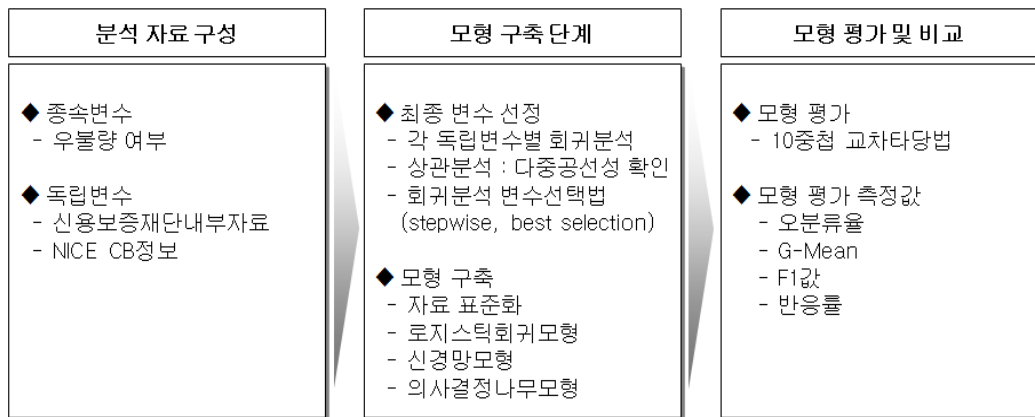
<표 3-1> 모형구축을 위한 변수

구분		변수
종속변수(1개)		우불량 여부 - 사고일수 30일 이상, 대위변제, 신용정보원 채무불이행 등재
독립변수 (49개)	신용보증 재단 내부 정보 (27개)	업력(개월), 자가/임차여부, 사업장임차보증금액(원), 종업원수(명), 차입금금액(원), 차입기관수(개), 년매출금액(원), 여신거래실적금액(원), 유가증권금액(원), 현금서비스사용금액(원), 거주기간(개월), 직권말소여부, 연체보유수량(개), 소유부동산금액(원), 주택임차보증금액(원), 예금적금금액(원), 기타현금금액(원), 기차입금액(원), 임대보증수입금액(원), 기타 고정수익금액(원), 배우자소득금액(원), 기타지출금액(원) 기타 가계소득금액(원), 매출원가금액(원), 개인법인구분 판매금액 및 일반관리금액(원), 이자비용금액(원)
	NICE CB 정보 (22개)	채무불이행 등록 총 건수(개), 신용카드 발급 기간(일), 3개월 내 신용카드의 평균한도소진율(%), 6개월 내 신용카드 일시불 이용률(%), 12개월 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경과 개월수(개월), 대출 총 기관수(개), 미상환 대출 개설일로 부터의 기간(일), 미상환대출총금액(원), 캐피탈업권 미상환 대출 총금액(원), 저축은행업권 미상환 대출총금액(원), 1년 내 연체총건수(개), 연간 원리금상환금액1(원), 연간원리금상환금액2(원), 연간 이자금액 상환금액(원), 주택/부동산담보대출제외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원), 월상환금액(SC저축은행별도기준)(원), 연간 원리금상환금액(기준2)_20140701금리기준(원), 연간 원리금상환금액(기준2)_실상환금액미반영(원), 연간 원리금상환금액(전은연기준은행업권용)(원), 연간 원금상환금액(전은연기준은행업권용)(원), 연간 이자상환금액(전은연기준은행업권용)(원), 미상환대출총금액 중 캐피탈 & 저축은행업권 비중(%)

3. 모형 구축 절차

본 논문의 목적은 소상공인 신용평가 시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모형을 구축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성능이 좋은 모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모형 구축 절차는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모형 구축 단계



첫째, 신용보증재단의 내부 정보와 CB 정보를 이용하여 모형 구축용 자료 세트를 구성하고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인 차주의 우량과 불량을 정의한다. 둘째, 모형 구축 단계에서는 모형구축을 위한 최종적인 변수를 선정하고 선정된 변수를 이용하여 로지스틱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신경망모형을 이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한다.

모형 구축용 변수 선정의 첫 번째 과정은 Hosmer와 Lemshow(2000)에서 제안하는 방법인 각 개별 독립변수마다 단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p-값이 0.05 이하인 변수를 1차적으로 선정한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이 있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계수가 0.7 이상인 변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여기에서 상관계수가 0.7 이상인 변수의 제거는 신용보증재단평가모형 구축에서 사용하는 다중공선성의 기준이다. 모형 구축을 위한 최종적인 변수 선택은 이영섭과 박주완(2007)에서 사용한 방법인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의 단계적 변수 선택법(stepwise)과 최적조합 변수 선택법(best selection)을 이용한

다. 선택된 변수는 특이값(outlier)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최대(mix-max) 표준화 기법³⁾을 사용하여 자료를 표준화한다. 마지막 단계는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수를 이용하여 구축된 세 가지 데이터마이닝 모형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으로써, 모형 평가 방법은 10중첩 교차타당법을 적용하며, 예측 성능 비교를 위한 측도로는 오분류율, G-mean, F1측도, 반응률을 이용한다.

IV. 분석 결과

1. 기초분석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종속변수의 분포는 <표 4-1>과 같다. 분석대상 차주 총 67,308개 중에서 종속변수인 우량과 불량 차주는 각각 97.8%,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량 차주가 불량 차주 보다 훨씬 큰 계급불균형(class imbalanced) 자료이다. 계급불균형 자료는 종속변수가 이진형인 경우 각 범주 간 빈도의 차이가 매우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급불균형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할 경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박주완, 2010). 실제로 계급불균형을 해소한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 논문에서는 계급불균형인 상태에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때 종속변수의 계급이 우량(Y=0), 불량(Y=1) 2개이므로 오분류표를 작성하기 위한 분류절단값(cut-off value)은 0.5를 기준으로 한다.

<표 4-1> 종속변수 분포

(단위 : 개, %)

구 분	우량(Y=0)	불량(Y=1)
빈도(비율)	65,806(97.8)	1,502(2.2)

3) 원래의 자료를 선형적(linear)으로 일정한 구간(일반적으로 0과 1사이)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화를 위한 공식은 $\text{표준화값}(A) = (x_i - \text{최소값}) / (\text{최대값} - \text{최소값})$ 이다.

모형 구축을 위한 독립변수 선택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15개가 선정되었다. 이 중에서 내부 정보는 7개, CB 정보는 8개가 선택되었다. 종속변수인 우량과 불량에 대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독립변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개인/법인 구분에서 개인의 비율은 우량인 경우 96%, 불량인 경우 92%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직권말소는 우량 4%, 불량 9%로 불량 차주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량인 차주의 평균이 더 높은 변수는 업력, 거주기간, 기타지출금액, 신용카드 발급일로부터 기간, 6개월 내 신용카드 일시불 이용률이다. 이에 반해 불량인 차주가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는 변수는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매출원가금액, 3개월 내 신용카드 평균 한도소진율, 대출 총 기관수, 1년 내 연체 총 건수, 부동산담보 제외 연간원리금상환금액, 미상환대출총금액 중 캐피탈 & 저축은행업권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량 차주는 대체적으로 업력과 거주기간이 길며, 금전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고 금융 거래가 비교적 건전함을 알 수 있다.

<표 4-2> 독립변수 분포

변수(단위)	우량(Y=0)		불량(Y=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법인 구분(이진형) - 개인(1)	0.96	0.21	0.92	0.27
직권말소 여부(이진형) - 말소(1)	0.04	0.20	0.09	0.28
업력(개월)	60.09	69.92	32.20	46.89
현금서비스 사용금액(원)	606,908.71	2,869,634.56	1,283,914.11	3,557,882.60
거주기간(개월)	143.14	151.49	116.02	138.08
매출원가금액(원)	14,067,167.15	38,463,621.60	19,710,463.10	151,768,807.00
기타지출금액(원)	2,018,138.08	1,095,229.66	1,829,032.71	1,128,680.36
채무불이행 등록 총 건수(개)	0.01	0.17	0.06	0.28
신용카드 발급일로부터 기간(일)	4,836.07	2,032.80	3,723.33	2,272.79
3개월 내 신용카드 평균 한도소진율(%)	23.67	17.15	37.40	21.67
6개월 내 신용카드 일시불 이용률(%)	62.35	26.98	53.38	27.32
대출 총 기관수(개)	1.63	1.21	2.41	1.50
1년 내 연체 총 건수(개)	0.32	1.25	1.03	2.81
부동산담보 제외 연간원리금상환금액(원)	8,737.15	12,592.54	14,836.40	17,068.64
미상환대출총금액 중 캐피탈 & 저축은행업권 비중(%)	13.91	29.10	28.67	36.41

2. 최종 모형 구축 및 평가

최종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축되었다. 먼저 내부 정보와 CB 정보 각각에 대해 로지스틱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신경망모형을 구축하고 예측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내부 정보와 CB 정보를 모두 합친 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여기에서 사용한 모형 중 의사결정나무모형은 CART 알고리즘, 신경망모형은 은닉층을 1개로 설정하고 은닉층의 노드 수는 3개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모형평가는 10중첩 교차타당법을 사용하였다. 전술하였듯이 예측성을 비교하기 위한 평가 측도는 오분류율, G-Mean, F1측도와 반응률이다.

10중첩 교차타당법에 의해 산출된 오분류율, G-Mean, F1측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4-1], <표 4-3> 참조). 첫 번째로 오분류율을 살펴보면 내부 정보, CB 정보, 전체 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에서 로지스틱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신경망모형 모두 0.022(=2.2%) 근방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오분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모형별 비교 결과도 로지스틱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신경망모형 모두 오분류율이 0.022 근방으로 큰 차이가 없고 매우 낮다.

단순히 오분류율만 비교하였을 때에는 세 가지 모형에 대해 내부, CB, 전체 정보 중 어떠한 정보를 사용해서 모형을 구축하더라도 좋은 판별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히 오분류율로만 해석하기에는 자료의 구조 상 큰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료의 심각한 계급불균형에 기인한 문제로서 소수계급 전체를 잘못 분류해도 오분류율은 낮게 된다는 것이다.

Chawla 등(2003)에 의하면 계급불균형 자료에서는 소수계급에 속한 자료는 전혀 분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오분류율이 매우 낮은 현상을 보이므로 올바른 모형 평가 측도가 되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수계급이 1%이고 다수계급이 99%인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할 때 대부분의 자료를 다수계급으로 분류함으로써 아주 낮은 오분류율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료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분류율 등의 단순 정확도를 모형 평가 측도로 사용하게 되면 관심의 대상인 소수계급에 속한 자료는 전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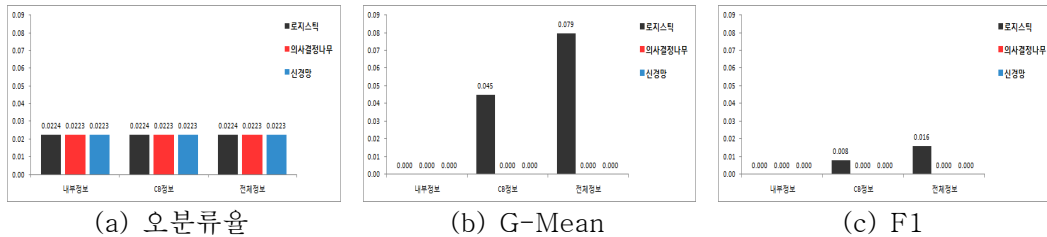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G-mean, F1측도, 반응률 등을 이용하여 모형의 예측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계급불균형이 심한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할 때 오버샘플링(over-sampling)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박주완, 2010).

두 번째로 G-mean은 내부 정보만 이용한 경우 로지스틱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신경망모형 모두 0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제시된 G-mean 산출 식“(6)”에 의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식(6)을 통해서 원인을 살펴보면 소수계급인 불량($Y=1$)이 모두 오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CB 정보와 전체 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로지스틱회귀모형에 의한 결과가 각각 0.045, 0.079로 나타나 비교적 향상된 예측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G-mean의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좋은 예측모형이라고 결론내리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F1측도를 살펴보면 G-mean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내부 정보만 이용한 경우 로지스틱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신경망모형 모두 0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또한 앞에서 제시된 F1측도 산출 식(10)에 의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소수계급인 불량($Y=1$)이 모두 우량($Y=0$)으로 잘못 분류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CB 정보와 전체 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로지스틱회귀모형에 의한 결과가 각각 0.008, 0.016로 나타나 비교적 좋은 예측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G-mean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F1측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세 가지 평가 측도를 살펴보았을 때 의사결정나무모형과 신경망모형은 어떠한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여도 좋지 않은 예측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로지스틱회귀모형으로 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한 경우에 다소나마 예측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매우 심하게 계급이 불균형이 자료를 이용한 경우 단순한 평가 측도만으로는 비교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측도만으로는 예측 성능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반응률을 이용하여 모형의 예측 성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 오분류율, G-Mean, F1측도 비교



<표 4-3> 오분류율, G-Mean, F1측도 비교

구분	로지스틱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신경망모형		
	오분류율	G-Mean	F1	오분류율	G-Mean	F1	오분류율	G-Mean	F1
내부 정보	0.0224	0.0000	0.0000	0.0223	0.0000	0.0000	0.0223	0.0000	0.0000
CB 정보	0.0224	0.0448	0.0080	0.0223	0.0000	0.0000	0.0223	0.0000	0.0000
전체 정보	0.0224	0.0794	0.0160	0.0223	0.0000	0.0000	0.0223	0.0000	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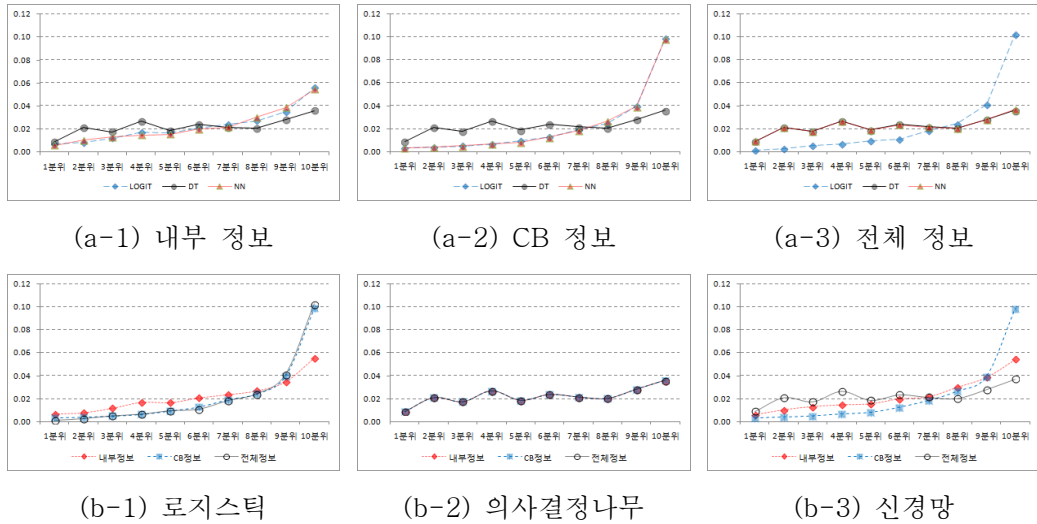
[그림 4-2]와 <표 4-4>~<표 4-6>은 반응률 그래프와 반응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a-1)~(a-3)은 내부 정보, CB 정보, 전체 정보 각각의 변수를 이용한 경우 세 가지 데이터마이닝 모형의 반응률을 비교한 것이며, (b-1)~(b-3)은 각 모형별로 사용한 변수에 대한 반응률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과 표를 살펴보면 모든 모형과 변수에서 반응률, 즉 불량일 확률이 커질수록 실제 불량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세 가지 정보에 의한 세 가지 데이터마이닝 모형으로 구축된 모형은 신용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a-1)의 내부 정보와 (a-2)의 CB 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의사결정나무모형의 예측 성능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a-3)의 전체변수를 이용한 모형은 로지스틱회귀모형의 예측 성능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별로 세 가지 정보를 적용한 반응률을 비교해보면,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는 CB 정보와 전체 정보의 예측 성능이 비교적 좋다.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는 세 가지 정보 모두 유사한 예측 성능과 구간별 역전현상이 있으며, 신경망모형은 CB 정보를 이용할 경우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전체 정보를 이용할 경우 로지스틱회귀모형, CB 정보를 이용할 경우는 로지스틱회귀모형과 신경망모형이 좀 더 좋은 모형이며, 내부 정보만 이용한 경우와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이용할 경우는 예측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2] 반응률 도표



<표 4-4>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한 반응률표

구분	로지스틱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신경망모형	
Decile	예측된 확률	반응률	예측된 확률	반응률	예측된 확률	반응률
0	0.005	0.007	0.022	0.009	0.009	0.006
1	0.009	0.008	0.022	0.021	0.010	0.010
2	0.014	0.012	0.022	0.018	0.012	0.013
3	0.017	0.017	0.022	0.027	0.014	0.015
4	0.021	0.017	0.022	0.019	0.017	0.015
5	0.023	0.021	0.022	0.024	0.020	0.020
6	0.026	0.024	0.022	0.022	0.023	0.022
7	0.029	0.027	0.022	0.020	0.029	0.030
8	0.033	0.035	0.022	0.028	0.038	0.039
9	0.047	0.056	0.022	0.036	0.051	0.054

<표 4-5> CB 정보 이용에 대한 반응률표

구분	로지스틱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신경망모형	
Decile	예측된 확률	반응률	예측된 확률	반응률	예측된 확률	반응률
0	0.003	0.003	0.022	0.009	0.003	0.003
1	0.005	0.004	0.022	0.021	0.004	0.004
2	0.006	0.005	0.022	0.018	0.005	0.005
3	0.008	0.006	0.022	0.027	0.007	0.007
4	0.010	0.009	0.022	0.019	0.009	0.008
5	0.014	0.013	0.022	0.024	0.012	0.013
6	0.018	0.019	0.022	0.022	0.017	0.018
7	0.025	0.024	0.022	0.020	0.025	0.027
8	0.039	0.040	0.022	0.028	0.043	0.039
9	0.095	0.099	0.022	0.036	0.098	0.099

<표 4-6> 전체 정보 이용에 대한 반응률표

구분	로지스틱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신경망모형	
Decile	예측된 확률	반응률	예측된 확률	반응률	예측된 확률	반응률
0	0.002	0.001	0.022	0.009	0.022	0.009
1	0.004	0.003	0.022	0.021	0.022	0.021
2	0.005	0.005	0.022	0.018	0.022	0.018
3	0.007	0.007	0.022	0.027	0.022	0.027
4	0.010	0.010	0.022	0.019	0.022	0.019
5	0.013	0.011	0.022	0.024	0.022	0.023
6	0.017	0.018	0.022	0.022	0.022	0.021
7	0.025	0.024	0.022	0.020	0.022	0.020
8	0.039	0.041	0.022	0.028	0.022	0.028
9	0.101	0.103	0.022	0.036	0.024	0.037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의 분석 자료를 이용해서 구축한 9가지 모형에 대해 세 가지 평가 척도와 반응률을 살펴보았을 때, 내부나 CB 정보만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는 전체 정보를 활용하고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할 경우 예측의 정확도 및 효율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은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구축 시 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내부 정보, NICE CB 정보와 앞의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이용하여 로지스틱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신경망모형을 구축하였을 때 예측 성능이 좋은 정보와 모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본 논문의 모형 구축 최종 분석 대상은 신용보증재단에서 2017년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구축 대상이었던 105,572개 중 결측치, 특수값을 제외한 67,308개의 차주이다. 실제로 신용평가모형 구축 시에는 계급화(classing)를 통해 결측값이나 특수값 등을 모두 포함하여 모형 구축에 사용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를 제거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축된 모형의 비교 및 평가는 오분류율, G-mean, F1측도, 반응률을 이용하였으며, 모형 구축 도구는 SAS9.4와 R3.4.1을 이용하였다.

위의 자료에 대해 세 가지 데이터마이닝 모형을 이용하여 내부 정보, CB 정보, 내부 정보와 CB 정보를 모두 적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측도인 오분류율, G-mean, F1측도의 결과에 의하면 어떠한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여도 예측 성능이 높지 않지만, 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로지스틱회귀모형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한 경우가 비교적 좋은 예측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급불균형이 심한 자료로 모형을 구축할 경우 오분류율과 같은 단순한 예측 정확도에 대한 측도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반응률을 살펴보았을 때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는 CB 정보와 전체 정보의 예측 성능이 비교적 좋으며, 신경망모형은 CB 정보를 이용할 경우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 정보를 이용할 경우 로지스틱회귀모형, CB 정보를 이용할 경우는 로지스틱회귀모형과 신경망모형이 좀 더 좋은 예측 성능을 가진 모형이다. 이를 종합하면 전체 정보와 로지스틱회귀모형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에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소수계급과 다수계급의 특성을 충분히 학습해야 하지만, 계급불균형이 매우 심한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 소수 계급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의 변별력이 떨어져서 예측 성능이 높은 모형의 구축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신용평가의 목적이 평가 결과가 불량인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은 대출 거절이라면, 이와 같은 계급 불균형이 매우 심한 자료를 이용할 경우 불량을 대부분 우량으로 판별함으로써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자료가 계급불균형이라는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 신용보증재단의 내부 정보만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할 경우 예측 성능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보다는 내부 정보와 CB 정보를 모두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예측 성능 면에서 좋은 방안이다.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이용할 경우가 다른 기법을 이용할 때 보다 좀 더 좋은 예측 성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위의 결과는 본 자료를 이용할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써, 다른 자료의 이용, 자료의 표준화 방법 등 정제 기법 변경, 신경망모형의 은닉층 개수를 증가시킬 경우 등 다른 조건에 의한 모형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본 논문의 의의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도학습 분류 모형인 로지스틱 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신경망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자료의 출처별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구축에의 적용 가능성과 방법론을 실증분석을 통해 탐색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을 통한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법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모형 이외에 랜덤포레스트 등 다른 기계학습 방법론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단순히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모형을 구축 보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특정 대상, 예를 들어 분석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신규 창업자, 우량과 불량인 구분이 모호한 판단미정 차주 등의 대상을 위한 기계학습 기법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불량 차주의 개수가 충분하다면 기업의 규모 및 업종을 구분한 모형의 구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규모와 업종을 고려한 부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현재 빅데이터의 적용이 중요한 트렌드(trend)로 나타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결과가 실제 현업에서 일부 적용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구축에서도 다양한 빅데이터 적용 가능성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 예를 들어 정보의 공유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경망모형 등을 이용할 경우 각 변수별로 구간을 나누어 평점화하기 위한 기법 등에서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즉, 로지스틱회귀모형의 경우 평점 산출 로직을 전산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에 탑재하기 쉽지만, 신경망모형 등의 기계학습의 경우 산출된 결과를 평점화하여 시스템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회귀모형 대비 수십에서 수백 배 이상 복잡한 로직이 필요하므로 이를 쉽게 탑재하기 위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 강신형 (2016). Alternative Data 머신러닝을 이용한 새로운 평가 방법론, ORANGE REPORT VOL.2, KCB Research Center.
- 강창완, 강현철, 박우창, 송현우, 윤환승, 이동희, 이성건, 이영섭, 진서훈, 최종후, 한상태 (2007). 데이터마이닝-개념과 기법 제2판, 사이플러스.
- 강현철, 한상태, 최종후, 김은석, 김미경 (1999). SAS Enterprise Miner를 이용한 데이터마이닝-방법론 및 활용-, 자유아카데미.
- 김성환, 김태동 (2014).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고평가에 대한 연구, 회계연구, 19(3), pp 27-49.
- 김의중 (2016). 알고리즘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입문, 위키북스.
- 박주완 (2010). 로지스틱회귀모형 구축 시 오버샘플링효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완, 송창길 (2015). 인적자원 변수를 이용한 기업 신용평가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인적자본기업패널학술대회.
- 신윤제 (2016). 머신러닝을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 신용정보부족군 (Thin-File)을 대상으로, NICE Credit Insight Issue Report, NICE평가정보 CB연구소.
- 이승현 역 (2014). 데이터 마이닝, 에이콘.
- 이명식 · 김정인 (2007). 개인신용평점제도, 서울출판미디어.
- 이영섭 · 박주완 (2007). 인적자원관련 변수를 이용한 기업신용점수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응용통계연구, 20(3), pp 1-19.
- 이영섭 역(2003). 데이터마이닝 Cookbook, 교우사.
- 장원경, 김연용 (2002).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의사결정 시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4(1), pp 235-255.
- 최종후, 진서훈 (2005). 데이터마이닝의 현장, 자유아카데미.

- 서울경제신문 (2017). <http://www.sedaily.com/NewsView/1OAXYYX4GJ/>
 “신한카드, 머신러닝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오픈”.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7). 2017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구축 최종보고서 - 내부자료.
- Chawla, N. V., Lazarevic, A., Hall, L. O. and Kegelmeyer, K. W. (2003). SMOTEBoost : Improving Prediction of the Minority Class in Boosting, Proceedings of Principles of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s 2003, 107-119.
- Hosmer, D. W., Lemeshow, S. (2000). Applied Logistic Regression Second Edi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Kohavi, R. (1995). A Study of Cross-validation and Bootstrap for Accuracy Estimation and Model Selection, Proceedings of the Fourteen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1137-1143.
- Ripley (1996). Pattern Recognition and Neural Networks, ISBN 0-521-46086-7,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연구논문 2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례보증의 성과 연구 :
광주·충남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사연구실
배진성 연구위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사연구실
박주완 연구위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Korea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례보증의 성과 연구 : 광주·충남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사연구실
배진성(경제학박사), 박주완(통계학박사)

<요약>

지역경제 성장과 관련 지역의 청년실업을 낮추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자체의 출연을 받고 있는 광주재단은 광주광역시의 시비(市費) 20억원을 모태로 지역 내 청년창업가들을 위해 200억원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하였다. 충청남도 또한 충남재단을 통해 도내 청년 실업을 해소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형 청년아름가게 소상공자금 지원사업'을 2014년 말부터 시행하였다. 두 재단의 특례보증에 대한 설문 및 투입산출 분석 결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등, 청년창업자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생력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내외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및 고용유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특례보증은 일반보증과 달리 공공성과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두 재단 모두 청년 창업에 있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과 같은 생계형 창업에 집중된 것은 지양할 과제이다. 특히,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창업 자금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신용도가 높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쏠림현상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청년창업자의 적정 공급규모를 산출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역경제 성장, 청년창업, 특례보증

I. 서론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 과거 산업화의 기초아래 고도성장은 멈춘지 오래고 국내외 여러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성장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연평균 3%를 하회하는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성장은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낮은 경제성장률은 생산에 필요한 자본과 노동의 약화를 뜻한다. 특히 최근의 '고용없는 성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실업자는 77만명으로 실업률 3.2%인데 반해 2016년에는 전체 실업자가 101만명으로 실업률은 3.7%로 증가를 보였다. 이 기간¹⁾ 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대비 11.9%인 290만명 증가한데 반해 실업자 수는 31.6%인 24만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고용구조 악화는 고스란히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경제란 국가경제의 하부단위로 희소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생산, 소비, 교환 그리고 분배하는 등 일련의 경제활동을 지역적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국가와 국가 간 인구나 노동력의 이동보다는 일국의 지역 간 인구나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운 특징이 있어 한 지역의 고용구조 악화는 인접 지역으로의 연관효과가 높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저성장과 고용구조 악화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최대 과제이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혹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동시에 소득이 개별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는 다시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등 경제가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가장 큰 역점 사업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2008년 전체 실업률은 3.2%였으나 청년실업률은 7.2%였으며, 2016년 전체 실업률이 3.7%로 0.5%p

1)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는 '08년 24,347천명에서 '16년 27,247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업자는 '08년 769천명에서 '16년 1,012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증가할 때 청년 실업률은 9.8%로 2.6%p 증가하였다. 청년 실업의 문제는 청년의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등의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포괄하여 경제 성장을 매우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들은 펼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에게 지원을 하거나,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보증기관으로부터 청년창업자들이 금융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특례보증을 설계하고 지원하고 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2016년도에 광주광역시 시비(市費) 20억원을 재원으로 보증규모 10배로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실행하였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은행협약을 통해 10억원의 재원으로 청년아름가게 소상공인 자금 운영으로 청년가게 100호점을 달성 지원하였다.

본 연구는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특례보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받은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정책자금 만족도, 개선사항 및 효과 등을 설문조사와 투입산출 분석 등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금융 조달 측면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Ⅰ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Ⅱ장에서는 경제성장과 실업, 창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두 신용보증재단의 청년관련 특례보증 제도의 개요를 파악한다. 제Ⅲ장에서는 두 신용보증재단의 청년 창업관련 특례보증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서술한다. 제Ⅳ장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지원성과에 대하여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II. 경제성장과 실업, 창업 및 청년창업 특례보증 개요

경제이론 중에 경험적으로 알려진 오쿤의 법칙(Okun's law)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경제성장률과 역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오쿤(Arthur Okun)이 1962년 발표한 연구에서 1948년부터 1960년대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실업률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3%정도 감소한다고 하였다. 오쿤의 연구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국내외 많은 연구²⁾들이 진행되었다. 최근 국내에서 기존의 경제성장률과 전체 실업률 간 오쿤의 계수를 추정하는 연구 이외에 경제성장률과 청년실업률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안두순(2011)은 한국에서 청년 실업과 경제성장률 간에 오쿤의 법칙이 성립되며, 동시에 청년실업이 전체실업보다 경제성장의 변화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조대형 외(2015)도 경제성장률과 전체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모두 오쿤의 법칙이 성립하였으며, 전체실업률보다 청년실업률과 경제성장률 간에 오쿤의 법칙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안두순(2011)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나, 경제성장만으로는 해결하기에는 청년실업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얹혀 있어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청년실업의 다양한 해결책으로 창업을 장려하기도 하는데, 창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연구들은 최근에 발표되고 있다. 창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Fritsch and Mueller(2004)는 창업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직접효과가 발생하여 경제 전체의 고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나 중기적으로 구축효과로 고용감소가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공급측면의 효과로 고용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다 소멸된다고 하였다. 궁극적으로 창업률이 고용증가율에 누적적으로 긍정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김원규 외(2014)는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창업률 증가는 시차를 두고 경제성장 및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

2) Gordon(1984), Mankiw(1994), Moosa(1997), Abel and Bernanke(2010), Levine(2013) 등의 연구가 있으며, 국내 한진수(1999), 서승환외(2003), 김우영(2008), 안두순(2011), 김준원외(2013), 조대형 외(2015) 등의 연구가 있다.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실업률을 낮추어야 하며, 특히 청년의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나 정책적으로 창업 활성화하는 것도 유용한 대안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청년의 범위가 다양하여 청년 정책 집행이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라 보기 어렵다.

한국에서 청년은 국어사전적 의미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청년(youth)을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대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은 통계청의 청년 실업률 조사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상 청년 나이를 15세에서 29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확대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는 19세에서 39세이하 모두를 청년 정책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인 청년을 39세이하로 보고 있다. 때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조례를 통해 청년의 연령을 규정하는데, 특히 농어촌 지역인 영광은 청년을 19세에서 45세, 곡성과 장흥은 19세에서 49세로 청년(발전)기본조례로 기준을 삼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청년의 범위가 제각각이면 일관된 청년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청년³⁾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광역지자체의 출연을 받고 있는 광주신용보증재단⁴⁾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청년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시행하였다. 광주재단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 창업가의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고용 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5월부터 10월까지 광주광역시의 20억원 출연으로 2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하였다.

3) 본 연구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수혜가능 연령인 39세 이하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4) 광주신용보증재단은 광주재단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남재단으로 칭한다.

<표 1> 청년 대상 특례보증 개요

재단명	광주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명칭	청년창업 특례보증	충남형 청년아름가게 소상공인가금
시행목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 창업가의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고용 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	경기침체 장기화 및 투자위축에 따른 도내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률 해소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
보증재원	광주광역시 출연 20억원	우리은행 협약 출연 10억원
시행기간	2016. 5. ~ 2016. 10.	2014. 11. ~ 2016. 12.
보증규모	총 200억원	50억원 또는 100호점 달성
보증대상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 개인 신용등급이 1~8등급이며 업력이 3년 이하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 2016. 8. 1일부터 만 39세이하의 업력이 5년 이내 기업으로까지 확대 - Two-Track으로 운용 (Track 1 일반창업지원, Track 2 우대창업지원)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 창업예정자 및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업자 - 충청남도 내 창업교육기관으로부터 창업 교육 이수 -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
보증한도	50백만원 이내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100%	2천만원 이하 100% 전액보증, 2천만원 초과 85% 부분보증
보증기간	5년이내	2년 일시상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최저 대출 금리 1년 일시상환 2.8%, 5년 분할상환 2.9%	전액보증 : CD(91일물) + 1.8% 이내, 부분보증 : CD(91일물) + 2.3% 이내
지원실적	총 907건(Track 1 901건, Track 26건), 총 200억원	총 100호 업체, 약 19억원 지원

주 : 광주 및 충남재단 특례보증 지원 계획 및 공고 참조

충남재단은 경기침체 장기화 및 투자위축에 따른 도내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률 해소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은행과의 협약으로 10억원을 출연하여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청년아름가게 100호점 달성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하였다.

두 재단의 청년창업 관련 특례보증 개요는 <표 1>과 같다. 광주재단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2016년 5월에 만 39세이하 업력 3년 이내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이 지원 되다가, 동년도 8월 보증대상을 업력 5년 이내로 확대 시행하였다. 광주재단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광주지역 소재 총 907개 청년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00억원이 지원되었다. 충남재단은 충청남도 내 창업교육 기관으로부터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총 100호 업체에 약 19억원의 보증이 지원되었다.

Ⅲ. 청년창업 특례보증 운영현황 및 설문 결과

1. 특례보증 지원현황 분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두 재단의 특례보증은 남성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보다 많았다.

<표 2> 성별 청년 대상 특례보증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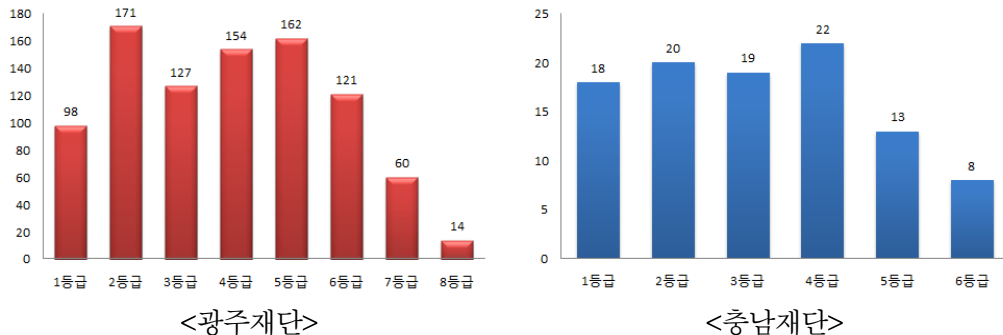
구분	청년창업 특례보증(광주재단)		청년아름가게 100호점(충남재단)	
	보증실행(건)	비중(%)	보증실행(건)	비중(%)
남성	603	66.5	56	56.0
여성	304	33.5	44	44.0
합계	907	100	100	100.0

또한 연령별로는 두 재단의 특례보증 모두 30세에서 34세이하의 이용자가 많았다. 한국 청년의 경우 대학교육 혹은 군대문제로 인하여 사회 취업이 30대 초반으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국 청년의 상황들이 보증이용 연령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연령별 청년 대상 특례보증 지원 현황

구분	청년창업 특례보증(광주재단)		청년아름가게 100호점(충남재단)	
	보증실행(건)	비중(%)	보증실행(건)	비중(%)
25세이하	90	11.0	19	19.0
26세~29세이하	146	17.9	18	18.0
30세~34세이하	346	42.5	45	45.0
35세~39세이하	325	39.8	18	18.0
합계	907	100	100	100.0

신용등급별 청년대상 특례보증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재단의 경우 중신용자(4등급에서 6등급)의 이용이 많았으며, 충남재단의 경우 고신용자(1등급에서 3등급)의 이용이 많았다. 광주재단은 보증지원 신용등급 대상을 8등급의 저신용까지 확대 운영하였으며, 충남재단은 6등급 이상으로 운영하였다.



[그림 1] 신용등급별 청년 대상 특례보증 지원 현황

금액별 청년 대상 특례보증 지원은 광주재단의 한 개 업체당 22.1백만원의 보증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충남재단은 19.3백만원의 보증지원이 실행되었다. 특히 광주재단은 5천만원까지 지원한도를 설정하였으나 주로 2천만원 이하의 보증 이용이 많았으며, 충남은 3천만원까지 지원한도를 설정하여 3천만원 이하의 보증 이용이 많았다.

<표 4> 금액별 청년 대상 특례보증 지원 현황

구분	청년창업 특례보증(광주재단)		청년아름가게 100호점(충남재단)	
	보증실행(건)	비중(%)	보증실행(건)	비중(%)
1천만원이하	147	16.2	27	27.0
2천만원이하	380	41.9	29	29.0
3천만원이하	333	36.7	44	44.0
4천만원이하	14	1.5	-	-
5천만원이하	33	3.6	-	-
합계	907	100	100	100.0
평균	22.1백만원		19.3백만원	

업종별로는 두 재단의 청년대상 특례보증 모두 도소매업의 보증지원이 많았으며, 광주재단은 음식숙박업이 충남재단은 서비스업이 두 번째로 보증지원이 많이 되었다.

<표 5> 업종별 청년 대상 특례보증 지원 현황

구분	청년창업 특례보증(광주재단)		청년아름가게 100호점(충남재단)	
	보증실행(건)	비중(%)	보증실행(건)	비중(%)
제조업(C)	41	4.5	6	6.0
도소매업(G)	299	33.0	36	36.0
음식숙박업(I)	271	29.9	28	28.0
서비스업	270	29.8	30	30.0
기타업	26	2.9	-	-
합계	907	100	100	100.0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Korea Standard Industry Code) 중 제조업(C), 도소매업(G), 음식숙박업(I), 서비스업(E, H, J~U), 기타업(A, B, D F)으로 분류

2. 설문조사 결과

광주재단의 청년창업 특례보증 이용자 907명 중 2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2016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특례보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충남 재단은 청년아름가게 100호점을 대상으로 100명의 사업주 전체에게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특례보증의 만족도, 개선사항 등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충남재단은 모집단 100명 중 최종적으로 8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두 재단 모두 구조화된 설문지로 우편, 면접,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창업은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산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지만, 그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가진다(No, Kim & Song, 2003)⁵⁾라고 하였다. 한국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법률 제13868)」상에서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률에서 창업자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창업동기와 관련한 질문에 두 재단 모두 잘 아는 분야라서 창업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성장가능성과 생계유지의 비중도 높았다.

<표 6> 창업동기 응답수 및 비중

구분	청년창업 특례보증(광주재단)		청년아름가게 100호점(충남재단)	
	응답(개)	비중(%)	응답(개)	비중(%)
기술우위,이익많음	18	9.0	6	7.1
성장가능성	52	26.0	19	22.4
잘아는분야	85	42.5	36	42.4
생계유지	31	15.5	23	27.1
가업승계	8	4.0	1	1.2
기타	6	3.0	-	-
합계	200	100.0	85	100.0

5) 정석화 · 신호균(2016) 재인용

두 재단의 창업특례보증 이용자의 창업 준비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미만의 준비기간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6개월에서 1년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표 7> 창업 준비기간 응답수 및 비중

구분	청년창업 특례보증(광주재단)		청년아름가게 100호점(충남재단)	
	응답(개)	비중(%)	응답(개)	비중(%)
1개월미만	5	2.5	7	8.2
1개월~6개월미만	118	59.0	37	43.5
6개월~1년미만	64	32.0	27	31.8
1년~2년미만	13	6.5	11	12.9
2년이상	0	0.0	3	3.5
합계	200	100.0	85	100.0

<표 8> 창업 시 애로사항 응답수 및 비중

구분	청년창업 특례보증(광주재단)		청년아름가게 100호점(충남재단)	
	응답(개)	비중(%)	응답(개)	비중(%)
업종선택	13	6.5	6	7.1
입지선정	77	38.5	13	15.3
자금조달	88	44.0	57	67.1
행정절차	9	4.5	2	2.4
인력확보	5	2.5	4	4.7
지식부족	6	3.0	2	2.4
기타	2	1.0	1	1.2
합계	200	100.0	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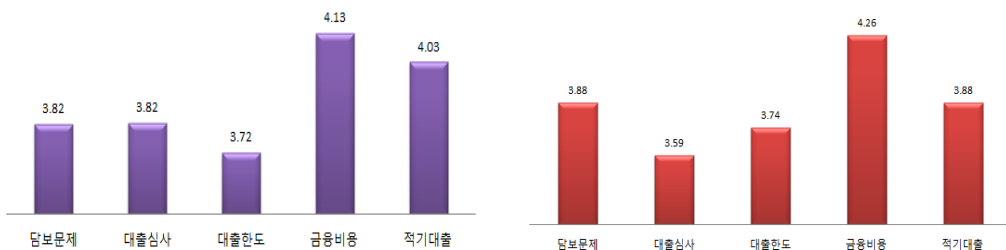
창업 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이 가장 높았으며, 입지선정, 업종선택 등이 뒤를 이었다. 창업진흥원의 '2016년 창업실태조사' 중 창업 시 소요자금은 평균

적으로 2억 4,894만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6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서도 소상공인의 평균 창업자금은 9,149만원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13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도 소상공인의 창업비용은 7,257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라고 조사되고 발표되는 것처럼 창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창업비용 조달의 문제로 귀결된다.

광주재단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이용한 이용자나 충남재단의 청년아름가게 소상공인자금을 이용한 자 모두 특례보증을 이용한 목적으로는 경영자금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기상황과 맞물려 창업 이후 도약이나 성장단계로 넘어가기위해 경영 자금필요가 많았다고 파악된다. 두 재단의 특례보증이 창업 자금으로 소요된다고 응답한 비중도 광주재단은 16.5%, 충남재단은 34.1%로 경영자금 이외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9> 정책자금 이용목적 응답수 및 비중

구분	청년창업 특례보증(광주재단)		청년아름가게 100호점(충남재단)	
	응답(개)	비중(%)	응답(개)	비중(%)
창업자금	33	16.5	29	34.1
경영자금	101	50.5	43	50.6
시설투자	30	15.0	7	8.2
생계비용	5	2.5	-	-
부채상환	28	14.0	3	3.5
연구개발	3	1.5	2	2.4
기타	-	-	1	1.2
합계	200	100.0	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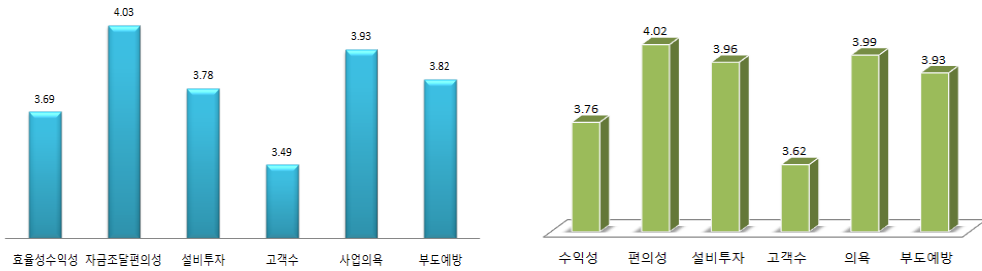


<광주재단>

<충남재단>

[그림 2] 정책자금 이용 기여도 응답 현황

두 재단의 특례보증 이용이 금융거래측면에서 기여한 바⁶⁾로는 ‘금융비용 절감’이 두 재단 이용자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적기대출’로 필요자금을 소요하였다는 이용자의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금융거래측면에서는 담보문제 해결, 대출심사 및 대출한도에서도 기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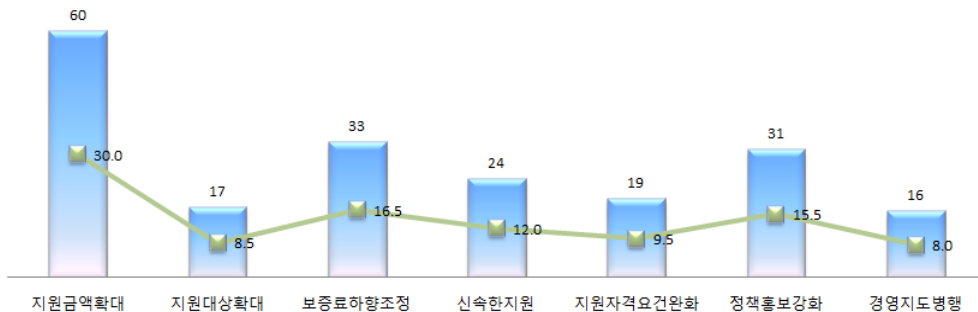


<광주재단>

<충남재단>

[그림 3] 정책자금 이용 효과 응답 현황

특례보증의 개선사항으로 두 청년 창업 관련 특례보증 이용자 모두 지원금 확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광주재단을 이용한 청년 창업자 중 응답자의 30%가 지원금액 확대, 16.5%가 보증료 하향 조정, 15.5%가 정책 홍보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재단을 이용한 청년 창업자 또한 지원금액 확대가 55.3%로 가장 높았고, 신속한 지원 21.2%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광주재단 정책자금 이용 개선사항 응답 현황

6) 5점 척도로 전하기어못함(1), 기어못함(2), 변화없음(3), 기여(4), 매우기어(5)로 측정하여 평균을 계산하여 3점이상은 기여로 판단

<표 10> 충남재단 정책자금 이용 개선사항 응답수 및 비중

구분		지원 금액 확대	지원 대상 확대	보증료 하향 조정	신속한 지원	지원 자격 요건 완화	정책 홍보 강화	경영 지도 병행	합계
개선 사항	응답(개)	47	4	5	18	4	5	2	85
	비중(%)	55.3	4.7	5.9	21.2	4.7	5.9	2.4	100

IV. 청년창업 특례보증 효과 분석 결과

두 재단의 특례보증 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각 지역의 특례보증공급액을 투입변수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산업연관표는 행렬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는 방향에 따라 경제구조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를 세로(열, column) 방향으로 보면 각 산업부문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을 나타내는데 이를 투입구조라고 한다. 투입구조는 생산활동에 사용한 원·부재료의 구성을 나타내는 중간투입과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내역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로 구분된다. 가로(행, row) 방향으로 보면 각 산업부문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가 어떤 부문에 사용되기 위해 판매되었는지를 나타내는데 이를 배분구조라고 한다. 배분구조는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에 원·부재료로 판매된 것을 나타내는 중간수요와 소비 투자 수출 등으로 판매된 것을 나타내는 최종수요로 구분된다. 따라서 중간투입과 중간수요는 산업 간 거래내역을 나타내는데 이를 내생부문이라고 하며 부가가치와 최종수요를 외생부문이라고 한다.

지역산업연관표도 전국산업연관표와 같이 행렬 형식으로 되어 있어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전국산업연관표와 동일하다. 다만 지역산업연관표가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산업연관표와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진 지역 간 산업연관표로 구분되므로 지역 내인지 지역 간인지에

따라 표의 구성 형식이 다르다.

지역 내 산업연관표에서 타지역으로 이출된 제품은 해외로 수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타지역에서 중간재 또는 최종재로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이출로 처리한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는 타지역으로 이출된 제품이 타지역의 생산활동에 중간재로 사용된 것과 소비 및 투자의 최종재로 사용된 것을 구분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최종수요 항목에는 이출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일반적인 형식은 <그림5>와 같다.

			중 간 수 요						최 종 수 요						지역내 산출액		
			지역 1		...		지역 n		지역 1		...		지역 n				
			산업1	...	산업n	산업1	...	산업n	산업1	...	산업n	소비	투자	수출	소비	투자	수출
국 산 투 입	지 역 1	산업1 : 산업n	Z_{11}		투 입 구 조		Z_{1n}		Y_{11}^d		...		Y_{1n}^d		X_1		
	...	산업1 : 산업n	배 분 구 조 →														
	지 역 n	산업1 : 산업n	Z_{n1}				Z_{nn}		Y_{n1}^d		...		Y_{nn}^d		X_n		
	수입 투입	산업1 : 산업n	M_1				M_n		Y_1^m		...		Y_n^m				
부가가치			V_1				V_n										
지 역 내 산 출 액			X_1				X_n										

[그림 5]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출처 : 한국은행(2009)

지역 간 산업연관표에서 세로 방향은 특정 지역이 생산활동을 위해 자가지역 및 타지역과 해외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투입내역과 임금 이윤 생산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내역을 나타낸다. 가로 방향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자가지역 및 타지역의 생산활동에 원·부재료로 판매된 내역과 자가지역 또는 타지역의 소비와 투자로 판매되거나 해외로 수출된 내역을 나타낸다.

4.1 생산유발효과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이 생산에 투입한 중간재 및 부가가치의 구성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 지역 및 산업부문으로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를 계측하기 위한 매개변수로 이용된다. 생산유발효과는 다음과 같은 (1)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X = (I - A^d)^{-1} Y \quad (1)$$

여기서 X 는 산출액이며, A^d 는 투입계수행렬, Y 는 최종수요, I 는 단위행렬을 나타낸다. 위 식에서 $(I - A^d)^{-1}$ 을 생산유발계수행렬이라고 하는데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산출규모를 나타낸다. 생산유발계수가 역행렬로 되어 있어 역행렬계수 또는 레온티에프(Leontief) 역행렬계수라고도 한다.

4.2 부가가치유발효과

최종수요에 의해 생산이 유발되고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관계를 부가가치계수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V = \hat{A}^v (I - A^d)^{-1} Y \quad (2)$$

여기서 V 는 부가가치유발액이며, $\hat{A}^v$ 는 부가가치계수($A^v = V_i / X_i$)의 대각행렬을 나타낸다. 위 식의 $\hat{A}^v (I - A^d)^{-1}$ 는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나타낸다.

4.3 취업(고용)유발효과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노동을 산출액으로 나눈 취업(고용)계수의 대각행렬을 이용하여 최종수요가 각 지역의 취업(고용)을 어느 정도 유발하는지 추정할 수 있다.

$$L = \hat{l} (I - A^d)^{-1} Y \quad (3)$$

여기서 L 은 노동을, $\hat{l}$ 은 취업(고용)계수($l = L_i / X_i$)의 대각행렬을 나타내며 $\hat{l} (I - A^d)^{-1}$ 는 취업(고용)유발계수를 나타낸다.

4.4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한국은행의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효과를 분석하였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공급을 받은 광주지역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광주지역의 생산 증가를 통한 1차 파급효과(직접효과)가 발생하며, 이들의 생산물을 중간 수요하는 지역내·외 산업의 생산 증가를 통해 2차 파급효과(간접효과)가 발생,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국의 산업에 생산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충남의 청년아름가게 소상공인 자금 또한 충남지역에 1차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지역내·외 2차 파급효과를 거쳐 전국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분석 결과 2016년 광주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200억에 대하여 수입 수요로의 누출이 없음을 가정하고 이를 최종 수요로 간주할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전 업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유발효과는 약 379억 9천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59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18명, 고용유발효과⁷⁾는 242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11>은 광주재단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업종으로는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 및 고용유발효과 모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그리고 문화및기타서비스업 비중이 높게 추정되었다.

7)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지역고용유발계수가 발표되지 않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된 생산유발효과에 전국 고용계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11> 광주재단의 청년창업 특례보증 산업연관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보증공급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효과	비중	효과	비중	효과	비중	효과	비중
농림어업	-	1,155.4	3.04	623	3.92	31	5.98	2	0.83
광업	-	21.8	0.06	12.1	0.08	0	0.00	0	0.00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213	2,447.4	6.44	395.1	2.48	7	1.35	6	2.48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60	377.2	0.99	87.3	0.55	2	0.39	2	0.83
목재, 종이, 인쇄및복제업	20	505	1.33	132.7	0.83	3	0.58	2	0.83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	823.8	2.17	56.1	0.35	0	0.00	0	0.00
화학제품제조업	135	1,410.1	3.71	282.1	1.77	2	0.39	2	0.8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70	211.1	0.56	49.7	0.31	1	0.19	1	0.41
1차금속제품제조업	-	654	1.72	89.4	0.56	1	0.19	1	0.41
금속제품제조업	75	475	1.25	142.9	0.90	1	0.19	1	0.41
기계및장비제조업	210	470.9	1.24	131.5	0.83	1	0.19	2	0.83
전기및전자기기제조업	25	562.4	1.48	153.2	0.96	1	0.19	1	0.41
정밀기기제조업	50	139.3	0.37	41.1	0.26	1	0.19	0	0.00
운송장비제조업	40	508.2	1.34	110.7	0.70	1	0.19	1	0.41
기타제조업	150	507.6	1.34	203.1	1.28	4	0.77	1	0.41
전력, 가스및증기업	20	1,072	2.82	238	1.50	1	0.19	1	0.41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업	-	177.6	0.47	78.5	0.49	1	0.19	1	0.41
건설업	445	524.3	1.38	168.1	1.06	4	0.77	3	1.24
도매및소매업	6,445	8,017.3	21.10	4,505.4	28.34	152	29.34	68	28.1
운수업	816	1,792.4	4.72	733.8	4.62	37	7.14	10	4.13
음식점및숙박업	6,046	6,638.6	17.48	2,368.4	14.90	120	23.17	56	23.14
정보통신및방송업	175	1,189.2	3.13	499.3	3.14	8	1.54	6	2.48
금융및보험업	20	962.6	2.53	496.8	3.12	6	1.16	5	2.07
부동산및임대업	260	1,302.6	3.43	944.3	5.94	7	1.35	3	1.24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70	725.6	1.91	415	2.61	10	1.93	7	2.89
사업지원서비스업	190	636.1	1.67	416.4	2.62	17	3.28	14	5.79
공공행정및국방	-	54.7	0.14	42	0.26	0	0.00	1	0.41
교육서비스업	1,281	1,295.7	3.41	920.4	5.79	20	3.86	15	6.20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	87.3	0.23	44.5	0.28	1	0.19	1	0.41
문화및기타서비스업	2,984	3,242.6	8.54	1,518.8	9.55	79	15.25	32	13.22
합계	20,000	37,987.8	100.0	15,899.7	100.0	518	100.0	242	100.0

<표 12> 충남재단의 청년아름가게 특례보증 산업연관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보증공급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효과	비중	효과	비중	효과	비중	효과	비중
농림어업	-	136.2	3.83	73.2	4.69	3.5	7.29	0.3	0.88
광업	-	0.9	0.03	0.5	0.03	0	0.00	0	0.00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55.5	296.7	8.35	43.6	2.79	0.8	1.67	0.6	1.76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	26.5	0.75	6.3	0.40	0.1	0.21	0.1	0.29
목재, 종이, 인쇄및복제업	-	41.1	1.16	11	0.70	0.2	0.42	0.2	0.59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	63.8	1.79	4.4	0.28	0	0.00	0	0.00
화학제품제조업	-	103.5	2.91	21.8	1.40	0.2	0.42	0.2	0.59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6.5	0.18	1.9	0.12	0	0.00	0	0.00
1차금속제품제조업	-	51.8	1.46	7.1	0.45	0	0.00	0	0.00
금속제품제조업	24	56.3	1.58	16.3	1.04	0.1	0.21	0.1	0.29
기계및장비제조업	25.5	48	1.35	13.7	0.88	0.1	0.21	0.1	0.29
전기및전자기기제조업	-	43	1.21	11.5	0.74	0.1	0.21	0.1	0.29
정밀기기제조업	-	6.3	0.18	1.8	0.12	0	0.00	0	0.00
운송장비제조업	-	35.3	0.99	7.9	0.51	0.1	0.21	0.1	0.29
기타제조업	10	41.2	1.16	16.2	1.04	0.3	0.63	0.2	0.59
전력, 가스및증기업	-	91.8	2.58	20.5	1.31	0.1	0.21	0.1	0.29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업	-	15.5	0.44	7	0.45	0.1	0.21	0.1	0.29
건설업	-	6.4	0.18	2.1	0.13	0.1	0.21	0.1	0.29
도매및소매업	634	785.1	22.09	503.1	32.23	17.2	35.83	10.1	29.71
운수업	40	121.1	3.41	48.2	3.09	1.5	3.13	0.7	2.06
음식점및숙박업	605	658.7	18.53	243.2	15.58	11.8	24.58	6	17.65
정보통신및방송업	10	101.5	2.86	41.8	2.68	0.6	1.25	0.5	1.47
금융및보험업	35.5	118.8	3.34	61	3.91	0.8	1.67	0.8	2.35
부동산및임대업	-	91.5	2.57	67.1	4.30	0.5	1.04	0.3	0.8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38.8	1.09	21.6	1.38	0.4	0.83	0.4	1.18
사업지원서비스업	71	111.6	3.14	76.4	4.89	2.7	5.63	2.5	7.35
공공행정및국방	40.5	45.7	1.29	35.5	2.27	0.6	1.25	0.6	1.76
교육서비스업	25.5	26.8	0.75	19.6	1.26	0.3	0.63	0.2	0.59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	7.3	0.21	3.7	0.24	0.1	0.21	0.1	0.29
문화및기타서비스업	354	377.4	10.62	173	11.08	5.7	11.88	3	8.82
합계	1,930.5	3,554.8	100.0	1,561.1	100.0	48.0	100.0	34.0	100.0

충남형 청년아름가게 소상공인 자금 지원 약 19억에 대하여 광주재단과 같은 가정 하에 생산유발효과는 약 35억 5천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5억 6천만원, 취업유발효과는 48명, 고용유발효과는 34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12>는 충남재단의 청년아름가게 소상공인 자금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충남재단 또한 지원액이 많았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문화및기타 서비스업에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향후 과제

지역경제 성장과 관련 지역의 청년실업을 낮추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청년 실업을 낮추려는 정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임이 틀림없다. 중앙정부는 거시적 지표 관리와 함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는 지역 청년 실업을 낮추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자체의 출연을 받고 있는 광주재단은 광주광역시의 시비 20억원을 모태로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창업가들을 위해 200억원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하였다.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907건의 보증이 이루어졌다.

광주광역시의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은 2014년 중소기업통계 기준 광주 전체 사업체 중에서 97.4%를 보이고 있으며, 종사자수 비중도 광주 전체 종사자수의 66.5%를 차지하는 만큼 광주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광주의 청년인구(만 19세부터 만 39세)는 광주 전체 인구(2016년 5월 기준)의 3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청년 비율 보다 0.9% 더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집행은 광주 지역경제의 활력소이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광주는 2015년 기준 전국 만 20세이상

만 39세이하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6.4%로 전국 70.2%의 3.8%p가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재단이 실시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등, 청년창업자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생력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충청남도 또한 충남재단을 통해 도내 청년 실업률 해소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형 청년아름가게 소상공자금 지원사업’을 2014년 말부터 시행하였다. 도내 창업교육기관으로부터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예정자나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말까지 100개업체 약 19억원 지원하였다. 충남의 2016년 경제활동인구는 1,268천명으로 이 중 청년(20세~39세)의 인구는 462천명으로 도내 경제활동인구 중 36.4%를 차지하며, 이들의 고용률은 67.9%로 전국 66.5%보다 다소 상회하지만 청년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충남재단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충남형 청년아름가게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청년의 실업률을 낮추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 될 수 있다.

청년아름가게 자금으로 인하여 충남 도내 청년 창업자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하며, 지역내외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및 고용유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특례보증은 일반보증과 달리 공공성과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두 재단 모두 청년 창업에 있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과 같은 생계형 창업에 집중된 것은 지양할 과제이다. 통계청의 ‘15년 기업생멸 행정통계를 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1년 생존율은 각각 58.2%, 59.2%로 전체 산업의 평균치인 62.4%에도 다소 떨어지며, 특히 음식숙박업의 5년 생존율은 17.3%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특례보증 시행에 있어 낮은 지원 한도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중 개선 사항에서도 지원금액 확대 응답이 높게 나왔다. 창업에 있어 창업진흥원의 ‘2016년 창업실태조사’에서도 필요 창업지원정책의 1순위가 초기단계의 금융지원(47.6%)으로 조사되는 등 창업지원에는 금액이 중요하다

하겠다. 창업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고려하며, 자금 수요층의 욕구를 반영하여 정책자금의 지원금 확대 즉 지원 한도 상향에 대한 정책적 재고(再考)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창업 자금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회추구형 창업을 장려하는 출발선 상의 평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보증금액의 회수와 함께 신용도가 높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쏠림현상을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으로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은 사업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회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창업프로그램 및 탄력적 상환 기간 운영을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청년창업자의 적정 공급규모를 산출하고, 조성 규모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금융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내 청년들의 창업 및 경영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원규 · 김진웅(2014), “창업이 고용창출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1(2), pp.211-227.
- 안두순(2011), “경제성장과 청소년실업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경상논총 제29권 제1호, pp.85-110.
- 이성근 · 이춘근 · 나주몽(2014), 최신 지역경제학, 법문사.
- 정석화 · 신호균(2016), “청년창업지원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지역 청년 일자리 성과창출 사례”, 중소기업연구 제38권 제3호, pp.213-232.
- 조대형 · 최경욱(2015), “한국의 경제성장과 실업률 간의 시변하는 관계변화에 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6호, pp.2329-2348.
- 한국은행(2009),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 _____ (2014),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 한진수(1999), “한국경제에서의 오쿤의 법칙: 실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노동경제논집 제22권 제2호, pp.99-119.
- Abel, A.B., Bernanke, B. and Croushore, D.(2010), “Macroeconomics”, Prentice Hall.
- Fritsch, M. and P. Mueller(2004), “Effectss of New Business Form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over Time”, Regional Stidies 38(8), pp.961-975.
- Levine, L.(2013), “Economic Growth and the Unemployment Rate”, CRS Report for Congress.
- No, J. G., I. G. Kim, and B. S. Song(2003), Start-Up Management, Trade & Management Publishing Co.
- R.E.Miller · P.D.Blair(2009),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 and Extension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기획분석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및
사업자 대상 햇살론의 사업유형별
대위변제 분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사연구실
윤희준 대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Korea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및 사업자 대상 햇살론의 사업유형별 보증현황 분석

1 개 요

□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

-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 및 양극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기 악화
 -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는 장기간 침체되며 경기 양극화 심화
 - 주로 내수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 및 전망은 악화
- 소상공인의 자금부족 심화
 -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건전성 강화로 금융공급 축소 및 대출심사 강화
 - 특히, 저신용계층이 많은 소상공인은 자금차입에 어려움이 심화
 - 또한, 차입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고금리인 상황

□ 분석 목적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및 사업자 대상 햇살론의 보증공급, 대위변제 현황분석을 통해 신용보증지원제도 개선방안 모색

□ 분석 범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이하, 금융소외)’ 및 ‘사업자 대상 햇살론(이하, 햇살론)’을 분석대상으로 함

- 금융소외 분석 대상 기간 : '09.1.12(시행일) ~ '10.7.23(종료일)
- 햇살론 분석 대상 기간 : '10.7.26(시행일) ~ '17.6.30
- * 햇살론의 경우,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신용보증데이터 이용
- 사업유형 및 신용등급별로 구분하여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율 분석
 - 사업유형은 사업자등록 여·부 및 점포 유·무로 구분하여 총 4개('유등록·유점포', '유등록·무점포', '무등록·유점포', '무등록·무점포')로 분류
 - * 단, 금융소외는 '유등록·무점포'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

<표 1> 사업유형별 구분

구 분		명 칭
사업자 등록	사업장 有	유등록·유점포
	사업장 無	유등록·무점포
사업자 미등록	사업장 有	무등록·유점포
	사업장 無	무등록·무점포

2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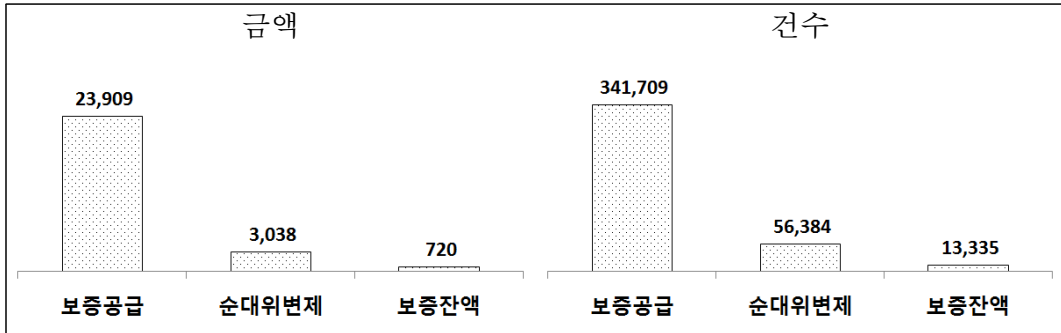
□ 전체 현황

- **(보증지원 규모)** 2조 3,909억원 (34만 1,709건)
- **(보증잔액)** 720억원 ('17.6월말 기준)
- **(누적 대위변제 규모)** 3,038억원 (5만 6,384건)
- **(누적 대위변제율¹⁾)** 12.7%

1) 순대위변제율 = 순대위변제금액 / 보증공급액 × 100

[그림 1] 금융소의 특례보증 전체 현황

(단위: 억원,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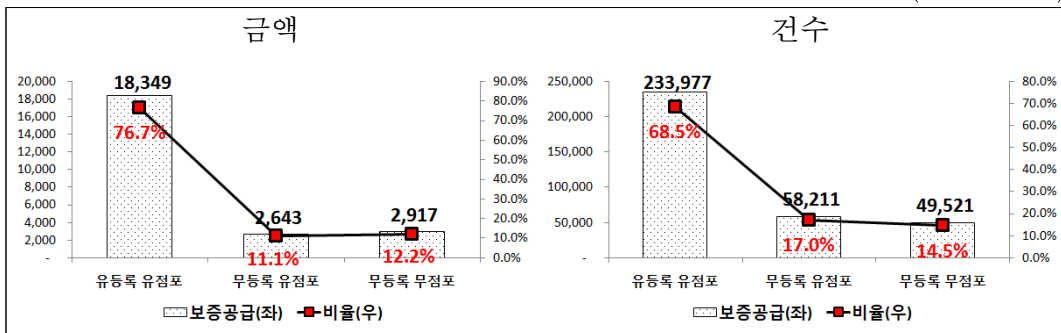


□ 보증공급 현황

- 금융소외의 사업유형별 보증공급 금액은 '유등록·유점포'가 1조 8,349억원 (76.7%)으로 대부분을 차지
-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도 '유등록·유점포'가 23만 3,977건(68.5%)으로 최대

[그림 2] 사업유형별 보증공급 현황

(단위: 건, 억원)



- 신용등급별 보증공급액 비율은 6등급이 33%(7,888억원)로 최대
- 1~5등급까지 보증공급액 비율은 완만한 상승을 보인 반면, 6등급 이후 큰 폭으로 상승
- 보증공급액에서 6등급 이하 저신용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83%로 대부분 차지

- 사업유형별 6등급 이하 저신용등급의 보증공급 비율은 ‘유등록·유점포’가 90.5%로 매우 높은 수준

* (유등록·유점포) 90.5% > (무등록·유점포) 61.8% > (무등록·무점포) 54.5%

<표 2> 신용등급별 보증공급액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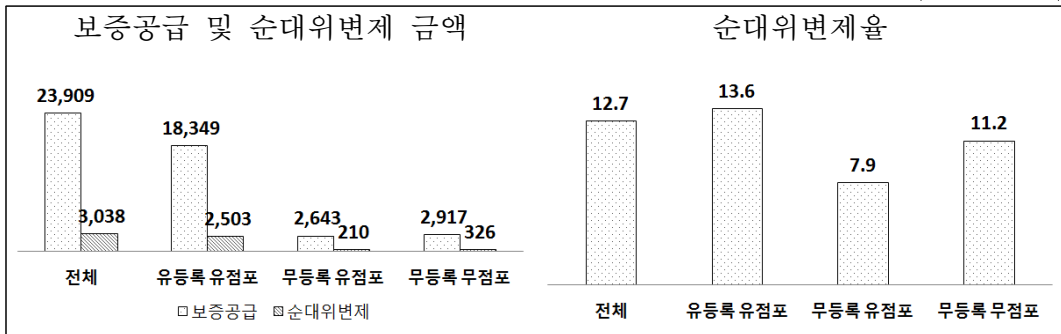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무등급	합계
유등록·유점포	0.6	1.2	1.6	2.5	3.7	35.8	33.6	16.9	3.5	0.6	0.0	100
무등록·유점포	1.5	3.9	6.6	9.8	16.3	22.8	22.9	10.5	2.5	1.1	2.0	100
무등록·무점포	3.3	5.2	6.5	11.4	19.2	24.7	16.0	10.6	2.8	0.4	0.0	100
전 체	1.0	2.0	2.8	4.4	6.9	33.0	30.3	15.4	3.3	0.7	0.3	100

□ 대위변제 현황

- 금융소외의 사업유형별 대위변제율은 ‘유등록·유점포’가 13.6%로 가장 높음
- ‘무등록·유점포’의 대위변제율은 7.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그림 3] 사업유형별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



- 신용등급이 낮아짐에 따라 대위변제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1~5등급까지의 대위변제율은 완만하게 상승한 반면, 6등급 이후 큰 폭으로 상승
- 사업유형별 6~8등급 대위변제율은 ‘유등록·유점포’가 다른 사업유형 대비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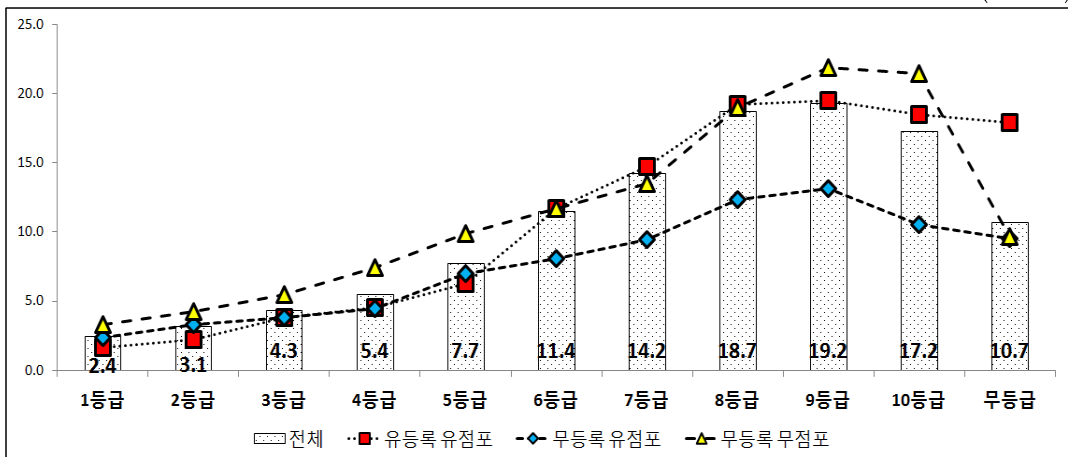
<표 3> 신용등급별 대위변제율

(단위: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무등급	전체
유등록·유점포	1.6	2.2	3.8	4.5	6.3	11.7	14.7	19.2	19.5	18.5	17.9	13.6
무등록·유점포	2.4	3.3	3.8	4.4	7.0	8.1	9.4	12.3	13.1	10.5	9.5	7.9
무등록·무점포	3.3	4.3	5.5	7.4	9.9	11.7	13.5	19.0	21.9	21.4	9.6	11.2
전 체	2.4	3.1	4.3	5.4	7.7	11.4	14.2	18.7	19.2	17.2	10.7	12.7

[그림 4] 신용등급별 대위변제율

(단위: %)



- 전체 대위변제율에 대한 신용등급별 기여율²⁾은 7등급이 33.8%로 최대
- 6~8등급의 기여율은 86.2%로 전체 대위변제율 결정에 상당한 영향

<표 4> 신용등급별 대위변제 기여율

(단위: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무등급	전체
유등록·유점포	0.1	0.2	0.4	0.7	1.4	25.3	29.9	19.7	4.1	0.7	0.1	82.4
무등록·유점포	0.0	0.1	0.2	0.4	1.0	1.6	1.9	1.1	0.3	0.1	0.2	6.9
무등록·무점포	0.1	0.2	0.3	0.8	1.8	2.8	2.1	1.9	0.6	0.1	0.0	10.7
전 체	0.2	0.5	0.9	1.9	4.2	29.7	33.8	22.7	5.0	0.9	0.2	100.0

2) 기여율 = 개별신용등급의 순대위변제금액 / 전체 순대위변제금액 × 10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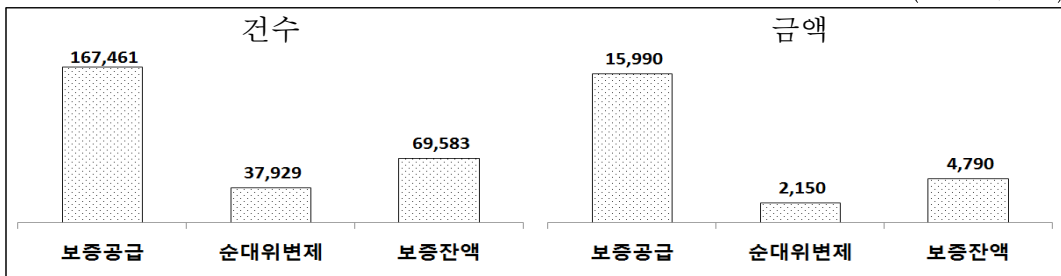
사업자 대상 핫살론

□ 전체 현황

- (보증지원 규모) 1조 5,990억원 (16만 7,461건)
- (보증잔액) 4,790억원 ('17.6월말 기준)
- (누적 대위변제 규모) 2,150억원 (3만 7,929건)
- (누적 대위변제율) 13.4%

[그림 6] 핫살론(사업자) 전체 현황

(단위: 건,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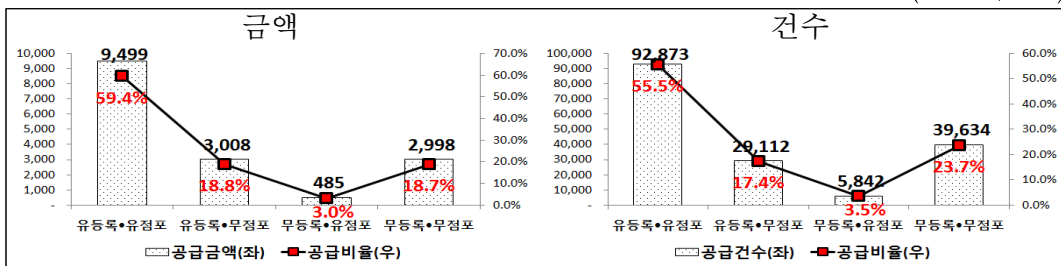


□ 보증공급 현황

- 핫살론의 사업유형별 보증공급 금액은 '유등록·유점포'가 9,499억원 (59.4%)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
-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도 '유등록·유점포'가 9만 2,873건(55.5%)으로 최대

[그림 7] 사업유형별 보증공급 현황

(단위: 건, 억원)



- 신용등급별 보증공급액 비율은 6등급이 26.6%(4,249억원)로 최대
 - 보증공급액에서 6등급 이하 신용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67.4%로 과반 이상을 차지, 그러나 금융소외(83%) 대비 낮은 수준
 - 신용등급별 보증공급액 비율은 사업유형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음 반면, 금융소외는 6등급 이하 신용등급에서 '유등록·유점포'가 다른 사업유형 대비 보증공급액 비율이 높음

<표 5> 신용등급별 보증공급액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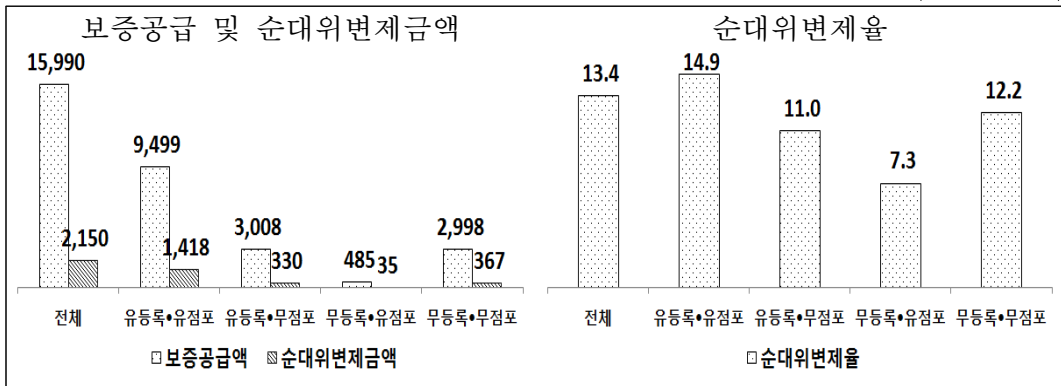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무등급	합계
유등록·유점포	1.3	3.4	3.4	8.3	15.1	25.3	26.6	11.4	1.4	0.3	3.6	100.0
유등록·무점포	2.3	4.6	4.2	9.5	16.9	26.7	23.8	10.3	0.9	0.2	0.6	100.0
무등록·유점포	1.0	4.2	3.1	9.8	14.6	21.6	23.8	12.0	2.5	1.3	6.0	100.0
무등록·무점포	1.1	3.1	3.0	8.1	15.9	31.2	27.0	9.1	0.6	0.1	1.0	100.0
전체	1.4	3.6	3.5	8.5	15.6	26.6	26.1	10.8	1.2	0.2	2.6	100.0

□ 대위변제 현황

- 햇살론의 사업유형별 대위변제율은 '유등록·유점포'가 14.9%로 가장 높음
 - '무등록·유점포'의 대위변제율은 7.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그림 8] 사업유형별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



- 신용등급이 낮아짐에 따라 대위변제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1~5등급까지의 대위변제율은 완만하게 상승한 반면, 6등급 이후 큰 폭으로 상승
 - 신용등급에 대한 사업유형별 대위변제율을 보면, '유등록·유점포'가 1·10등급을 제외한 모든 신용등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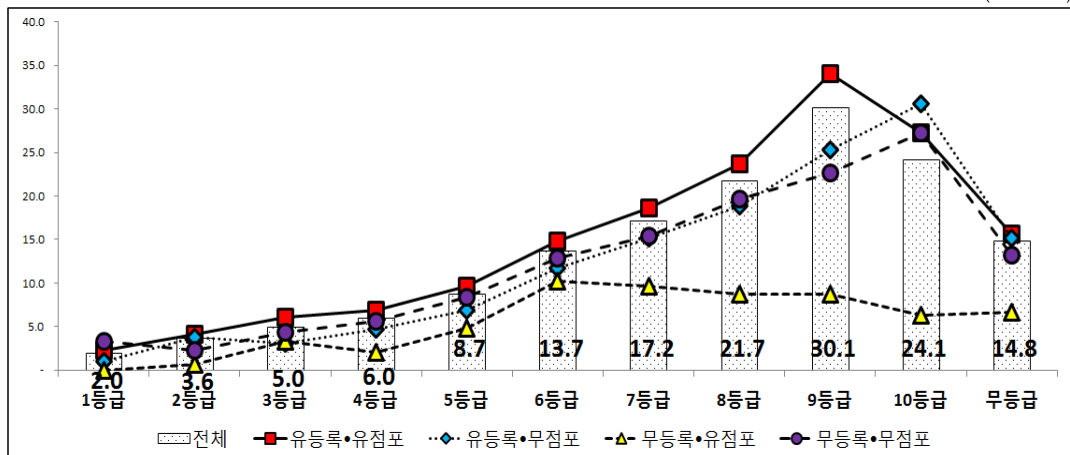
<표 6> 신용등급별 대위변제율

(단위: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무등급	전체
유등록·유점포	2.2	4.1	6.0	6.8	9.6	14.8	18.7	23.7	34.0	27.2	15.7	14.9
유등록·무점포	1.0	3.8	3.0	4.7	6.8	11.7	15.1	18.8	25.3	30.6	15.2	11.0
무등록·유점포	0.0	0.7	3.3	2.1	4.8	10.3	9.7	8.8	8.7	6.3	6.6	7.3
무등록·무점포	3.3	2.2	4.3	5.6	8.3	12.8	15.4	19.6	22.7	27.3	13.2	12.2
전체	2.0	3.6	5.0	6.0	8.7	13.7	17.2	21.7	30.1	24.1	14.8	13.4

[그림 9] 신용등급별 대위변제율

(단위: %)



- 전체 대위변제율에 대한 신용등급별 기여율은 7등급이 33.3%로 최대
 - 5~8등급의 기여율은 87.8%로 전체 대위변제율 결정에 상당한 영향
 - 사업유형별로는 '유등록·유점포'의 기여율이 65.9%로 가장 높음

<표 7> 신용등급별 기여율

(단위: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무등급	전체
유등록·유점포	0.1	0.6	0.9	2.5	6.4	16.6	21.9	12.0	2.1	0.3	2.5	65.9
유등록·무점포	0.0	0.2	0.2	0.6	1.6	4.4	5.0	2.7	0.3	0.1	0.1	15.3
무등록·유점포	0.0	0.0	0.0	0.0	0.2	0.5	0.5	0.2	0.0	0.0	0.1	1.6
무등록·무점포	0.0	0.1	0.2	0.6	1.8	5.6	5.8	2.5	0.2	0.0	0.2	17.1
전 체	0.2	1.0	1.3	3.8	10.1	27.1	33.3	17.4	2.6	0.4	2.9	100.0

4

결론

□ 종합

- 햇살론 대위변제율(13.4%)이 금융소외 대위변제율(12.7%) 보다 다소 높음
 - 햇살론의 건당 평균 보증금액은 금융소외 대비 약 255만원 많음에 따라 대위변제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 건당 평균 보증금액 : (햇살론) 955만원 > (금융소외) 700만원
 - 또한 햇살론의 대출금리가 금융소외 대비 약 3%p 높은 수준으로 금리차이가 대위변제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 * 햇 살 론 대출금리 : 10.5% 이하
 - * 금융소외 대출금리 : 7.3% 이하
- 금융소외와 햇살론의 사업유형별 대위변제율은 '유등록·유점포'가 가장 높고, '무등록·유점포'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일반적으로 신용등급과 대위변제율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 금융소외의 경우, '유등록·유점포'는 6등급 이하 저신용등급의 보증

공급 비중이 90.5%로 이로 인한 대위변제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

* (유등록·유점포) 90.5% > (무등록·유점포) 61.8% > (무등록·무점포) 54.5%

- 그러나 햇살론의 경우, 6등급 이하 저신용등급에서 사업유형별 보증 공급 비율에는 차이가 없음

□ 시사점

- 금융소외 및 햇살론 사업은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등록·무점포 사업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미가 큰 사업
- 특히, 무등록 혹은 무점포 사업자의 대위변제율이 유등록·유점포 사업자의 대위변제율보다 낮게 측정된 것은 제도권 금융을 통해 이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확대시켜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짐
- 다만, 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실태파악 등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권장하여 보증공급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출금리 차이가 대위변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현재의 햇살론 대출금리는 다른 대부업체나 카드론보다는 낮지만, 금융소외 대출금리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나 조정이 필요
- 향후, 금융소외나 햇살론의 원천데이터를 통해 대위변제율에 대한 사업형태별 특성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논문공모 수상작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효과성 검증 :
금융거래 및 경영개선 정도가 지원제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양우령

신용보증재단중앙회

Korea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효과성 검증: 금융거래 및 경영개선 정도가 지원제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IT경영전공
양우령

<요약>

본 연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재단의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자금 확보와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을 실제로 해소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한 2016 소상공인지원효과 데이터와 2016기업경기실사지수(GBSI) 데이터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소상공인지원효과 데이터의 경우 지원제도의 효과성과 지원제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구조화된 연구모형을 수립하여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단순, 다중) 및 구조방정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자금 관련 문제를 개선시켜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용보증지원제도의 만족도에 대해 금융거래 영향요인과 경영개선효과 요인이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다중회귀분석결과 신용보증지원이 경영개선효과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구조방정식분석 결과로 금융거래 영향요인으로 적기대출이 가능한 것, 그리고 경영개선효과의 경우 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가 가장 효과적임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원제도 만족도 고취를 위해서는 지원 자격 조건의 완화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더 나은 우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하는 개선된 방안은 꾸준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금융거래, 경영개선, 만족도

I.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 둔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간의 경쟁으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새로운 성장 동력 부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실업률의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해 통계청(2017)의 발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16년 만에 미국의 실업률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2017 한국포럼(The KOREA FORUM 2017)의 두 번째 세션인 ‘공정성장, 어떻게 실현하나’에서 전문가들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한국 경제에서 어떻게 공정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 횡포 금지, 산업분야 규제 해결, 창업 활성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한국일보 인터넷 기사, 2017).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성장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유망산업분야의 규제 해결 등은 정부가 앞장서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지적 또한 한 면만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실업률 증가의 여파는 기존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 둘 경우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직이나 퇴직을 망설이게 한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취업 자체에 있어서 난항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실업자들이 취업 시장에 비해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실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창업 선도 대학에서의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광주일보, 2017), 소상공인의 창업을 증가(KB 지식비타민, 2015) 등의 결과를 보면 창업시장이 변화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청(2015)의 우리나라 창업에 대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창업기업은 2012년 166만개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데 반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이 중 40.7만개(24.5%)로 11년 대비 6.8% 증가했다. 이는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기반 업종이 창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특별한 기술이 부족한 보통 사람들의 창업은 진입장벽은 낮지만 창업에 성공할 확률 또한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업종의

창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따라서 창·폐업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업종은 대부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은 우려할만하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5).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5)의 자료에 따르면 특별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영업 과잉 공급 및 풀림현상에 따른 경쟁 강화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다양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창업실패로 인해 부가적인 신용상의 문제와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포커스(2016)에 의하면 소상공인의 40%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은 평균 약 1천600만원의 빚을 떠안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창업한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2년째에 53.7%였으며, 3년째 62.0%, 4년째 66.6%, 5년째는 69.1%까지 치솟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기실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지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2016기업경기실사지수(GBSI)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각 지역에서 창업을 시도하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점점 악화되는 경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16년 4분기의 경기실적에 대해서는 매우 악화 또는 다소 악화를 선택한 응답자들 중 1785명(82.3%)이 경기실적이 좋지 않은 주된 이유도 내수 및 수출 수요의 감소라고 응답했다. 경기 전망 또한 매우 악화 또는 다소 악화를 선택한 응답자들 중 1611명(83.2%)이 그 이유를 내수 및 수출 수요의 감소라고 응답했다. 경기전망에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런 결과는 창업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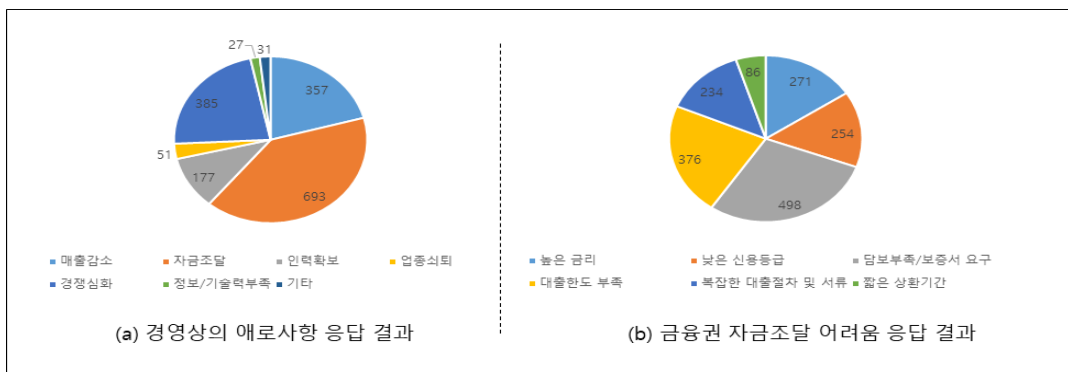
그러나 불경기로 인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결국 가장들로 하여금 재취업이나 창업의 형태로 제 2의 삶을 영위하게 강요하고 있다.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업종의 창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든, 실업률의 증가에 대한 대안이든

창업이 개인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다. 즉, 어떻게든 긍정적인 창업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대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창업을 희망하거나 이미 창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할 방안을 위한 다양한 단서들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창업한 소상공인들을 통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중소기업청(2015)의 보도자료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보고서(2015)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자금확보 어려움’(74.6%)을 가장 큰 장애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2016기업경기실사지수(GBSI)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경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총 응답자 1,721명(결측 80명) 중 693명(40.3%)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금융권에서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는 유효응답자 1,719명 중 담보 부족 및 보증서 요구가 498명(29.0%)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한도 부족이 376명(21.9%), 높은 금리가 271명(1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그들의 실정과 거의 일치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는 최근까지 그들에게 주어지는 지원 정책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떤 부분을 도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해결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한다.

<그림 1> 2016기업경기실사지수(GBSI) 데이터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의 효과성에 대해 검증한다. 이는 재단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확보와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의 실제 해소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용보증지원효과 파악을 위해 보증지원 전과 보증지원 후를 데이터를 비교한다. 그리고 신용보증지원과 관련한 금융거래 및 경영개선 정도가 지원제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화된 연구모형을 구축한 후 이를 확인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용보증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금융거래적 측면과 경영개선 효과 측면에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게 한다. 또한 신용보증지원제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 및 경영개선 정도에 대한 인과관계분석 결과, 향후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단서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소상공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소상공인의 개념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 2조에 의하면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이다.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를 의미하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1997년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일반화 되면서 소상공인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됐으며 이전까지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시켰다(이병구, 2010). 소상공인

은 소규모로 출발하여 영세성을 계속 유지하며 소상공인으로 남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체의 규모를 확장할 기업도 일정기간 동안 소상공인의 범주에 포함되게 된다(이병구, 2010).

2) 소상공인의 특성

정성한·김해룡(2001), 빈봉식·박정기(2002), 정영순(2008) 등의 연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특성은 창업자의 학력, 창업경험 등의 배경적 요인과 함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통제위치, 모호성 수용능력 등으로 구분되는 심리적 요인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김순태, 2013). 소상공인의 경우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전병찬 외(2000), 빈봉식·박정기(2002), 서근하(2006), Miller & Friesen(1982)의 연구 등에서 확인된 내용을 요약하면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고용창출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작은 규모로 활동하며 매우 영세할 뿐 아니라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창업을 하며, 창업자금 조달은 타인 자본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며, 사업주와 경영인이 동일한 개인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업체 종사자들은 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이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기술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다양한 이유로 실직상태에 있는 이들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조규연, 2013). 김순태(2013)가 정리한 소상공인의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영자특성

선행 연구에 의하면 경영자 특성은 경영관리능력과 산업전문인력, 자원조달 능력, 기술확보능력 그리고 체계적인 창업과정 수행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산업 환경과 외부지원 시스템 환경 또한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봉상 외, 2003). 또한 박봉삼(2007)은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를 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성장단계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영업을 위해서는 준비단계에서 창업자특성, 사업아이템의 선정, 점포특성의 3가지 요인에 대한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지원방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초기단계에서는 고객 및 종업원관리, 자금관리의 2가지 요인이, 성장단계에서는 마케팅능력, 조직구조, 시장지향성의 3가지 요인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손홍재(2006)는 배경적인 특성보다는 소상공인 개인의 특성 중 심리적인 특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창업가의 성취욕구와 책임의식이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창업 아이템에 대한 관심 정도는 창업의 성공률과 비례한다고 하였다.

(2) 자원특성

자원특성은 경영성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원 확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김순태 외, 2014). 빈봉식·박정기(2002), 손홍재(2006) 등은 소상공인의 상권매력도와 입지우월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권의 발전성, 규모, 상권의 수요층, 고객진입성, 인근 대규모시설, 점포 수, 교통 접근성, 접근용이성, 점포주변과의 조화, 점포의 가시성 등의 항목이 소상공인 성공을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원특성은 창업자특성 및 심리적 특성, 자원능력 등을 포함한 기술습득, 인력확보, 고객확보 및 접근성, 업종의 선택 및 차별화, 미래 유망업종 등의 자원 확보 용이성 등이 자원특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김순태, 2010).

(3) 환경특성

환경 특성은 소상공인 영업현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과 미래의 불확실성 및 영업지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특성은 유사상권의 밀집도, 기존시장과 신규시장의 경쟁도, 가격 등의 대내외 환경적 요인들을 감안한 사전준비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김순태 외, 2014). Zahra(1996), Macmillan & Day(1987), 이충섭 외(2009) 등은 그들의 연구에서 경쟁자 수, 경쟁업체 존재여부, 새로운 진입장벽, 고객의 기호변화, 상품 및 서비스의 치열한 경쟁, 고객수요의 변동성, 시장

의 지속성장 가능성, 고객욕구의 다양성과 복잡성, 유사업종 간 매출변화 및 수익성 변화, 시장점유율 등의 환경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orter(1990)는 기업환경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는 산업특성과 상대적 경쟁정도에 의해 변화하며, 산업내의 경쟁정도는 신규 진입기업의 위협, 공급자의 교섭력, 대체적인 제품과 서비스, 업체 간의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상공인의 성장단계

소상공인은 창업에서부터 필요자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장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과에 미치는 요인의 역할은 발전 단계별로 그 중요성이 변화될 수 있다(조규연, 2013).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는 관점에 따라 여러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성장단계의 특징 또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장수덕, 2007). 예를 들어 기업의 성장단계를 탄생·성장·성숙·재생·쇠퇴기(Miller & Friesen, 1982)로 구분하기도 하며, 창업·성장·성숙(Timmons, 1994)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생성·성장·성숙기(Lippitt & Schmidt, 1967)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PLC(product life cycle)와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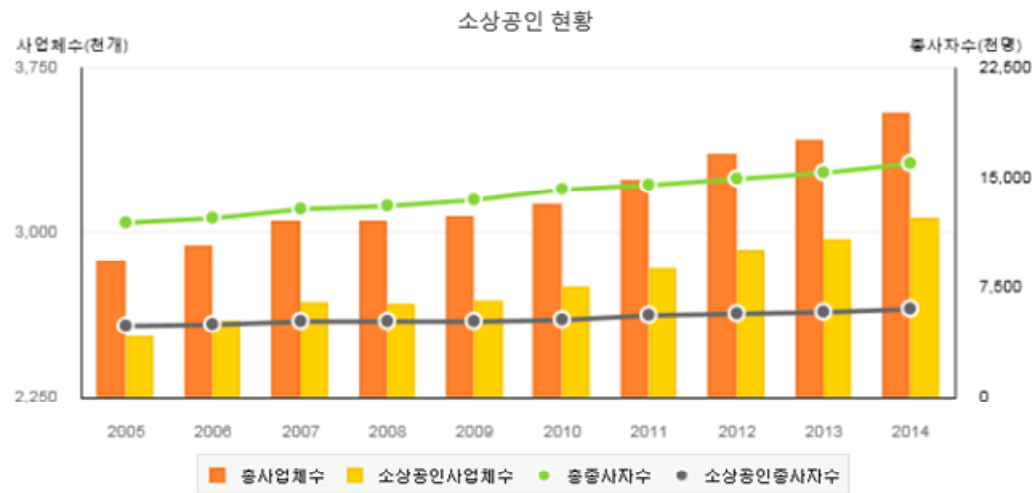
박춘래 외(2009)에 의하면 소상공인은 소규모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다양한 생산 방식과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과 유사한 성장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즉, 벤처기업을 창업단계·상업화단계·성장단계·성숙단계(최종열 외, 2007)로 구분한 것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성장단계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창업 각 단계별로 필요한 요인들과 지원되어야 할 부분을 유사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4) 국내 소상공인 현황

우리나라는 1997년 IMF체제가 시작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혹은 도산을 겪음과 동시에 우리 사회

의 중심인 중산층이 붕괴되었다. 그에 따라 실업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속에 단기적인 대책 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창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하였다. 정부의 대책에 따라 창업 열기는 점점 더해져갔고 사업체의 규모가 점점 많아졌다. 그리고 그 후 소상공인들 간의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빈봉식 외, 2002).

〈그림 2〉 소상공인 현황



통계청에 의하면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는 약 354만개이며 이 중 소상공인은 약 306만개로 전체사업체의 약 86.4%를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605만 명으로 총 종사자수 대비 37.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수의 경우 2010년 87.9%를 정점으로 계속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종사자 수의 비중 또한 2007년 40.0%에서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비 소상공인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은 정체 또는 하락 상태임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 창업과 함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퇴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소상공인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 및 흡수를 위한 추가여력이 부족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비해 전체사업체에서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므로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김철민, 2015). 즉, 향후

소상공인들이 사회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서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은 전반적으로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열악할 경우 타인자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김순태, 2013). 이런 이유로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창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지나친 소상공인 창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5년 5월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등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 때문에 지원의 관점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및 실업대책의 차원 뿐 아니라 중소기업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 발판이라는 성장 동력 관점을 중시하게 되었다(구병성, 2009). 2015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자금지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자금유자가 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는 전체 예산 중 자금보조가 총 예산의 58.0%를 차지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용자를 통한 자금지원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자금지원에 집중하기 때문이다(김철민, 2015). 방법은 다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자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교육이나 상권정보시스템의 운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조성 지원책이 시행(이병구, 2010)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의 자금지원에 한정하고자 하였다.

2.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신용보증제도의 의의와 유형

신용보증이란 장래의 어느 시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인 신용을 기준으로 주채무자 대신 제3자가 채무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장석주, 2017). 따라서 신용보증제도란 신용력이 미약한 기업들의 자금조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경감시켜주는 독자적인 금융시스템이며 신용보증제도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성에 정부출연과 같은 공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빈곤계층 및 영세농민에게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차원의 보증제도와 구분된다(이민주, 2014).

보증제도는 운영주체 및 운용메커니즘 기준으로 분류하면 회원기업들의 출연 혹은 출자를 재원으로 하는 상호보증제도, 정부의 출연 및 출자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보증제도, 독립된 보증기관 없이 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운용되는 융자보증제도로 나눌 수 있다.

2) 신용보증제도의 필요성

소상공인은 경기변동에 과도하게 반응한다. 특히 종사자가 많은 도, 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등의 업종의 경우 경기가 조금만 악화되더라도 자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앞선 상황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이 대출을 고려하기 쉽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신용평가에 활용할 공개된 정보의 양이 매우 적은 수준이고 정보의 수집과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상업은행의 입장에서조차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더욱 꺼리게 된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을 위한 충분한 담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상업금융이 요구하는 조건에 취약하다. 또한 그들은 과도한 경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은행들의 위험회피경향 등은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신용보증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3) 신용보증제도의 효과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신용보증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는 정책을 시행했다. 김정렬 외(2014)가 신용보증지원이 경기 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행한 후의 변화를 측정하면서 신용보증 증가율과 GDP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신용보증 편익과 신용보증 비용을 비교 분석할 경우 정책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보증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편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용보증 지원 정책은 정책성과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우소동(2012)의 연구에서는 신용보증이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개선하였으며, 거시 경제적으로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산업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선행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신용보증제도가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역량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

김정렬 외(2014)는 국내 신용보증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복지원문제 완화, 장기보증 지양,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대체로 신용보증기관간의 중복 지원 문제와 정책금융기관의 중복지원문제 등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경우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토와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장기보증의 문제 또한 보증의 조기졸업 유인제도 등을 통해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제도의 경우 자금조달에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 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운영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한다(김정렬 외, 2014). 이런 결과는 어떤 문제를 개선하든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된다.

3. 우리나라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됨에 따라 신용보증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1989년,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었고 1996년에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다. 현재 국내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3원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로 조금씩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혁신 기업을 위주로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은 벤처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소재의 영세기업에 대해 소액 위주로 보증지원업무를 수행한다(김정렬 외, 2014).

Ⅲ. 연구모형 및 가설

연구목적에서 제시한 것처럼 본 연구는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의 지원 효과 분석 자료를 근거로 ①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의 이용 목적을 파악하고, ②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경제난 예방효과를 파악하며 ③ 신용보증 지원효과를 실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보증지원 전과 보증지원 후의 성과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④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지원의 활용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거래적 측면과 경영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 이들 요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한 신용보증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이의 결과를 통해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단서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⑤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제도 개선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개선할 단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신용보증지원은 신용보증 편익과 신용보증의 비용 분석 결과, 정책성고가 높을 뿐 아니라 신용보증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렬 외, 2014). 또한 신용보증이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개선과 거시 경제적 차원의 긍정적 영향 뿐 아니라 산업의 균형발전에도 기여(우소동, 201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가설 1. 신용보증지원은 소상공인들의 자금사정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김정렬 외, 2014; 우소동, 2012)들 뿐 아니라 2016년 신용보증 지원효과 데이터 분석 결과도 담보문제해결, 대출심사 간소화, 대출한도 상황, 금융비용 절감, 적기대출 가능과 같은 금융거래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금융 거래 영향요인에 미치는 정도가 소상공인들의 보증지원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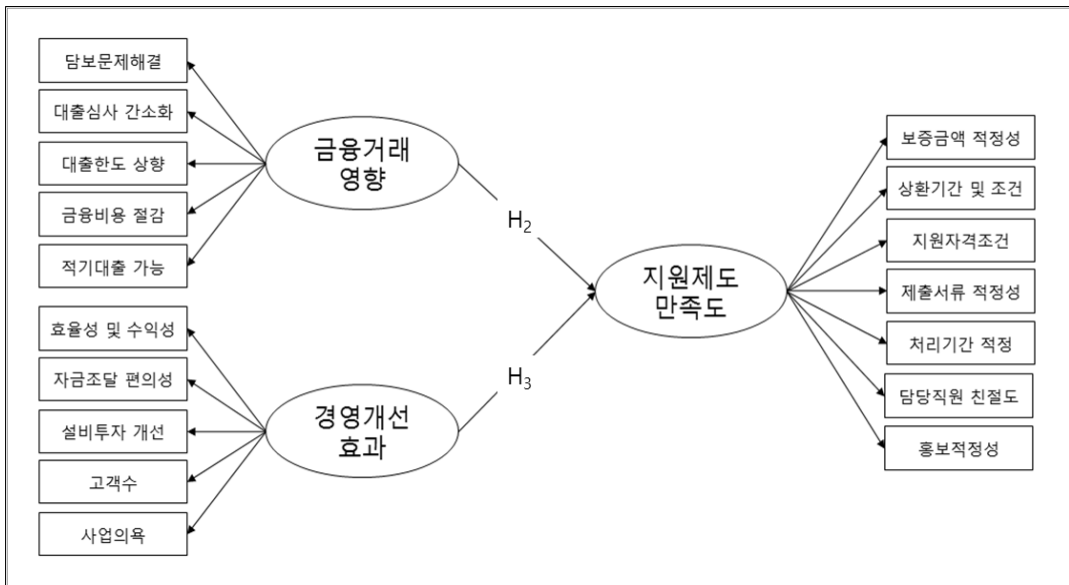
가설 2. 금융거래 영향은 지원제도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2016년 신용보증 지원효과 데이터 분석 결과는 경영개선 효과 측면에서 효율성 및 수익성, 자금조달 편의성, 설비투자 개선, 고객 수, 사업의욕과 같은 경영개선 효과에 기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경영개선 효과에 미치는 정도가 소상공인들의 보증지원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3. 경영개선 효과는 지원제도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설정된 연구모형과 가설들은 아래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 연구모형 & 가설



IV. 실증분석

1. 자료 조사 및 척도

본 연구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2016년에 수행한 소상공인지원효과 조사설문지와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제공된 데이터는 총 199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 대상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경기, 전북, 대전, 부산, 인천, 울산, 충북, 광주, 서울, 전남, 충남, 제주, 대구, 강원, 경남, 경북 지역 등 여러 지역에 분포 돼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척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거래영향은 담보문제해결 1개 문항, 대출심사 간소화 1개 문항, 대출한도상황 1개 문항, 금융비용 절감 1개 문항 및 적기대출가능 1개 문항으로 총 5개 문항이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경영개선효과는 효율성 및 수익성 1개 문항, 자금조달편의

성 1개 문항, 설비투자개선 1개 문항, 고객 수 1개 문항 및 사업의욕 1개 문항으로 총 5개 문항이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지원제도 만족도는 보증금액 적당성 1개 문항, 상환기간 및 조건 1개 문항, 지원자격조건 1개 문항, 제출서류적정성 1개 문항, 처리기간 적정 1개 문항, 담당직원 친절도 1개 문항 및 홍보적정성 1개 문항으로 총 8개 문항이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2. 신용보증지원 효과 분석 결과

신용보증지원의 효과에 대한 인과관계 연구에 앞서, 먼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2016년 신용보증 지원효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보증 이용 목적 등에 대한 일반적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연구목적에서 제시한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의 이용 목적과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경제난 예방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신용보증제도 이용목적에 대한 분석 결과, 급여 및 임대료 등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1259명(63.15%)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 설비 구입 등 투자 확대를 꾀한 응답자는 376명(18.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보증을 이용한다는 소상공인은 200명(10%)이었다. 이런 결과는 소상공인들이 창업 이후 운영 중에도 운전 자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소상공인에게 창업을 위한 자금부터 운영을 위한 자금까지 창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금이 고민거리인 것을 의미하며 그들에게 자금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의 제공받는 보증지원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1165명(58.5%)의 소상공인이 보증지원을 통해 국민경제가 발전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643명(32.2%)의 소상공인이 다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설문 대상이 되었던 소상공인

공인 중 대다수가 보증지원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함을 증명한다.

소상공인들이 보증지원 전과 후를 비교하여 자신들의 자금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기 위한 분석 결과, 우선 보증지원을 받기 전 861명(43.2%)의 소상공인이 자금사정이 다소 곤란했다고 답했으며 204명(10.2%)이 매우 곤란하다고 답했다. 과반수가 조금 넘는 53.2%의 소상공인이 자금에 있어서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자금사정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지원이 제공된 결과, 1085명(54.4%)의 소상공인이 자금사정이 다소 원활해졌다고 답했으며 398명(19.9%)의 소상공인이 매우원활한 상태가 되었다고 답했다. 보증지원 전과 후를 전체적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은 자금에 관한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의 비율을 53.4%에서 2.7%로 줄였음을 알 수 있다. 자금 관련 문제를 겪지 않고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들 중 분명 보증지원 전과 후의 답을 같게 한 경우도 있겠지만 비율로 비교해보았을 때 확연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도 보증지원 전 자금사정은 평균적으로 2.49(1: 매우 곤란, 2: 다소 곤란, 3: 보통)로 다소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증지원 후 자금사정은 평균적으로 3.93(3: 보통, 4: 다소 원활, 5: 매우 원활)으로 다소 원활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차이는 -1.447(표준편차, 1.034, $t=-61.696$,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은 소상공인 개개인에게도 분명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인지하는 신용보증지원은 소상공인들의 자금사정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어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1> 2016 신용보증지원 후 자금사정 파악

	매우곤란	다소곤란	보통	다소원활	매우원활
보증지원 전	204명(10.2%)	861명(43.2%)	715명(35.8%)	183명(9.2%)	32명(1.6%)
보증지원 후	6명(0.3%)	48명(2.4%)	458명(23.0%)	1,085명(54.4%)	398명(19.9%)

나아진 자금사정은 소상공인의 창업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들의 보증지원 전 후의 매출액 및 순이익 비교를 통해 보증지원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보증지원을 받은 후 매출액의 증감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1083명(54.6%)의 소상공인이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가장 많은 570명(28.9%)의 응답자가 매출액이 5% 미만으로 증가했다고 답했다.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이들이 112명(5.7%)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결과는 매출액이 증가한 소상공인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표 2> 2016 신용보증지원 후 매출액 증감 정도 파악

	0%	5%미만	5%-10%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20%이상
매출액 증감 정도	501명 (25.4%)	570명 (28.9%)	511명 (25.9%)	236명 (12.0%)	85명 (4.4%)	92명 (4.7%)

매출액이 증가한 와중에 순이익 또한 증가해야 창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증지원을 받은 후 소상공인들의 순이익 증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1039명(52.6%)의 응답자가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608명(31%)의 응답자가 순이익이 5%미만으로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140명(7.2%)이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보증지원을 받은 후 적더라도 순이익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3> 2016 신용보증지원 후 순이익 증감 정도 파악

	0%	5%미만	5%-10%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20%이상
순이익 증감 정도	559명 (28.3%)	1039명 (52.6%)	510명 (26.0%)	189명 (9.8%)	64명 (3.3%)	65명 (3.3%)

소상공인은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목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증지원의 활용이 금융거래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위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 측면에 관련한 모든 항목에서 신용보증지원의 활용이 해당 항목에 어느 정도 기여했음이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2016 신용보증지원이 금융거래 측면 기여 정도

	전혀 기여 못함	기여 못함	변화 없음	기여	매우 기여
담보문제해결	26명(1.4%)	56명(2.9%)	394명(19.9%)	1,109명(56.1%)	410명(20.9%)
대출심사 간소화	16명(0.8%)	78명(4.1%)	484명(24.7%)	1,048명(52.9%)	369명(18.8%)
대출한도 상향	23명(1.2%)	89명(4.6%)	572명(28.9%)	977명(49.4%)	334명(17.1%)
금융비용 절감	14명(0.7%)	56명(2.9%)	279명(14.1%)	1,059명(53.5%)	587명(29.6%)
적기대출 가능	17명(0.9%)	48명(2.6%)	317명(16.1%)	1,106명(56.1%)	508명(25.8%)

또한 신용보증지원의 활용이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 효과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금융거래 측면과 마찬가지로 경영개선 효과 측면에 관련한 모든 항목에서 신용보증지원의 활용이 해당 항목에 어느 정도 기여했음이 모두 가장 높은 응답을 얻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 5> 2016 신용보증지원이 경영개선 효과 측면 기여 정도

	전혀 기여 못함	기여 못함	변화 없음	기여	매우 기여
효율성 및 수익성	16명(0.8%)	53명(2.8%)	390명(19.8%)	1,196명(60.3%)	340명(17.3%)
자금조달 편의성	8명(0.4%)	41명(2.1%)	233명(11.7%)	1,224명(61.5%)	489명(24.7%)
설비투자 개선	17명(0.9%)	54명(2.7%)	413명(20.8%)	1,113명(56.4%)	398명(20.1%)
고객수	27명(1.4%)	81명(4.2%)	742명(38.0%)	374명(44.2%)	272명(13.8%)
사업의욕	21명(1.1%)	29명(1.5%)	252명(12.8%)	1,106명(55.6%)	587명(29.4%)

3.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연구모형의 <가설 2>와 <가설 3>의 검증을 위해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0.896~0.909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최초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표준적재치 0.5 미만으로 제거한 홍보적정성의 1개 문항을 제외하고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개념신뢰도는 0.896~0.916, 평균 분산추출지수(AVE)는 0.629~0.687로 나타나 수렴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다. 타당도 분석 결과¹⁾는 <표 6>에 신뢰도와 함께 제시하였다.

<표 6> 신뢰도와 타당도

	최초 문항	최종 문항	Cronbach's α	개념신뢰도	AVE
금융거래영향	5	5	0.842	0.896	0.633
경영개선효과	5	5	0.859	0.916	0.687
지원제도만족도	8	6	0.866	0.909	0.629

4. 상관관계분석

변수들의 관계와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변수들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과관계분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평균분산추출지수와 상관계수의 제곱 값인 결정계수와 비교 결과, 판별타당도도 확보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었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아래 <표 7>에 제시하였다.

1) 인과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한 문항들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만 실시하였음

<표 7> 상관관계분석 결과

	1	2	3
1.금융거래영향	(0.633)		
2.경영개선효과	.564**	(0.687)	
3.지원제도만족도	.563**	.498**	(0.629)
평균	3.92	3.85	3.84
표준편차	0.61	0.71	0.63

주: * $p<.05$, ** $p<.01$, ()안은 분산추출지수 값을 표기함

5. 가설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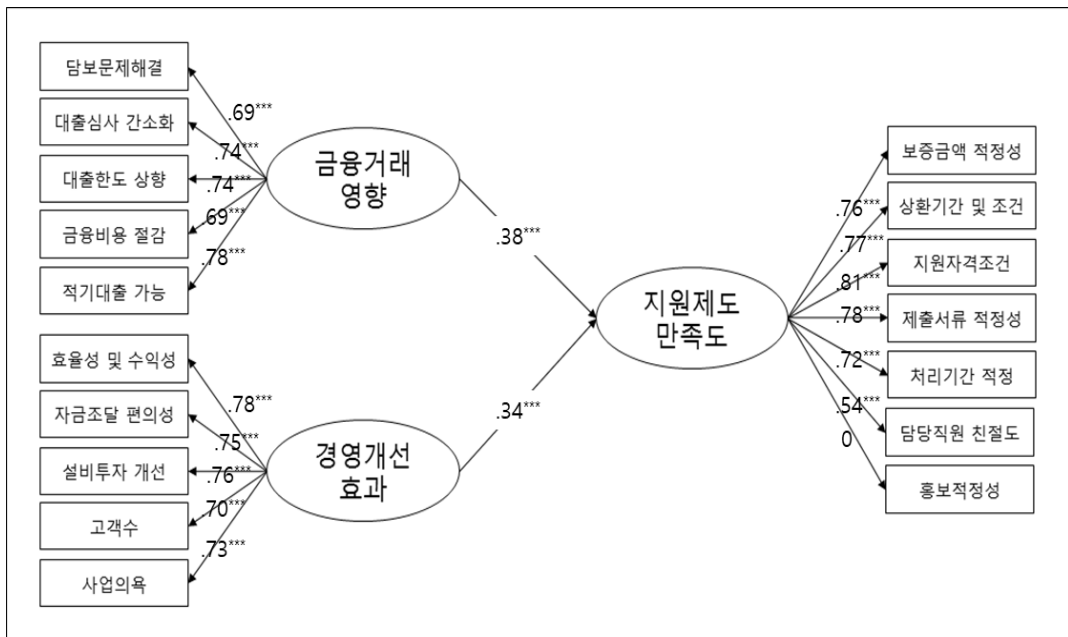
가설검증을 위해 제공된 데이터의 지역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원제도 만족도에 대해 금융거래영향($\beta=.583$,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런 결과는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의 담보문제 해결, 대출심사 간소화, 대출한도 상향, 금융비용 절감 및 적기대출 가능과 같은 금융거래의 긍정적인 영향이 지원제도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한편 지원제도 만족도에 대해 경영개선효과($\beta=.589$, $p<.01$)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 또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이 소상공인들의 효율성 및 수익성, 자금조달 편의성, 설비투자 개선, 고객 수 증가 및 사업의욕과 같은 경영개선효과를 통해 지원제도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3>도 채택되었다.

비록 가설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금융거래영향과 경영개선효과 중 어떤 요인이 지원제도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동일하게 지역을 통제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경영개선효과($\beta=.350$, $p<.01$)가 금융거래영향($\beta=.331$, $p<.01$) 보다 조금 더 지원제도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신용보증지원제도가 소상공인들의 자금 확보 및 운영에도 도움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개선효과가 지원제도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각 변수의 요인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기대출가능(0.78), 대출심사 간소화와 대출한도 상향(0.74), 담보문제해결과 금융비용 절감(0.69)의 순으로 금융거래의 긍정적인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금융거래 영향은 지원제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효율성 및 수익성(0.78), 설비투자 개선(0.76), 자금조달 편의성(0.75), 사업의욕(0.73), 고객 수(0.70)의 순으로 경영개선효과의 긍정적인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경영개선효과도 지원제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원자격조건(0.81), 제출서류 적정성(0.78), 상환기간 및 조건(0.77), 보증금액 적정성(0.76), 처리기간 적정(0.72), 담당직원 친절도(0.54) 순으로 지원제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홍보적정성의 경우 통제하였기 때문에 표준화된 회귀가중 추정치(SRW: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는 도출되지 않았다.

<그림 2>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결과



주: *** p<.001

2) 담당직원 친절도는 상담직원 친절도와 현장직원 친절도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으로 추정하였음

모형적합도($\chi^2=2111.316$, d.f=117, p=.000)는 CMIN/DF=18.045, NFI=0.877, CFI=0.883, RMSEA=0.092로 나타나 지원제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제시된 모형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비해 금융거래영향이 경영개선효과보다 더 지원제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예상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재단의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자금 확보와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을 실제로 해소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향후 신용보증재단이 효과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보증지원은 소상공인들의 자금사정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타인자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창업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 실패가 빈번한 (이병구, 2010)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즉,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양이나 원천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보증지원이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보증지원의 효과성 분석 결과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지

원의 의미와 향후 신용보증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창업 시작부터 운영하는 과정에 창업자금 및 운전자금이 큰 고민거리이며, 보증지원이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매출향상 및 순이익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금융거래 측면에서도 담보문제의 해결, 대출심사 간소화, 대출한도 상향, 금융비용 절감 및 적기대출 가능에 매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효율성 및 수익성과 자금조달의 편의성, 설비투자 개선, 고객 수 증가 및 사업의욕 고취와 같은 경영개선 효과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신용보증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지원 금액의 확대가 1381명(69.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보증료 하향 조정(33.0%), 지원 자격 요건 완화(28.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현행 운영방식의 개선과 함께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신용보증재단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서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사정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을 도와 직접 대출을 가능하게 하면 지원제도의 순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되길 바라는지를 알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공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신용보증 지원제도 개선사항

지원 금액 확대	지원 대상 확대	보증료 하향 조정	신속한 지원	지원자격 요건완화	정책의 홍보강화	경영지도와 자금지원의 병행	기타
1381명 (69.3%)	540명 (27.2%)	649명 (33.0%)	389명 (19.7%)	561명 (28.6%)	285명 (14.6%)	161명 (8.4%)	24명 (1.5%)

셋째, 신용보증지원제도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영향요인과 경영개선효과 요인이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김준기 외(2009)가 직접대출에 의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리대출에 의

해 지원 받은 중소기업들에 비해서 매출액영업이익률 등에서 상당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 직접대출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김정렬 외, 20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원(2011)의 보고서에서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수혜업체가 58.7%로 나타난 것 등은 신용보증지원제도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요인들과 경영개선효과와 관련된 요인들을 통해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비록 가설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금융거래 영향요인과 경영개선효과 요인의 다중회귀분석결과는 신용보증지원 만족도를 높이는데는 신용보증지원이 경영개선효과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구조방정식 결과와 다소 다른 점은 지역통제 여부로 인한 것으로 결론내림). 이런 결과는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경영개선활동이 가능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사전에 창업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창업 후에도 경영자로서 기업가정신을 유지·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증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이수여부, 업종전환의 경우 업종전환교육의 이수여부, 운영자금 지원의 경우 경영개선교육의 이수여부 등을 연계하는 경우 훨씬 더 신용보증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는 금융거래 영향요인으로 적기대출이 가능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경영개선효과의 경우 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가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원제도 만족도 고취를 위해서는 지원자격 조건의 완화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박춘엽 외(2001)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에 있어서 현행 운영방식을 개선, 다양한 대출프로그램의 개발 및 업무처리과정의 리엔지니어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원 대상 및 대출조건의 합리성을 높이고 대출서류의 심사 및 자금지원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좀 더 쉽게 직접 대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용보증재단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보증지원은 그들의 자금 사정을 좋게 함이 분명하다. 하지만 더 나은 우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창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소상공인들부터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하는 개선된 방안은 앞으로 꾸준히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한계점이 도출되어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데이터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된 것으로 구조화된 설문지가 학문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즉, 인과관계연구를 통한 ‘선택과 집중’전략을 도출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좀 더 정교한 설문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상공인들의 업종특성, 개인특성 등이 설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좀 더 다양한 해석을 위한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업종은 운영상황에 대해 좀 더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들의 개인적인 특성 또한 어느 정도 고려되는 경우 좀 더 정교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효과적인 신용보증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단서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다양한 편의(bias)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신용보증지원을 받아야 하는 을의 입장인 소상공인들이 이 설문에 대해 어느 정도 진실성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봉상·용세중·이상천(2003). "벤처기업의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6(2), 3-33.
- 구병성(2009),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국회입법조사처, 5-7.
- 김순태·김문홍(2014), "소상공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 요인이 사업전략 및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0-209.
- 김정렬·김상봉·남주하(2014), "신용보증지원 성과 분석과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 『응용경제』, 16(2), 33-64.
- 김철민(2015), "소상공인현황 및 지원정책분석," : pp.436-437, 446
- 박봉삼(2007), "소상공인 창업의 단계별 성공요인과 지원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춘래·이남주·이충섭(2009), "소상공인의 경영전략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매개효과,"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9(2), 81-99.
- 박춘엽·최용록·전병찬(2001). "21세기 한국기업의 디지털 경영: 소상공인 자금 지원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경영학회 경영관련 학회 통합학술대회, 457-474.
- 빈봉식·박정기(2002),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24(3), 135-158.
- 서근하(2006), "창업가정신과 마케팅활동성이 소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특성과 시장지향성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상공인진흥원(2011),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성과분석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소상공인진흥원.
- 손흥재(2006),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소동(2012), "한국의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연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주(2014), “중소기업신용보증제도의 이해 및 역할 재조명,”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구(2010),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성공요인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석주(2017),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제도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덕(2007),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위험관리: 연령에 따른 위험, 자원기반 완충메커니즘, 그리고 생존,” 벤처경영연구, 10(1), 33-54.
- 전병찬·김정대·박춘엽(2000), “한국의 소상공업의 분포와 함축적 의미,” 『중소기업연구』, 22(1), 147-168.
- 조규연(2013), “소상공인의 창업자 특성과 경영지원서비스가 운영역량 및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중소기업청(2015), “12년 기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실태조사 주요결과 보도자료”(2015년 10월 14일).
- 최종열·오두만·정해주(2007),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BI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29(1), 89-116.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5), “KB 지식 비타민 : 국내 자영업자 현황과 업종별 생멸 통계,”, 15(4), pp.1-5.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2016), “소상공인 회전문창업 실태와 해법의 실마리,” 16(3), pp.4-5
- Lippitt, G., & Schmidt, A. (1967), “Crisis in Developing Organiz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45(6), 102-112.
- MacMillan, I. C., & Day, D. L. (1987), “Corporate Ventures into Industrial Markets: Dynamics of Aggressive Entry,”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29-39.
- Miller, D., & Friesen, P. H. (1982), “Innovation in Conservative and Entrepreneurial Firms: Two Models of Strategic Momentum,”Strategic

- Management Journal, 3(5), 1-25.
- Porter, M.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
- Timmons, J. A. (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4th Ed.), Irwin McGraw Hill.
- Zahra, S. A. (1996), "Technology Strategy and Performance: A Study of Corporate Sponsored and Independent Biotechnology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4), 289-321.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01310501162051&outlink=1&ref=html%3A%2F%2Fsearch.naver.com> (검색일: 2017.07.16.)
-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99698800608549021>(검색일: 2017.07.16.)
- <http://www.hankookilbo.com/v/d02056d5a3aa4b6ab47a2d9b324cb1b2>(검색일: 2017.07.17.)

부록 1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통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Korea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1. 신용보증 현황

(단위 : 건, 억원)

연월	보증공급		보증잔액		운용배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6	414	438	410	433	0.6
1997	1,296	1,031	1,369	1,101	0.8
1998	3,199	2,020	3,391	2,248	1.2
1999	14,059	5,099	14,777	5,300	1.3
2000	21,883	8,058	29,946	10,114	1.7
2001	31,635	11,206	50,076	14,878	2.0
2002	39,963	12,543	70,023	19,326	2.1
2003	49,849	14,839	89,347	23,123	2.2
2004	48,517	15,067	99,688	26,269	2.4
2005	79,929	21,574	136,228	34,133	2.8
2006	77,691	23,717	164,386	40,326	3.1
2007	94,582	27,514	195,808	45,867	3.1
2008	187,878	38,897	306,006	59,893	3.7
2009	467,173	83,909	660,367	111,954	5.3
2010	375,842	67,940	833,412	132,479	6.0
2011	256,434	60,801	835,802	136,088	5.5
2012	275,845	63,581	829,578	135,147	5.0
2013	350,944	77,859	837,659	142,719	4.9
2014	375,150	85,057	756,842	144,501	4.8
2015	448,844	106,386	833,213	162,423	5.0
2016	464,329	111,849	910,813	179,713	5.3
2017.8	338,904	82,455	967,268	189,857	5.3

2-1. 업종별 신용보증 공급현황(건수)

(단위 : 건)

연월	합계	제조업	서비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2002	39,963	9,709		7,084	15,141	6,739
2003	49,849	9,519		8,398	19,360	11,212
2004	48,517	9,806	8,554	8,461	16,736	4,960
2005	79,929	13,558	16,022	16,096	27,390	6,863
2006	77,691	13,882	13,609	14,717	29,145	6,338
2007	94,582	15,200	16,257	18,456	35,022	9,647
2008	187,878	20,555	35,803	51,837	60,943	18,740
2009	467,173	38,424	81,415	100,198	165,107	82,029
2010	375,842	30,810	67,406	79,468	123,483	74,675
2011	256,434	25,710	46,611	58,297	89,143	36,673
2012	275,845	27,492	50,436	62,281	95,798	39,838
2013	350,944	31,349	65,835	78,821	119,970	54,970
2014	375,150	32,659	68,945	86,304	125,982	61,260
2015	448,844	34,125	83,261	108,987	146,282	76,189
2016	464,329	37,248	87,311	109,251	152,417	78,102
2017.8	338,904	34,484	82,299	82,038	109,175	30,908

* 2004년부터 '건설업'을 '기타'에 포함(건설업 : 2002년 1,290건, 585억원 / 2003년 1,360건, 544억원)

2-2. 업종별 신용보증 공급현황(금액)

(단위 : 억원)

연월	합계	제조업	서비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2002	12,543	5,071		1,487	3,798	1,603
2003	14,839	4,771		1,795	4,926	2,801
2004	15,067	5,293	2,092	1,772	4,375	1,535
2005	21,574	7,239	3,426	2,808	6,448	1,653
2006	23,717	8,217	3,122	2,874	7,529	1,975
2007	27,514	8,982	3,602	3,473	8,963	2,493
2008	38,897	9,470	5,793	8,353	11,469	3,813
2009	83,909	14,425	13,257	14,804	29,333	12,091
2010	67,940	12,608	10,473	11,968	22,817	10,074
2011	60,801	12,678	8,992	10,933	20,735	7,463
2012	63,581	12,387	9,802	11,691	21,944	7,758
2013	77,859	13,304	12,682	14,918	26,731	10,224
2014	85,057	15,471	12,957	16,843	28,463	11,323
2015	106,386	17,287	16,545	22,880	34,067	15,607
2016	111,849	18,771	17,546	23,233	36,768	15,531
2017.8	82,455	15,081	16,446	17,888	26,188	6,852

* 2004년부터 '건설업'을 '기타'에 포함(건설업 : 2002년 1,290건, 585억원 / 2003년 1,360건, 544억원)

3-1. 업종별 신용보증 잔액현황(건수)

(단위 : 건)

연월	합계	제조업	서비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2002	70,023	13,864		13,209	25,111	16,162
2003	89,347	15,968		17,006	33,577	20,688
2004	99,688	16,798	20,090	19,026	37,337	6,437
2005	136,228	21,613	26,312	27,688	50,401	10,214
2006	164,386	25,371	30,301	34,027	62,359	12,328
2007	195,808	28,662	35,813	41,466	73,017	16,850
2008	306,006	35,376	60,183	74,266	107,679	28,502
2009	660,367	57,755	120,167	150,873	231,241	100,331
2010	833,412	66,005	150,703	184,241	282,974	149,489
2011	835,802	66,643	151,135	186,542	283,265	148,217
2012	829,578	66,757	150,390	187,308	282,292	142,831
2013	837,659	67,044	153,324	189,312	286,079	141,900
2014	756,842	60,460	141,493	177,184	254,825	122,880
2015	833,213	64,326	157,991	203,436	276,196	131,264
2016	910,813	69,755	175,523	220,932	296,108	148,495
2017.8	967,268	74,382	192,400	235,595	310,380	154,511

* 2004년부터 '건설업'을 '기타'에 포함(건설업 : 2002년 1,290건, 585억원 / 2003년 1,360건, 544억원)

3-2. 업종별 신용보증 잔액현황(금액)

(단위 : 억원)

연월	합계	제조업	서비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2002	19,326	6,462		2,521	5,655	4,060
2003	23,123	6,754		3,317	7,563	4,792
2004	26,269	7,532	4,474	3,791	8,664	1,809
2005	34,133	9,969	5,482	5,031	11,191	2,461
2006	40,326	11,564	6,096	6,035	13,633	2,999
2007	45,867	12,577	6,947	7,033	15,567	3,743
2008	59,893	13,406	10,067	11,100	19,903	5,417
2009	111,954	18,655	18,632	21,691	38,351	14,624
2010	132,479	19,969	21,991	25,762	45,343	19,414
2011	136,088	20,642	22,326	26,935	46,847	19,338
2012	135,147	19,700	22,318	27,450	47,195	18,483
2013	142,719	20,184	23,846	29,518	50,015	19,156
2014	144,501	20,090	23,933	30,935	50,337	19,206
2015	162,423	21,117	27,215	37,120	55,007	21,964
2016	179,713	23,331	30,512	41,165	59,711	24,994
2017.8	189,857	24,342	33,200	44,172	62,432	25,711

* 2004년부터 '건설업'을 '기타'에 포함(건설업 : 2002년 1,290건, 585억원 / 2003년 1,360건, 544억원)

4.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공급현황

(단위 : 건, 억원)

연월	합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2	39,963	12,543	32,776	8,212	6,388	4,247	799	85
2003	49,849	14,839	43,424	10,530	5,929	3,805	496	504
2004	48,517	15,067	40,939	9,577	7,066	4,765	512	725
2005	79,929	21,574	71,192	14,875	8,057	5,672	680	1,027
2006	77,691	23,717	69,013	16,262	7,820	6,462	858	993
2007	94,582	27,514	85,936	19,585	7,512	6,694	1,134	1,235
2008	187,878	38,897	180,115	31,213	6,676	6,349	1,087	1,335
2009	467,173	83,909	457,720	74,823	8,110	7,570	1,343	1,515
2010	375,842	67,940	367,447	58,928	7,053	6,879	1,342	2,133
2011	256,434	60,801	247,698	51,385	6,816	7,391	1,920	2,026
2012	275,845	63,581	266,920	54,637	7,003	6,960	1,922	1,984
2013	350,945	77,859	342,062	68,926	6,938	7,011	1,945	1,922
2014	375,150	85,057	367,150	74,892	6,657	7,812	1,343	2,353
2015	448,844	106,386	441,160	94,755	6,609	9,330	1,075	2,301
2016	464,329	111,849	456,504	100,564	6,555	8,934	1,270	2,351
2017.8	338,904	82,455	332,965	73,992	4,973	6,933	966	1,530

5.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잔액현황

(단위 : 건, 억원)

연월	합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2	70,023	19,326	61,672	13,219	7,572	5,207	779	900
2003	89,347	23,123	80,486	17,300	8,193	5,072	668	751
2004	99,688	26,269	89,881	19,479	9,133	5,934	674	856
2005	136,228	34,133	124,400	25,492	10,973	7,482	855	1,160
2006	164,386	40,326	152,132	30,906	11,254	8,151	1,000	1,270
2007	195,808	45,867	183,528	35,924	11,093	8,541	1,187	1,402
2008	306,006	59,893	293,662	49,720	10,975	8,508	1,369	1,665
2009	660,367	111,954	645,940	99,923	12,794	10,174	1,633	1,858
2010	833,412	132,479	818,335	120,031	13,063	10,148	2,014	2,300
2011	835,802	136,088	820,049	123,007	13,488	10,624	2,265	2,456
2012	829,578	135,147	813,614	122,817	13,579	9,916	2,385	2,415
2013	837,660	142,719	821,714	130,428	13,458	9,825	2,488	2,466
2014	756,842	144,501	742,528	132,294	12,174	9,547	2,140	2,660
2015	833,213	162,423	818,806	150,216	12,312	9,751	2,095	2,456
2016	910,813	179,713	896,596	167,220	12,069	9,901	2,148	2,592
2017.8	967,268	189,857	952,906	177,153	12,258	10,211	2,104	2,493

6-1. 보증금액별 신용보증 공급현황(건수)

(단위 : 건)

연월	합계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2억원이하	2억원초과
2002	39,963		36,804	1,961	881	317
2003	49,849	44,239	1,688	2,293	1,231	398
2004	48,517	37,606	7,042	2,362	1,127	380
2005	79,929	64,620	10,293	2,814	1,613	589
2006	77,691	59,329	12,082	3,520	1,966	794
2007	94,582	73,349	13,799	4,166	2,440	828
2008	187,878	162,209	17,396	4,889	2,667	717
2009	467,173	426,292	31,587	5,620	2,972	702
2010	375,842	339,485	27,142	5,598	2,924	693
2011	256,434	215,830	29,897	6,419	3,302	986
2012	275,845	232,316	32,651	6,730	3,322	826
2013	350,944	302,984	35,755	7,860	3,472	873
2014	375,150	320,898	40,694	9,151	3,587	820
2015	448,844	380,563	52,419	11,118	3,825	919
2016	464,329	391,490	55,124	12,715	3,981	1,019
2017.8	338,904	282,830	42,530	9,942	2,972	630

6-2. 보증금액별 신용보증 공급현황(금액)

(단위 : 억원)

연월	합계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2억원이하	2억원초과
2002	12,543		8,475	1,698	1,435	935
2003	14,839	8,803	1,460	1,464	1,943	1,169
2004	15,067	7,210	2,938	1,937	1,809	1,173
2005	21,574	10,450	4,198	2,377	2,562	1,988
2006	23,717	10,158	4,894	2,781	3,089	2,796
2007	27,514	11,808	5,523	3,267	3,804	3,112
2008	38,897	21,125	6,778	3,736	4,105	3,153
2009	83,909	56,859	14,043	4,660	4,905	3,441
2010	67,940	42,850	11,818	4,640	4,840	3,792
2011	60,801	33,071	12,759	5,256	5,309	4,406
2012	63,581	35,611	13,774	5,380	5,267	3,549
2013	77,859	47,391	14,990	6,149	5,469	3,860
2014	85,057	49,955	16,954	6,986	5,662	5,500
2015	106,386	63,456	21,664	8,135	5,858	7,273
2016	111,849	65,997	22,960	9,356	6,159	7,377
2017.8	82,455	48,296	17,294	7,186	4,608	5,071

7-1. 보증금액별 신용보증 잔액현황(건수)

(단위 : 건)

연월	합계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2억원이하	2억원초과
2002	70,023	-	65,828	2,464	1,334	397
2003	89,347	76,856	8,398	2,497	1,261	335
2004	99,688	83,882	10,955	2,950	1,477	424
2005	136,228	114,143	15,660	3,704	2,068	653
2006	164,386	137,009	19,429	4,453	2,662	833
2007	195,808	163,699	22,587	5,376	3,237	909
2008	306,006	267,742	27,360	6,363	3,654	887
2009	660,367	604,646	42,881	7,714	4,206	920
2010	833,412	772,038	47,887	8,332	4,334	821
2011	835,802	768,746	52,515	9,071	4,436	1,034
2012	829,578	756,858	57,721	9,518	4,521	960
2013	837,659	758,480	62,716	10,806	4,647	1,010
2014	759,842	670,901	67,672	12,605	4,796	868
2015	833,213	731,537	81,177	14,928	4,781	790
2016	910,813	795,050	91,523	18,341	5,021	878
2017.8	967,268	833,800	104,844	22,045	5,586	993

7-2. 보증금액별 신용보증 잔액현황(금액)

(단위 : 억원)

연월	합계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2억원이하	2억원초과
2002	19,326	-	13,911	2,089	2,192	1,134
2003	23,124	14,461	3,618	2,071	2,019	954
2004	26,269	15,663	4,577	2,414	2,359	1,256
2005	34,133	19,381	6,383	2,970	3,279	2,120
2006	40,326	22,241	7,728	3,493	4,136	2,730
2007	45,867	24,767	8,846	4,177	4,997	3,080
2008	59,893	35,616	10,594	4,876	5,620	3,187
2009	111,954	77,186	18,093	6,195	6,729	3,751
2010	132,479	94,647	20,387	6,817	7,066	3,562
2011	136,088	95,248	22,121	7,351	7,164	4,204
2012	135,147	93,015	23,889	7,593	7,130	3,520
2013	142,719	97,481	25,798	8,405	7,244	3,791
2014	144,501	95,754	28,016	9,517	7,440	3,774
2015	162,423	107,646	32,625	10,792	7,269	4,091
2016	179,713	118,064	36,513	12,940	7,596	4,600
2017.8	189,857	122,722	39,651	14,695	8,143	4,646

8-1. 재단별 신용보증 공급건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1996	414	277	127	2	8			
1997	1,296	559	139	68	380	132	18	
1998	3,199	816	123	227	829	364	744	58
1999	14,059	3,000	629	795	2,716	1,421	2,443	1,707
2000	21,883	5,408	1,027	751	3,647	1,387	2,979	2,226
2001	31,635	9,881	1,978	994	3,455	1,479	3,262	2,221
2002	39,963	10,449	2,164	1,045	3,483	1,468	3,589	2,425
2003	49,849	12,033	2,314	1,487	3,839	1,594	4,124	3,582
2004	48,517	8,544	2,414	1,557	4,284	1,953	4,377	4,514
2005	79,929	11,740	4,024	2,200	5,305	2,179	6,082	5,564
2006	77,691	13,807	4,533	1,931	10,283	1,805	7,052	5,974
2007	94,582	15,158	5,082	1,706	9,692	1,942	9,067	7,142
2008	187,878	33,527	11,018	6,580	15,038	4,204	18,024	12,940
2009	467,173	86,048	26,048	17,672	29,498	11,732	45,734	30,940
2010	375,842	59,608	22,786	12,635	21,356	10,446	51,565	33,637
2011	256,434	30,721	18,319	8,676	13,623	6,180	43,659	26,362
2012	275,845	32,767	21,686	14,697	14,683	6,613	41,295	25,855
2013	350,945	44,479	27,558	15,975	18,782	9,391	43,797	29,413
2014	375,150	49,501	30,633	15,427	17,930	11,331	44,992	32,481
2015	448,844	60,412	35,046	16,448	21,427	13,181	51,984	32,521
2016	464,329	58,821	42,015	17,976	26,329	15,222	56,445	31,465
2017.8	338,904	41,905	33,630	12,314	21,624	10,442	42,813	20,288

8-1. 재단별 신용보증 공급건 현황(계속)

(단위 : 건)

충남	충북	강원	서울	울산	경북	전남	전북	제주	구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1996
									1997
38									1998
447	395	101	405						1999
825	837	469	2,082	99	146				2000
1,170	798	827	4,587	407	393	183			2001
1,391	1,248	2,220	7,948	873	1,163	497			2002
1,792	1,453	1,485	12,718	1,056	1,383	490	475	24	2003
2,182	1,571	1,514	11,820	919	1,247	725	504	392	2004
2,887	1,821	2,158	28,939	1,321	2,136	1,681	1,426	466	2005
3,105	1,983	3,090	15,679	1,654	2,344	2,244	1,338	869	2006
3,571	2,459	3,872	23,323	2,140	2,814	2,854	1,982	1,778	2007
8,461	4,824	9,064	40,809	3,550	7,548	6,082	3,955	2,254	2008
16,929	13,176	15,309	106,449	9,133	19,782	14,476	18,256	5,991	2009
16,128	10,899	11,560	67,565	8,734	14,539	14,425	13,264	6,695	2010
13,717	8,036	8,701	36,604	6,805	10,511	11,736	8,113	4,671	2011
14,648	8,732	9,963	38,972	8,396	11,245	12,953	8,679	4,661	2012
18,507	11,593	13,912	59,658	9,368	15,407	16,683	11,008	5,416	2013
21,477	12,932	17,134	54,739	10,671	16,928	18,474	14,604	5,896	2014
30,567	15,995	19,917	70,447	12,666	22,523	20,301	17,910	7,499	2015
35,668	15,849	20,779	56,608	14,213	23,922	20,713	20,641	7,663	2016
26,034	11,817	16,895	39,491	9,276	16,827	15,013	14,603	5,932	2017.8

8-2. 재단별 신용보증 공급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1996	438	295	136	2	5			
1997	1,031	445	165	67	260	79	15	
1998	2,020	663	122	156	481	180	349	23
1999	5,099	1,298	217	302	925	360	862	355
2000	8,058	1,918	334	300	1,153	341	1,023	395
2001	11,206	3,021	575	378	1,189	412	1,157	406
2002	12,543	3,121	597	359	1,244	371	1,273	482
2003	14,839	3,947	579	458	1,303	388	1,422	789
2004	15,067	3,739	568	432	1,389	495	1,388	948
2005	21,574	5,904	930	568	1,640	516	1,803	1,393
2006	23,717	6,930	1,013	486	2,354	419	2,166	1,476
2007	27,514	7,628	1,048	432	2,426	471	2,538	1,809
2008	38,897	10,018	1,927	958	3,189	695	3,546	2,543
2009	83,909	18,185	4,267	2,457	5,956	1,712	8,190	6,306
2010	67,940	15,301	3,653	1,771	4,464	1,483	8,365	6,328
2011	60,801	12,367	3,610	1,519	3,603	1,219	8,103	6,131
2012	63,581	12,333	4,285	2,086	3,724	1,276	8,095	6,110
2013	77,859	14,968	5,294	2,404	4,256	1,884	8,540	6,774
2014	85,057	18,894	5,898	2,448	4,284	2,326	9,054	7,024
2015	106,386	23,395	7,082	3,005	5,608	2,662	10,914	7,117
2016	111,849	23,872	8,492	3,568	7,496	3,212	12,289	6,890
2017.8	82,455	17,760	6,734	2,393	6,048	2,304	9,085	4,441

8-2. 재단별 신용보증 공급액 현황(계속)

(단위 : 억원)

충남	충북	강원	서울	울산	경북	전남	전북	제주	구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1996
									1997
46									1998
321	104	31	325						1999
484	210	213	1,567	54	67				2000
598	238	321	2,510	181	180	41			2001
667	334	748	2,609	300	330	109			2002
728	339	556	3,379	326	377	111	133	5	2003
893	349	572	3,179	310	358	201	158	91	2004
1,007	385	784	4,856	450	523	401	320	96	2005
1,162	440	995	4,047	614	629	500	256	230	2006
1,300	616	1,182	5,206	705	720	620	347	467	2007
1,887	825	1,662	7,557	824	1,277	923	536	531	2008
3,356	2,087	2,491	18,703	1,724	3,462	2,075	1,962	973	2009
2,896	1,745	1,859	11,915	1,575	2,292	1,852	1,454	988	2010
2,918	1,593	1,822	10,167	1,385	2,177	2,035	1,189	964	2011
3,051	1,714	2,035	10,208	1,640	2,428	2,183	1,370	1,042	2012
3,810	2,154	2,538	14,096	1,883	3,261	3,023	1,759	1,217	2013
4,432	2,205	2,966	12,134	2,403	3,852	3,691	2,105	1,343	2014
6,693	2,877	3,783	16,199	3,034	5,036	4,477	2,764	1,740	2015
7,796	2,904	4,078	12,416	3,620	5,205	4,585	3,520	1,906	2016
5,546	2,186	3,410	9,059	2,240	3,563	3,407	2,743	1,536	2017.8

9-1. 재단별 신용보증 잔존건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1996	410	273	127	2	8			
1997	1,369	552	271	66	335	127	18	
1998	3,391	960	200	248	711	444	732	58
1999	14,777	3,399	666	875	2,574	1,640	2,667	1,645
2000	29,946	8,174	1,501	1,263	4,358	2,442	4,177	3,127
2001	50,076	16,973	3,174	1,799	5,302	3,015	5,315	3,955
2002	70,023	23,516	4,595	2,039	5,852	3,264	6,125	4,558
2003	89,347	29,049	5,777	2,733	6,413	3,354	6,364	5,700
2004	99,688	27,456	6,389	3,359	7,024	3,712	6,845	7,116
2005	136,228	29,197	7,635	4,458	8,300	4,111	8,418	8,506
2006	164,386	33,304	9,496	5,301	13,924	4,160	9,943	9,508
2007	195,808	36,668	10,776	5,371	16,921	4,241	12,613	11,283
2008	306,006	56,398	16,340	9,767	23,954	6,573	21,484	16,731
2009	660,367	123,778	35,533	24,060	43,768	15,152	48,471	37,788
2010	833,412	153,915	46,311	31,157	52,081	20,851	58,640	47,149
2011	835,802	150,429	48,379	30,819	49,178	19,934	57,037	46,282
2012	829,578	145,225	51,101	33,892	45,010	19,088	54,147	44,427
2013	837,659	138,570	52,219	37,110	45,868	19,196	53,869	44,248
2014	756,842	122,257	49,308	36,179	38,410	19,204	53,366	44,253
2015	833,213	135,275	53,620	33,448	42,452	20,866	60,172	46,390
2016	910,813	151,576	60,546	34,729	49,079	24,208	66,340	50,114
2017.8	967,268	161,757	66,151	36,009	53,090	26,087	70,482	52,340

9-1. 재단별 신용보증 잔존건 현황(계속)

(단위 : 건)

충남	충북	강원	서울	울산	경북	전남	전북	제주	구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1996
									1997
38									1998
412	388	101	410						1999
1,001	1,073	471	2,115	98	146				2000
1,727	1,503	908	5,358	400	468	179			2001
2,408	1,850	2,506	10,370	906	1,413	621			2002
3,321	2,147	2,739	16,504	1,484	2,361	921	456	24	2003
4,194	2,366	2,846	20,774	1,964	3,055	1,348	843	397	2004
5,393	2,866	3,275	42,105	2,381	4,454	2,358	2,007	764	2005
6,500	3,512	4,250	48,993	2,480	5,504	3,337	2,930	1,244	2006
7,231	4,395	4,867	61,349	2,658	6,307	4,346	4,331	2,451	2007
12,049	7,481	10,673	90,378	3,983	11,514	7,778	7,077	3,826	2008
23,801	17,565	21,938	180,439	10,650	28,186	18,219	23,345	7,674	2009
33,032	23,866	28,036	217,776	14,436	37,458	25,341	31,816	11,547	2010
34,858	24,748	28,363	219,090	13,869	41,040	26,912	33,435	11,429	2011
35,315	24,683	27,805	218,803	12,951	43,721	27,854	34,157	11,399	2012
37,521	25,274	26,728	222,141	13,436	47,732	29,157	33,185	11,405	2013
38,903	25,677	25,800	172,078	14,811	44,439	30,965	29,710	11,482	2014
44,681	28,459	28,899	192,599	17,914	50,587	34,936	30,596	12,319	2015
50,653	31,710	30,387	201,324	20,518	54,919	38,684	32,651	13,375	2016
53,786	34,492	32,541	210,594	21,653	58,487	41,443	34,491	13,865	2017.8

9-2. 재단별 신용보증 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1996	433	290	136	2	5			
1997	1,101	442	272	63	233	77	15	
1998	2,248	794	209	173	428	234	341	23
1999	5,300	1,603	254	346	596	466	974	340
2000	10,114	2,840	431	430	1,270	574	1,354	553
2001	14,878	4,607	806	351	1,448	692	1,620	635
2002	19,326	5,897	1,134	602	1,603	757	1,849	771
2003	23,123	7,222	1,272	726	1,752	766	1,905	1,126
2004	26,269	7,815	1,301	833	1,917	852	2,033	1,491
2005	34,133	10,003	1,582	1,025	2,252	935	2,438	1,941
2006	40,326	11,470	1,895	1,131	3,095	906	2,902	2,250
2007	45,867	12,034	2,060	1,101	3,571	925	3,446	2,754
2008	59,893	14,332	2,824	1,568	4,507	1,190	4,433	3,488
2009	111,954	23,673	5,671	3,328	7,720	2,270	8,930	7,249
2010	132,479	27,991	6,869	4,081	8,696	2,860	10,147	8,301
2011	136,088	28,314	7,159	4,273	8,327	2,876	10,282	8,635
2012	135,147	27,277	7,315	4,359	7,733	2,963	10,157	8,753
2013	142,719	28,708	8,004	4,883	7,650	3,388	10,240	9,035
2014	144,501	30,006	8,631	5,173	7,328	3,695	10,249	8,986
2015	162,423	32,890	9,574	4,992	8,652	4,083	12,026	9,255
2016	179,713	36,355	10,853	5,642	10,671	4,781	13,630	9,647
2017.8	189,857	38,317	11,829	5,831	11,689	5,166	14,159	9,968

9-2. 재단별 신용보증 잔액 현황(계속)

(단위 : 억원)

충남	충북	강원	서울	울산	경북	전남	전북	제주	구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1996
									1997
46									1998
270	103	31	317						1999
533	251	212	1,547	53	67				2000
728	361	341	2,880	173	196	40			2001
896	442	810	3,740	323	370	133			2002
1,119	469	851	4,606	455	519	202	127	5	2003
1,342	505	875	5,405	601	630	337	241	91	2004
1,558	601	1,034	7,984	745	852	556	464	164	2005
1,786	738	1,286	9,326	850	1,065	745	575	305	2006
2,002	1,005	1,402	11,169	853	1,237	944	745	620	2007
2,528	1,430	2,099	15,381	934	1,929	1,323	1,021	907	2008
4,287	2,875	3,478	29,234	1,958	4,634	2,666	2,648	1,334	2009
5,405	3,583	3,944	34,680	2,316	5,392	3,198	3,305	1,713	2010
5,711	3,768	3,926	35,960	2,210	6,002	3,464	3,445	1,734	2011
5,928	3,839	3,880	34,925	2,256	6,367	3,879	3,622	1,895	2012
6,648	4,260	4,038	35,450	2,499	7,150	4,845	3,867	2,055	2013
7,437	4,519	4,150	31,744	3,035	7,584	5,907	3,778	2,278	2014
9,002	5,022	4,984	35,407	4,023	8,797	6,795	4,261	2,659	2015
10,408	5,689	5,404	36,709	4,835	9,294	7,747	5,010	3,038	2016
10,936	6,250	5,939	37,623	5,000	9,709	8,539	5,684	3,218	2017.8

부록 2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지점 일람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Korea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재 단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강원(6) www.gwsinbo.or.kr	본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45 (SC은행 3층)	033-260-0001 (033-260-0099)
	원주지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3층)	033-260-0050 (033-745-3297)
	강릉지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260-0060 (033-644-1351)
	속초지점	강원도 속초시 청학로 37 수광빌딩 (기업은행 4층)	033-260-0070 (033-638-9783)
	동해지점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50 (국민은행 2층)	033-260-0085 (033-534-1441)
	태백지점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88-1 (신한은행 2층)	033-260-0080 (033-554-0633)
경기(23) www.gcgf.or.kr	본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3층)	1577-5900 (031-259-7777)
	남부지역 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안양동, 농협3층)	031-468-1610 (031-468-1611)
	북부지역 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대송프라자 1101호	031-853-9850 (031-853-9848)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401호 경기 R&D센터	031-888-5454 (031-888-5466)
	의정부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3층	031-826-9092 (031-826-9086)
	성남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3층	031-709-7733 (031-703-9944)
	부천시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204동 302호 (약대동,부천테크노파크2단지)	032-328-7130 (032-328-7409)
	고양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2, 5층	031-968-7744 (031-968-0020)
	안산지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7, 3층 (신한은행)	031-482-8401 (031-482-8412)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7 농협평택지부 3층	031-653-8555 (031-653-8556)
	안양지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3층 농협3층(안양동)	031-387-3525 (031-387-3678)
	남양주시점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350번길 35 (평내동) 리치플러스빌딩 502호	031-559-8160 (031-559-8166)

재 단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경기(23) www.gcgf.or.kr	이천지점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241 우리은행 4층	031-635-2514 (031-635-8796)
	화성지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농협정프라자 4층	031-366-8070 (031-366-8070)
	용인지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중동) 골드프라자 A동 8층	031-285-8681 (031-285-8610)
	시흥지점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정왕동) 시흥비즈니스센터 12층	031-434-8797 (031-434-8798)
	김포지점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51 (사우동) 601호 제일메니컬센터빌딩 601호	031-997-1278 (031-997-1283)
	포천지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031-543-1737 (031-543-1739)
	파주지점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 98, 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 3층	031-942-7521 (031-942-7568)
	광주지점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212, 3층	031-767-7100 (031-767-4100)
	양주지점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3층	031-850-3800 (031-850-3820)
	동탄지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반송동) 드림프라자 1001호, 1002호	031-613-8777 (031-613-8144)
	광명지점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6 알렉스타워 9층 902호	02-2684-6092 (02-2684-6098)
경남(12) www.gnsinbo.or.kr	본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4층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1644-2900 (055-715-5130)
	창원지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1층 (창원컨벤션센터)	1644-2900 (055-715-5150)
	진주지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42, 3층(동성동)	1644-2900 (055-743-5888)
	양산지점	경남 양산시 중앙로 138, 3층(중부동)	1644-2900 (055-364-2185)
	마산지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 2층(창동)	1644-2900 (055-246-7260)
	거제지점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5, 3층(고현동)	1644-2900 (055-634-5805)
	김해지점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3층(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1644-2900 (055-338-2396)

재 단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경남(12) www.gnsin bo.or.kr	사천지점	경남 사천시 수남길 8, 2층(선구동)	1644-2900 (055-835-7484)
	통영지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3층(죽림리)	1644-2900 (055-902-8306)
	거창지점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35, 2층(중앙리)	1644-2900 (055-945-7704)
	창녕지점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18, 2층(말흘리)	1644-2900 (055-533-8070)
	고객지원 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65, 3층 (경남은행 명곡지점 3층)	1644-2900 (055-715-5320)
경북(11) www.gbsin bo.co.kr	본점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1층, 7층)	054-474-7100 (054-474-7104)
	포항지점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포항남금융센터 3층)	054-283-2730 (054-283-2704)
	경산지점	경북 경산시 원효로 15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3층)	063-811-0790 (053-811-0793)
	안동지점	경북 안동시 남문로 20 (대구은행 안동지점 3층)	054-854-3300 (054-854-3340)
	경주지점	경북 경주시 중앙로 32 (국민은행 경주지점 2층)	054-777-0140 (054-777-0139)
	영주지점	경북 영주시 번영로 149 (대구은행 영주지점 2층)	054-631-8300 (054-631-8302)
	김천지점	경북 김천시 김천로 154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 3층)	054-433-1300 (054-434-1310)
	영천지점	경북 영천시 시장로 45 (대구은행 영천영업부 3층)	054-336-6800 (054-336-6900)
	문경지점	경북 문경시 중앙로 141 (농협은행 문경시지부 3층)	054-556-7400 (054-556-7404)
	상주지점	경북 상주시 상산로 260 (농협은행 상주시지부 3층)	054-531-3500 (054-531-3504)
	울릉·독도 출장소	경북 울릉군 도동1길 9 (농협은행 울릉군지부 1층)	054-791-8994 (054-791-8995)

재 단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광주(6) www.kjsinbo.co.kr	본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경제고용진흥원 1층	062-950-0011 (062-950-0065)
	광산지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경제고용진흥원 1층	062-950-0050 (062-950-0063)
	동구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90 (금남로5가) 하나은행 광주지점 5층	062-236-0045 (062-236-2366)
	서구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14 (농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2층	062-362-0091 (062-363-0094)
	북구지점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41 (매곡동) 삼성디지털프라자 4층	062-576-0091 (062-576-3535)
	남구지점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86 (진월동) 우리은행 진월지점 2층	062-654-8055 (062-654-8059)
대구(7) www.ttg.co.kr	본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053-560-6300 (053-554-9905)
	죽전지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053-560-6300 (053-554-9936)
	유통단지점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1층	053-601-5255 (053-601-5176)
	범어동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동일산업빌딩 3층)	053-744-6500 (053-744-9077)
	월배지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09 (대구은행 월배영업부 2층)	053-639-4343 (053-639-4146)
	동지점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405, 2층	053-982-7500 (053-982-7515)
	중앙지점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8 (KEB하나은행 3층)	053-256-0300 (053-256-8998)
대전(4) www.sinbo.or.kr	본점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흥동, 대림빌딩 5층)	042-380-3800 (042-380-3898)
	서구유성센터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35, 3층 (둔산동, KEB하나은행둔산지점)	042-380-3806 (042-368-3860)
	북부지점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장동, 대전경제통상진흥원 3층)	042-380-3808 (042-368-3880)
	동부지점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1629-6, 2층 (홍도동, 부광빌딩)	042-380-3805 (042-345-0088)

재 단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부산(7) www.busanbo.or.kr	본점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5층	051-860-6600 (051-816-4551)
	서부산지점	부산시 사하구 낙동강로 1424 (하단동) 동원골드빌딩 4층	051-860-6730 (051-831-1180)
	동부산지점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07(우동) 신세계프라자빌딩 8층	051-860-6750 (051-755-6030)
	북부산지점	부산시 사상구 새벽로 223 (괘법동) 신한은행 3층	051-860-6700 (051-316-6788)
	중부산지점	부산시 중구 구덕로 87-1 (남포동6가) 하나은행 11층	051-860-6800 (051-242-6878)
	남부산지점	부산시 남구 수영로 234 (대연동) 부산은행 대연동지점 2층	051-860-6780 (051-611-8944)
	부산진지점	부산시 동구 범일로 92 부산은행 범일동지점 7층	051-860-6880 (051-714-2780)
서울(21) www.seoulshinbo.co.kr	본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15~18층	1577-6119 (02-3278-8111)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1577-6119 (02-3278-8166)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 (종로4가 11) IBK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1577-6119 (02-3278-8136)
	성수지점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성수동 2가 277-43) 성수IT종합센터1층	1577-6119 (02-3278-8142)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가락동 79-2) KEA (대한전기협회) 1층	1577-6119 (02-3278-8172)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30(불광동 304-2) 파레제페빌딩 302호	1577-6119 (02-3278-8146)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번지) 서울신용보증재단 6층	1577-6119 (02-3278-8134)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2층 (203호)	1577-6119 (02-3278-8168)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 (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1577-6119 (02-3278-8174)
	강서지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 대림자동차빌딩 8층	1577-6119 (02-3278-8170)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 국민은행 중화동지점 4층	1577-6119 (02-3278-8144)

재 단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서울(21) www.seoul shinbo.co. kr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1577-6119 (02-3278-8140)
	명동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2층	1577-6119 (02-3278-8148)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5층 503호	1577-6119 (02-3278-8164)
	이수지점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방배동 1751) 안석빌딩 8층	1577-6119 (02-3278-8176)
	신설동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신설동 117-5) 신상송빌딩 2층	1577-6119 (02-3278-8138)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1603호	1577-6119 (02-3278-8191)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방학동 691-7)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1577-6119 (02-3278-8188)
	사이버 중앙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15층	1577-6119 (02-3278-8196)
	자영업 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17층	1577-6119 (02-3278-8120)
	특수지원 센터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214~217호	1577-6119 (02-3278-8122)
울산(4) www.ulsan shinbo.co. kr	본점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052-289-2300 (053-289-8970)
	남울산지점	울산시 남구 봉월로 5 농협은행 울산공업탐지점 2층	052-283-0101 (052-266-7994)
	동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 2층	052-281-8100 (052-281-8105)
	서울산지점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 2층	052-285-8100 (052-285-8105)
인천(8) www.icsin bo.or.kr	본점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9층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032-260-1503 (032-260-1570)
	부평지점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3, 3층(부평동)	032-508-1954 (032-508-1960)
	남부지점	인천시 남구 경인로 341, 2층(주안동)	032-889-3611 (032-889-3615)
	서인천지점	인천시 서구 탁옥로 58, 3층 (영일빌딩)	032-569-0321 (032-569-0325)

재 단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인천(8) www.icsin bo.or.kr	계양지점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71, 4층 (임학동, 훼밀리빌딩)	032-542-3911 (032-542-3918)
	남동지점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9층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032-260-1500 (032-260-1571)
	중부지점	인천시 동구 송림로 98, 2층 (송림동)	032-766-8090 (032-766-8094)
	신용관리 지원단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9, 14층 (도화동, JST제물포스마트타운)	032-865-2704 (032-865-2723)
전남(11) www.jnsin bo.or.kr	본점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전남신보빌딩 3층	061-729-0600 (061-729-0608)
	순천지점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전남신보빌딩 3층	061-729-0620 (061-729-0609)
	목포지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061-285-0745 (061-285-0747)
	담양지점	전남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66 (광주은행 담양지점 2층)	061-383-9451 (061-729-0559)
	보성지점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91 (농협 보성군지부 3층)	061-853-1340 (061-729-0579)
	나주지점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46 (에스타워 4층)	061-333-9421 (061-729-0549)
	여수지점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55 (여수상공회의소 5층)	061-642-2471 (061-807-3613)
전남(11) www.jnsin bo.or.kr	해남지점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95, 3층	061-535-9333 (061-802-2305)
	영광지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94 (농협은행 영광군지부 3층)	061-353-7401 (061-729-0599)
	광양지점	전남 광양시 오류로 52 (기업은행 광양지점 2층)	061-794-3860 (061-794-3865)
	완도지점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3번길 24-1 (KT 완도지사 2층)	061-555-8800 (061-555-8805)
전북(5) www.jbcre dit.co.kr	본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동 140-11) 전주상공회의소 1층	063-230-3333 (062-230-3377)
	군산지점	전북 군산시 조촌안3길 20 (조촌동 844-11) 군산상공회의소 1층	063-452-0341 (063-452-0355)
	정읍지점	전북 정읍시 중앙1길 76 (수성동 588-1) 정읍새마을금고 2층	063-533-6411 (063-533-6416)

재 단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전북(5) www.jbcredit.co.kr	남원지점	전북 남원시 광한북로 63 (하정동 192-3)(NH농협은행 남원시지부 2층)	063-633-7611 (063-633-7618)
	익산지점	전북 익산시 무왕로 1063 (농협은행 익산시지부 2층)	063-838-9377 (063-838-9330)
제주(2) www.jejusinbo.co.kr	본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노형동, KT&G 제주본부)	064-758-5740 (064-758-5748)
	서귀포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0 (kt 신서귀포빌딩 1층)	064-733-8133 (064-733-8136)
충남(8) www.cnsinbo.co.kr	본점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041-530-3800 (041-530-3859)
	아산지점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남경제진흥원 1층)	041-530-3813 (041-541-9838)
	공주지점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5 (구 공주시청 별관 3층)	041-850-9100 (041-858-4704)
	서산지점	충남 서산시 고운로 168	041-671-5555 (041-668-8879)
	천안지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농협 천안시지부 6층)	041-559-3900 (041-559-3940)
	보령지점	충남 보령시 터미널길 29 (보령우체국 4층)	041-939-1900 (041-933-9879)
	논산지점	충남 논산시 중앙로 480번길 3 (국민은행 논산지점 3층)	041-730-0800 (041-730-0808)
	당진지점	충남 당진시 방절로 160-13 (농협은행 당진시지부 3층)	041-350-7500 (041-350-7599)
충북(4) www.cbsinbo.or.kr	본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중소기업진흥센터 5층)	043-249-5700 (043-237-0362)
	충주지점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00 (교현동) (농협은행 충주시지부 3층)	043-249-5760 (043-856-9064)
	남부지점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043-249-5780 (043-733-9714)
	제천지점	충북 제천시 풍양로 92 (명동) (농협은행 제천시지부 3층)	043-249-5790 (043-651-9104)
중앙회 www.koreg.or.kr	중앙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12~15층	042-480-4201 (042-715-5102)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02-2174-4011 (02-2174-4025)

- ☐ KOREG Research에 게재된 연구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이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 KOREG Research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인용규칙에 맞춰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책자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조사연구실(042-480-40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OREG Research

2017년 10월 제5권 1호 (통권5호)

발행일 | 2017년 10월 27일

발행인 | 김순철

발행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15층 조사연구실
TEL 042) 480 - 4024
FAX 042) 715 - 5224

인쇄인 | 해송그래픽스 : 042) 637 - 3030
